

인권정보자료실
R1.1.15

인권아루소식

제1647호 ~ 제1768호

합본 15호
(2000년 7월 ~ 12월)

인권아루소식

합본 15호

2000년
7월 ~ 12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5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2000년 9월

(제 1688호 - 제 1706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1일(금)

제 168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표류하는 정치권을 질타하며 기다려 온 숱한 과제들이 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 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여야 한다"며 "개원과 동시에 논의를 시작하여 회기 내에 폐지에 이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보법 폐제 분위기가 무르익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호조 뿐 아니라 지난 8월 25일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국보법 개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고, 30일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보법 대폭 개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은 "국보법 폐지가 '구호'에서 '현실'로 되는 역사적인 시기"라며 "개정에 그치는 우를 범치 않기 위해 국민 대중의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폐지 투쟁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특별대책위'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국회개원에 맞춰 1일 정오 국회 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대국회 투쟁 선포식'을 가진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매듭짓는 것도 16대 국회가 짊어질 주요 인권과제다.

지난 30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5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인권국가 실현'을, 그 구체적 목표로서 '정기국회 회기내 인권법 제정 추진'을 채택한 것으로 미루어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법무부가 민간기구(비정부기구) 형태의 약체 인권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인권법'(안)을 또다시 입법 예고함에 따라 국가기구로 설립할 것을 요구해온 민간단체와의 논란이 재연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단체들은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조차 좌초하지 않으려면 법무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의 곽노현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법무부가 인권위원회 설치를 주도하는 것은 금고털이범에게 금고 설계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는 인권위원회를 통제하려는 미련을 버리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독립적인 국가기구 형태의 인권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정권의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오는 5일과 6일에 걸친 대규모 토론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번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가 인권 실현의 주춧돌이 될 국가보안법 폐지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배경내)

만화사랑방

이동수



“우리 마을 그냥 두소!”

울산 핵발전소 건립 반대 상경 농성

울산 서생면 생존권 수호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 울산법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석환 울산대 교수) · 울산광역시
시구군의회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현덕 시의원) 회원 10여명
이 울산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9일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갔다.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대중적 공청회 한 번 없이 지난 98
년 울주군(군수 박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건설
계획 소식을 접했던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울주군은 산
업자원부(장관 손석환)에 철회 신청을 했지만 산자부는 건
설에 동의한 지주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건설에 동의한 지주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년 동안 서생면 주민 · 울산 시민 · 지
방 단체 의원들은 핵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40여
회에 달하는 집회, 청원서 제출 등을 해왔다. 그러나, 산
자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농성 중인 이상용(서생면 주민) 씨는 “농사꾼이 일도 못
하고 서울에 와서 농성을 해야 되나”며 “평범한 우리 마을
편히 좀 살아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서생면은 고리 핵발전소와 20km
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 농성은 정기 국회 개회 시기에
맞추어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심대섭)

●정보생 ● ◎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
임 (777-0643)에서는 9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명동성당
(우천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잘못된 수사제도와 관
행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393-4661)
에서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삶의 이야기와 국가보안법에 관
한 글들을 엮어 「비전향 장기수 백서」를 펴냈다.

<인권하루소식> 새단장합니다.

1. 화요일 게재되던 <주요 공판 안내>, 수요일 게재
되던 <새로 나온 책>, 목요일 게재되던 <행사와 동정>
을 <정보생>으로 통합하여 수시로 게재합니다.
2. <인권시평>의 표제가 필자의 실명을 사용한 <○○
의 인권이야기>로 바꿉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시
평의 집필을 맡아주실 새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정재숙(한겨레신문 기자)
이재승(국민대 법대 교수)
정주연(운동사회 내 거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 활동가 모임)
3. 인물 심층 취재 <사람을 찾아서>를 신설, 2주에
한번 게재합니다.
4. 국제기사는 토요일 신문에 집중 게재합니다.

‘관용과 다양성: 21세기를 위한 비전’

인류는 '2001년 반인종주의 유엔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다.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향적인 관점
을 제시하기 위해 '관용과 다양성: 21세기를 위한 비전'이라
는 제목의 선언을 최근 발표했다. 그 전문을 게재한다.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며 각 사회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포괄적인가? 비차별적인가?
우리 사회의 행동 규범은 세계인권선언에 각인된 원칙
들 위에 서있는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모든 종류의 불
관용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세기에도 이러한 불관
용은 존속하고 있으며, 그것은 '차이'에 대한 두려움,
'딴 것'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인 안전을 잃을 것'에 대
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의 두려움이란 본
래 제거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두려움에 의한 결과는
제거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인간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인
류 공통의 인성을 재확인하고, 과학적 사고와 실천의
변화를 약속한 놀라운 성취인 인간 계승으로 인해, 그
리고 인류가 인류 자신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는 비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인류'라는 진실은 자명해졌다.
'하나의 인류'는 인류의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모든 능력
을 일깨우며,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참여로 고양되어,
인간 정신을 완전히 행사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인류'는 21세기를 진정한 실현과 평화의 시
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가능성을
우리 자신에게 환기시켜야 한다. 인종과 문화의 '다양
성'이 인류의 변화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에 그러한 다양성이 상호 존중을 위한
잠재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인간 정신의 존속을
위해서는 인류 혼을 담은 위대한 전통간의 교환이야말로
최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다
양성은 '해택'이라기보단 '위협'으로 취급받아왔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그러한 '위협'은 인종적 경멸과 갈등,
배제, 차별과 불관용으로 표현되어왔다.

2001년 9월 남아공에서 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
국인 혐오 및 불관용에 반대하는 유엔세계대회'의 준비
는 반인종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만큼 성취되었는지를
숙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노예제로부터 유대인 학
살,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청소에 이르기까지 인종주의
의 공포는 피해자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가해자들에게는
타락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공포는 여전히 온갖 형태로
우리와 함께 있다. 이제 그 공포를 대면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우리는 정신과 마음의 전환을 강구할 것을 서
약한다. 우리가 모든 남성, 여성과 아동에게서 직시할
것은 하나의 인류에 속한 우리의 역동적인 연대에 의해
개인의 재능과 인간의 권리가 행사되는 삶이다.

- 메리 로빈슨, 넬슨 만델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2일(토)
제 168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국정원 익자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명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국가정보원의 손길이 고3인 청소년
에게까지 뻗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23일 박정훈 이
화 외고 교사를 연행하고, 박 교사가
민혁당의 고교사업 담당자로 학생들에
게 주체사상을 교육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급기야 박 교사의 집을 압수 수
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학생의 상담
편지를 문제삼아 편지를 쓴 최 아무개
양을 2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소환하
여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최 양의 편지는 '법대 진학을 바라는
집안 분위기와는 달리 자신은 선생님
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 사범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고민을 담은 일상적
인 상담편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최 양을 소환하기 전에 최
양의 부모를 만나 '조사를 받고 문제
를 털어 버려라'는 식의 출두 권유를
했고, 최 양 본인은 '선생님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나서겠다'며 동의한 것으
로 알려졌다. 따라서 부모와 본인의
동의를 있다면 국정원의 참고인 조사
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 양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
인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없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도
오금이 저릴 국정원 조사에서 사춘기
소녀가 홀로 받을 압박감은 상상하고
도 남을 일이다. 또한 국정원의 지금
까지의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박 교
사에 대한 기소 이유를 찾기 위한 감
압수사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
서 최 양에게서 어떤 진술이 나오든
이런 상황에서 나온 진술이 어떤 증거
능력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인권단체
들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의 김재
석 수석부지부장은 "아이까지 이용하
려는 무리한 수사에 교사로서 경악을
금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30여 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소위 민족민
주혁명당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
압 저지 대책위원회'는 "제자가 보낸
편지를 근거로 학생을 참고인으로 조
사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이 서둘러 증
거도 없이 박 교사를 연행하고 공소유

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무리하게 수사
를 확대하려는 것"이라 비난했다.

이석대 변호사는 "사춘기 소녀에 대
한 이런 식의 조사는 두고두고 국정원
의 수치지자 국정원을 괴롭히는 후유
증으로 남을 것"이라 꼬집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서
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피의자
인 아동에 대해서 "특히 그의 연령이
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불과한
최 양이 처한 상황은 이런 고려에서
너무도 벗어나 있다. (류은숙)

<논평> 장기수를 복으로 보내며

마음이 설레는 아침이다. 바로 오늘 아침 10시. 관문점에서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드라마가 펼쳐진다.

공공 얼어붙은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그들이 차디찬 감옥에서 움츠리고
있던 30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솔직히 그들의 존재조차 몰랐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바로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에 사람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
이 속에 땀으로 내던져진 그들이 시대의 아난이란 아난을 모조리 겪었을
것은 너무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죽음의 공포, 고문의 공포, 굶주림의 공
포...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수많은 동지들이 바로 곁에서
죽어갔고 그리고 그들은 백발과 병든 몸으로 살아남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의 무시와 박해 아래 놓여 있던 그들은 오늘 가장 극
적인 방식으로 남과 북 모든 동포 앞에 나선다. 분단선을 넘어 북녘으로 가
는 63명의 장기수들. 그들 개개인의 감회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지켜
보는 우리의 감격도 그에 못지 않다.

늙었다고 한다. 병들었다고도 한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민족의 밝
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는 오랜 박해를 묵묵히 견디는 동안 그들 내부에 쌓
인 경륜, 강인한 정신, 끈질긴 생명력에 저지 않은 기대를 걸어본다. 70을
넘긴 몸매 사람들의 기대를 모은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 삶의 뒤늦은 복
이 아닐까 한다.

당신들이 희망하듯 남과 북의 관계 앞에 구불구불 펼쳐진 길의 안내자가
되시라. 당신들이 체득한 반인권에 대한 후회를 남과 북 고루 나눠주시라.
당신들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길을,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모든 동포에게 보
여 주시라. 오늘 당신들이 걸어간 길이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 길이 될
날을 고대하며 당신들의 평안함을 기원한다.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제이 마크(Jay Mark) -

필리핀 국적의 제이 마크 씨는 홍콩에 있는 세계기독교학생연합 아태 지구(WSCF-AP)의 인권연대 담당자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크 씨는 오랫동안 이주 노동자들을 접하면서 가져온 생각들을 이 글에 담았다. 다소 긴 글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부분 발췌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와 그들이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좋은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는 바람만으로 치루는 고통을 알게 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이주 노동인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 헤어져 완전히 다른 문화와 환경의 불

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 온갖 굴욕과 차별, 정체성과 전문성의 상실을 감수하고 고용주에게 육체를 들으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 이 모든 일이 과연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고향에서 다달이 생활비와,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수입품들로 가득 찬 선물상자를 받고 기뻐하는 식구들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들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 등지에서 자신들끼리의 회합을 가지면서 웃음을 함께 나누지만 그 웃음 뒤에 있는 눈물과 슬픔을 감출 수는 없다. 10년이 넘도록 자식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들에게 자식들을 맡긴 채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보통 한국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다. 집에 보낼 한 푼의 달러를 위해 그들은 육체적·

정서적·정신적인 많은 희생을 견뎌야 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대다수는 하루에 열두 시간 이상 일하며 초과 수당을 받기 위해 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 이주노동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무런 복지혜택 없이 하루에 열다섯 시간씩 일한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이며, 여러 종류의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

지난 수 년 간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회사에 부도가 나거나 고용주가 도망쳐 버려 체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도 많았다. 한국의 여러 민간단체들은 구타당하거나

이 모든 일이 과연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산업재해도 장애인인 된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보고했다. 또한 매우 많은 노동자들은 건강악화, 고독,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주노동이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물으면 대다수는 '처음엔 좀 외로웠지만 곧 적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고향에 남아 있는, 또 타국에 있는 많은 부부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외도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들, 특히 아이들은 정서적 스트레스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받게 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모국에서의 곤경과 가난을 극복하고 싶은 것이다.

이주노동의 근본적 원인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열망보다는 노동자의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공생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약소국과 강대

국간의 불공평한 경제적 관계는 상품과 자본, 노동의 불평등한 교환을 낳았으며 결국 이는 세계를 강력한 자본주의 사회와 종속적인 저발전 사회로 분화시켰다.

필리핀의 경우 이같은 상황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오랜 식민통치 후 필리핀은 값싼 원료의 공급지이자 값비싼 완제품의 소비지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값싼 설당을 수출하고 값비싼 허쉬 초콜렛을 수입하는 것이다.

노동력 수입국은 또한 그들의 노동시장의 조건에 맞추어 이주노동을 허가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임금도 낮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근무한다. 또한 이들은 내국인과 차별되는 임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내국인이 9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는 7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만약 그 이주노동자가 훈련생 이라면 같은 노동을 하고도 더욱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할 능력과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필리핀 정부는 '우리는 산업화를 위한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산업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더 큰 위기로 느껴질 뿐이다.

필리핀의 경우 노동력의 수출은 제도화된 이주노동자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이주노동은 해외송금과 국내 실업률을 저하시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필리핀 해외거주노동자들의 송금은 1980년대 국민총생산의 가장 큰 항목을 구성했으며, 1998년에 해외 송금액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82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필리핀 정부의 노동수출정책은 해외거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정책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다만 이들을 '근대화의 역군'으로 치켜세우며 '노동력 수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은가?

(번역·정리: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5일(화)

제 169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사회권 현실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 위원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4일 오전 10시 30분(제네바 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회의장에서 사회권 위원회는 내년 25차 회기에서 검토될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사전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의 목적은 정부 대표와의 본 회의를 갖기 전에 해당국의 상황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모으고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데 있다. 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민간단체와 유엔 전문가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본 회의에 앞서 해당 정부 당국에 보낼 '질의 사항'을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이성훈 씨(파스 로마나 사무국장)가 참석하여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씨의 이날 발언은 민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사회진보연대 등 16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석달간 준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씨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봉쇄하고 사회권 보장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위기의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부의 편파적 집중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교육 및 보건 의료 분야의 재정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용구조의 변화, 소득분배현황 등 97년 이후 사회권 실현이 불균등해지는 상

황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질문공세, 위원들 높은 관심 반영

발표가 끝나자, 위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쏟아내 한국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최근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주류언론이나 정부 보고서와는 사뭇 다른 시각을 보여준 때문인지 위원들의 표정에는 고민의 빛이 역력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첫째, IMF의 구조조정이 한국에서 사회권의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정부의 대처방안이 인권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이었는가? 둘째, 경제가 호전되면서 사회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주장인데, 과연 그런가?

마지막에 인도의 조셉 라지쿠마 씨는 "IMF 경제 위기 하 한국 사회권의 상황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며 "사회권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이 과연 지속가능한(sustainable)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위원 중 한 명인 요르단의 사디 씨는 "여러 나라 보고서를 심의하다보니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사회권의 침해 및 퇴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해 한국 정부 보고서의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쟁

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위원들을 대표해서 모하메드 사미르 아메드 의장은 이번에 심의된 5개국 중 유일하게 민간단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직접 발표까지 한 한국의 민간단체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알렉산더 티코노 사회권 담당국장도 "한국 민간단체의 보고서는 위원회와 민간단체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호평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다음주에 쟁점사항에 관한 질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본 심의회기는 내년 4-5월로 잡혀있다. (이주영)

[해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2년 내에 최초보고서를 그후 매 5년마다 규약의 국내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다. 우리 정부는 지난 90년 이 규약을 비준하였으며 93년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심의되는 보고서는 제2차 보고서이다.

국정원 여고생 소환 불발

지난 2일 2시로 예정되었던 국정원 참고인 조사에 당사자인 최 아무개양이 출두 직전 마음을 바꿔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본지 9월 2일> 이화 외교의 한 교사는 "현재 최양 양의 기분이 매우 가라앉아 있으며 대화 자체를 힘들어한다"고 전해 이번 일로 최 양이 겪은 심적 괴로움을 짐작케 했다.

한편 민혁당 관련 대책위는 6일 오전 10시 30분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할 예정이다. (류은숙)

인권
시평

학교와 종교의 자유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

우리 나라에서 '종교'가 개입된 문제는 참으로 다루기가 까다롭다. 종교 문제를 다룬 영화 감독이나 소설가는 걸핏하면 '특정 종교 비하'의 혐의로 고발되기 십상이고, 종교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는 테러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권이나 언론도 종교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울뿐더러, 결국 표와 돈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악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공론화가 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기만 하다. 많은 미션 스쿨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온갖 비교육적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말이다.

수원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이사장의 어머니 기일에 전교 학생이 모여 추도 예배를 한다고 한다.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종교 과목의 성적을 깎는다고 한다. 사실 이런 것은 그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대부분의 미션 스쿨에서 이런 일은 아주 흔하게 벌어진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이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점수를 주지 않거나, 예수를 따르는 아이에게 부처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우리나라의 종교는 대개 매우 폐쇄적이어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이나 이해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이들은 심한 심적 갈등을 겪는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학교가 아이들로 하여금 점수를 위하여 자신의 신앙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것은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멋대로 부려먹는 방법일 것이다.

그들은 정말 이런 짓이 아이들을 그들이 그토록 헌신하고 싶어하는 종교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보기에 그들은 종교적 진리나 교육적 효과 같은 거창한 이득은 물론이고 신도수 확보라는 작은 이득도 얻지 못할 것 같다. 아이들은 종교의 위선을 알아차릴 것이고, 기회주의적 처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유치한 종교에 처를 떨 것이다. 말하자면 종교도 읽고 교육도 읽고 결국은 신도도 없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다. 정부는, 언론은, 시민단체는, 교사는 언제까지 이 문제에 침묵할 것인가?

소중한 인권의 기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14호 발간

2000년 1월~6월 인권상황 수록

가격: 1만원 (우송료 별도) 구입문의: 이창조 (02-741-5363)

주간인권호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1. 민족사에 남을 드라마, 비전향 장기수의 복행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거쳐 드디어 북녘에 가(9·2)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방송의 날 특집 '특별회견'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비전향 장기수를 돌려보낸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혀(9·3)

2. 국정원, 민혁당 사건 만들려면 여고생까지 필요?
잇따른 민혁당 사건관련 연행자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가혹행위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박정훈 이화외고 교사(8월 23일 연행)에 대한 기소 이유를 찾기 위해 박 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문제삼아 제자인 고 3 여고생 최 아무개양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해 충격 던져(9·1)

3. 할 일 많은 16대 국회, 개원 종소리와 함께 땀땀이?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위원회 설치 등 산적한 사안들을 놓고 9월 1일 개원한 16대 첫 정기국회, 선거비용 실사 개입 논란 등 여야 대치로 장기간 표류 예상

4. 온라인 운동에도 공권력, 진보넷 압수수색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지난 26일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과 관련해 7시간 여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온라인 상에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미리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 불러(8·29)

5. 사회보험 노조, 협상타결 바늘구멍
463명에 달하는 사회보험 노조원들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측이 파업중인 지역노조 노조의 일부 업무를 한국노총 소속의 직장노조 노조에 맡기기로 해, 노조무력화를 피하는 공단측과의 대치에 노·노 갈등 소지까지 얹혀(8·29) 두 달이 넘게 진행된 파업 중 손에 든 깃대가 지하철 교압선에 닿는 바람에 불의의 감전사한 사회보험 노조 고 최진욱 씨의 영결식 열려(8·30)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기동), 사회보험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공단본부에 있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혀(8·30)

6. 모든 아동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태어날 당시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 지난 1998년 6월 시행에 들어간 국적법 부칙 중 부모양계혈 통주의 소급적용을 개정법 시행 전 10년까지로 한정하는 조항에 대해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를 개정해야(8·3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6일(수)

제 169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5일 오후 1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서울 YMCA 회관에서 열렸다. 그간 정보통신부가 일방 추진해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율규제'임을 주장하는 정부와 '검열'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민간단체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 발제에 나선 경희대 유진식 교수는 "통신질서확립법은 국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던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국가가 개인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간섭하고자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잘라 말했다. 즉, ▲정보통신 기술 ▲사업자와 이용자 ▲정보통신의 내용 등 정보통신의 모든 것을 국가가 시시콜콜 간섭하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피스넷(PeaceNet)의 전용휘 사무처장은 "공청회를 거치면 그것으로 끝인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정통부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거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규제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또 전 사무처장은 "민간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해오던 일을 정부에서 가져가는 게 자율규제인가?"라고 반문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민간차원에서 순조롭게 해오던 인터넷 주소관리 업무를 정보통신부가 장악하려는 의도를 추궁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사이버공간에 대해 규제적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시민들

의 법 감정이나 과거 정부의 권력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의식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검열'의 의도는 없다?

이에 대해 정부측을 대표한 라봉하 정보통신부 정보이용과장은 "정부는 검열의 의도가 없으며, 다만 자율규제의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 해명했다. 또한 지난 7월 20일에 있었던 정통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여러 부분을 손질했으며, 특히 이용자 로그 보관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라 과장은 지난 달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을 겪으며 이 조항을 다시 삽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2부 '법률안과 인터넷 규제'에 대한 토론 기조 발제에 나선 박성호 홍익대 교수는 1997년 미연방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형사처벌 위협을 하면 사업자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정부의 조종이 가능한 사적검열의 두려움'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백육인 서울산업대교수는 "정보통신부가 시도하는 인터넷 내용 규제는 별 실효성이 없다"며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 나라에 무슨 큰 일이 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도 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경제 규제는 풀고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학부모와 교사들은 유해정보규제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스넷 관

계자는 "규제해야 한다는 것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반응했다.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여성단체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 작업을 한 정통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 "인터넷상 성폭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성단체까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가 사이버 공간을 검열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원칙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이광길]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

최근 정의선 복원 가능성이 점쳐지며 매설 지뢰의 양과 처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지뢰대책회의, 대표 서재일 목사)는 5일 오전 안국동 철학 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지뢰피해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지뢰대책회의는 유실지뢰의 숫자마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국방부의 안일한 지뢰대책을 질타하며, △정의선 공사지역의 지뢰종류와 정확한 매설량 △한국전 이후 지뢰에 의한 민간인 및 군인 피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 △서울 우면산 등 후방 지역의 지뢰 매설 실태 등을 공개하고 △대인지뢰금지 조약(오타와 조약) 남북한 동시 가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뢰대책회의는 주한 미국 전권대사에게 보내는 '한반도 대인지뢰정책에 관한 질의서'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비무장지대와 서울 사이에 1백만 개의 대인지뢰를 매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설 계획을 공개하고 이미 매설한 대인지뢰를 속히 제거할 것 등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미국측의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심대섭]

<시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지난 8월 24일 법무부가 인권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현장에서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다.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가 연 이번 토론회에는 인권활동가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70여 개 단체 2백여 명의 활동가들이 대거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잘못된 인권법안의 통과를 기필코 저지하자"는 민변 최영도 변호사의 인사발로 시작된 토론회 첫날에는 정부의 인권법안의 문제점(조용환 변호사), 공대위의 인권위원회 법안 설명(윤기원 변호사), 인권기구의 독립성(곽노현 교수)에 대한 기초 발제가 있는 후 12개 분야별 점검을 위한 세부토론회가 진행됐다.

법무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조용환(한국인권재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주요 감시기관에 국가정보원이 빠져있는 등 기본이 잘못된 법안이다.

24조, 28조(인권위원회 업무)의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조항의 경우 실제로 인권위에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데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38조(수사의 방법)의 '...인권위가 제출한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사항인 경우 또는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사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은...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어떻게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감시

할 수 있겠느냐.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 이제 법무부의 손은 떠났다
곽노현(공대위 상임공동집행위원장, 방송대 교수):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법무부에게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이제 김대중 정권은 인권위원회를 제 모습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의 조직적인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왜곡되고 굴절된 인권위원회를 만들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98년 10월경 공대위가 내놓은 법안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없을뿐더러 무리하거나 이상적인 것이 없는 최소한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서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운 법무부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로를 검증하자고 제안한다. 여기서 법무부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여성, 인권기구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역할
남인순(한국여성전화연합 사무총장):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현행 법률에 의거해서 우선 처벌하되, 기존 법률이나 규정이 없을 때와 국가기관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들을 인권기구가 다뤄야한다. 여성 인권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에서의 인권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영림(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여성문제의 경우 인권기구가 국가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하면서 차별이나 평등의 개념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해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한다. 한국사회의 관료현실에서 국가기구가 되지 않고 올바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인가란 의문점이 든다. 독립성은 여성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군대, 폐쇄집단의 빙장을 열어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군의 폐쇄적 속성을 극복할 재 수사 근거의 명확한 확보가 절실하다. 군대의 경우 조사작업을 방해하거나 수사 자료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무부안으로는 근본적으로 군대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해법 법무부가 쥐고 있다
이금연(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이주노동자에게 국제조약이나 한국의 노동법을 해설하고 교육을 시키는 일은 법무부의 역할이며, 법무부 산하의 난민수용소 등의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일상적이다. 독립적이지 않은 법인이구가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교도소, 시정명령권 주어지자
이승호(건국대 교수): 인권기구가 교도소 등의 국가기구에 접근할 때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조사한 후 시정을 권고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현재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관행 및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시정명령권을 주어야 현실적인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형사피의자, 장애, 과거청산, 어린이·청소년 등의 부문에서 각 부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기구를 통한 대안을 찾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6일에는 프라이버시, 환경, 성폭력, 매매춘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후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과 행동계획 및 결의서 채택 등이 이어진다.

(기명문)

●정보생●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2610-4156) 창립대회가 7일(목) 오후 1시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민혁당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3273-2893)에서는 6일(수) 오후 2시 내국동 국정원 앞에서 불법·가혹수사에 대한 범국민규탄대회를 갖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7일(목)
제 169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창간 7주년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재다짐

93년 9월 7일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창간사와 함께 출발한 <인권하루소식>이 어느새 창간 7주년을 맞았습니다. 팩스 신문으로 시작해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독자들을 만나 뵙는 오늘날까지 많은 분들의 격려와 책적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한 두 명을 넘지 못한 기자들의 부족함을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매워 주셨고, 꾸준한 제보와 취재 협조를 해주신 단체와 개인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창간사에 담긴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을 위한 '쓴 소리' 모음

◎ 일간으로 7년 동안 났더니 사랑방 사람들이 징글징글 하다. 제도권 언론과의 경쟁력이란 점에서 '객관적 사실'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실제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등은 되돌아 봐야한다.

사실을 알리려는 치열한 자세, 사실에 접근하기 위한 치열한 취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욕이 앞서고 목적의식의 순수함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다. 기자의 훈련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제보에 기초해서 기사를 쓰더라도 <인권하루소식>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녹여서 쓰길 바란다. 오랫동안 취재해서 쓴 기사는 빛이 난다. 하나의 사건을 쓰더라도 공력을 더 들이길 바란다. 예를 들어 노동관련 사건에서 구체적사안을 짚는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보이나 선도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한 사건에 대해 끈질기게 묻고 늘어지지 못한다. 즉, 후속기사를 쓰지 않는다. 그냥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우리는 참다운 자유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진실을 찾기 위해 본질을 파헤침에도 두려움이 없다. 뜨거운 연대와 애정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울 것이며,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의 필봉을 더욱 날선 칼날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그 '시린 칼날'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가차없이 내리칠 것이다.

- 1993년 9월 7일 창간사 중에서 -

다.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인권하루소식>만의 생생한 기사가 필요하다. 인권단체에서 내는 신문이라기보다는 기존 언론사의 외형을 따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고상만(반부패 국민연대 국민신문고 국장)

◎주장이 약하다. 하루소식의 모든 기사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모순 등을 다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전달 기능의 비중이 많은데 비해 분석과 주장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다. 사실 기존 신문들만 보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사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에 비교해 볼 때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그와 같은 성격의 난이 적다. 정종권(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국장)

◎하루소식이 다루는 인권이 대체로 사회적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분류된 공간의 일들이 중심이 되다보니 여성들처럼 일상공간에서 무수히 당하는

언어적, 생활 습관적, 문화적 인권침해를 알리고 변화시키는 데는 좀 힘들지 않은가. 정주연(운동사회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 활동가 모임)

◎홈페이지의 검색 서비스가 강화됐으면 좋겠다. 보통 일간지처럼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라 분명한 입장이 표현됐으면 좋겠다. 김석한(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권 위원회)

◎하나의 사안을 더 깊숙이 다뤘으면 좋겠다. 후속기사를 쟁쟁주길 바란다. 박경석(노동장애인학교 교장)

◎인권신문이라고 해서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찰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인권침해사건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선진국을 지향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도 다뤄졌으면 한다. 이현준(대학생)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무감각한 인권의식, 잘못된 인권의식을 꼬집고 공론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통해 인권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김철준(변호사)

◎가끔 보면 기사에서 '적나라'하고 거친 표현들이 발견되는데 순수 한글인가 의심이 갈 때가 있다. 단어 선택에 유의해 줬으면 한다. 전선희(주부)

◎이메일로 받아보는 독자다. 배달 시간이 들쭉날쭉하다. 행사를 예고할 때 너무 촉박하게 알려줘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때늦은 정보가 될 때가 있다. 세심함의 부족이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박신혜(교사)

◎출근과 함께 제일 먼저 찾아 읽는 것이 하루소식이다. 다양한 변화와 변신을 하더라도 진보적 인권운동의 기초 위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김영옥(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일찍 죽지 않으려면 밤 좀 새지 마십시오. 곽노현(방송대 교수)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전국에서 모여든 70여 개 단체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대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5일부터 1박 2

일에 걸친 일정을 통해 군 폭력, 여성, 형사피의자 등 12개 주제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분야에서 '인권위원회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법무부의 인권법(안) 반대 행동계획에 대한 참가자 전원 토론을 거쳐 결의문을 채택, '왜곡되거나 중속된 모습의 인권위원회는 단연코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백만의 원혼이 한반도의 남녘을 떠돌고 있다. 제주, 문경, 노근리, 지리산 자락 아니 전국 도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무리 죽음을 당했다. 공비와 내통했다는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의 사슬아래 신음하며 이름 없는 유골을 모으던 유족들과 학계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7일 내딛는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www.genocide.or.kr)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사무처장을 만났다.

■ '한국전쟁 전후'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건가, 개인간의 살해도 포함되는가?

제주 4·3부터 종전직후까지 벌어진 학살을 말한다. 사적 영역의 살해는 대부분은 무력이라는 국가기구를 등에 업었지만,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 한해 다룰 수 있다고 본다.

■ '노근리' 경우처럼 미군에 의한 학살문제는 어떤가?

당연히 다루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 한국전쟁 후 반세기가 다 돼 간다. 왜 지금 당시 민간인 학살이 문제가 되는가?

4·19 후 민간인 학살, 김구 피살의혹 등이 언론에 매일 보도된 적이 있다. 이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특위가 구성됐으나, 5·16 쿠데타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군사정권 퇴진 후 어느 정도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거창, 제주4·3관련 특별법 제정에만 그쳤다. 최근 정부가 '해원사업'을 계획했으나 오히려 학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려고 해 유족과 살아남은 자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렸다.

■ 4·19 후에는 왜 잠잠했다고 생각하는가?

5·16 쿠데타 후 유족들의 문제제기를 빨갱이 운동으로 몰아 부치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겠는가!

■ 국방부의 해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군 입장에서 이 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당국이 잘 알고 있다. 전쟁의 이름아래 자행된 학살에서 군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원사업이라고 형식적으로 내놓기는 하되 진상조사는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기사 3면 상자로 이어짐

결의문의 주된 내용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의 법인 기구가 아니라 독립 국가 기관으로서 설립되어야 만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현장경험에 입각하여 진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만큼 그 임명절차는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인권위원회에 면책특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입법청원, 의원입법 추진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적극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도한 곽노현(공대위상임공동집행위원장) 방송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 모인 인권활동가들은 법무부가 말하는 일부인권단체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권단체들"이라며 "시민사회가 이처럼 심사숙고한 법안을 법무부가 무시하고 기존의 인권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강력한 힘을 부른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기명문)

걸은 반듯, 속은 굽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지난 6월 16일 파업 돌입 이후 현재까지 90여 일째 파업중인 이랜드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 왔는가?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가 김윤자 교수 등 6명의 노동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이랜드 진상조사위원회'는 6일 이랜드 그룹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노사 양측을 분주히 오가며 관련자료를 검토한 이번 진상조사단 위원장인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탈세 문제도 적고 사회봉사를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는 등 외관상 반듯한 기업이나 유독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굽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몸은 21세기 있으나 머리로는 19세기적 사고를

☞기사 3면으로 이어짐

☞기사 2면 상자에서 이어짐

■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학살됐다고 생각하는가?

4·19 직후 국회특위 구성 전후에 집계로는 대략 34곳, 113만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어디지역 보도연맹 몇 몇 하는 식으로 집계한 것이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른다.

■ 정부기록도 많이 소멸된 것으로 안다.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민간인 학살지도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데 21세기에는 반문명적 범죄와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범국민위원회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사실조사를 벌여야 한다. 과거의 반인권 행위에 대해 전국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거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방방곡곡에서 인권운동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또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4·19 혁명 후 구성된 특위의 전례가 있는 만큼 가능하리라고 본다.

■ 진상규명은 군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혀 보수파의 입지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을 여기서 차단해야 새로운 형태의 재생산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반인권적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세계적인 일이다.

■ 방대한 규모의 운동이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피해자와 연구자들이 문제를 던졌으므로 많은 인권사회단체에서 여기에 참가하기를 바란다. 피해자, 연구자, 인권단체3자가 결합할 때 이 운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는 7일 오후 1시 기독교 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한 후 오후 3시 여의도 동아일보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연다. (심보선)

☞기사 2면에서 이어짐

종업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말로 이랜드 그룹의 문제를 집약했다.

박 소장의 표현대로 이랜드 그룹(회장 박성수)은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기업이라며 투명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노조 설립 이후 줄곧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음이 드러났다.

불법 파견노동 판처

우선 전체 그룹 노동자 2480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750여명에 이른다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위장도급을 통하여 불법파견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이랜드의 부곡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사원들은 시간당 2천원의 임금(월 5십만6천원)을 받으며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왔고,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도급(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작업은 실정법

상 허용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데도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계속해왔고 실제로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부분에 대해 회사측은 합법적인 업무위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입증 자료의 제출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단체협약 무시

노조활동 탄압으로 대표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이랜드 사측의 입장은 '노조 불인정'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개인별 성향 파악과 노조원 탈퇴 압력행사, 부당해고 등이 집요하게 이루어져 왔다. 장기간 파업의 주된 이유도 사측이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데 있다. 지난 97년 '그룹' 차원에서 맺은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측은 당시 맺은 협약에 근거하여 그룹차원의 노사 '단일교섭'을 요구하는데 반해, 회사는 노동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한 채 '별도 법인별' 개별교섭을 고수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행위를 단체협약위반이자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성희롱 불감증 또 한번 확인

특히 이번 조사가 던진 파문은 서비스 교육을 빙자해 이루어진 성희롱에 있다. 예초 '비정규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불거져 나온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측 관계자들도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라며 고개를 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사측은 올 5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각각 1박 2일의 일정으로 군부대 교육을 진행했다. 이때 이랜드 사목을 지낸 적이 있는 군목과 인솔자인 관리직 사원들이 "군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다", "그냥 인사만 하지 말고 포옹도 꼭 하여라", "음식을 먹여 주어야", "안아 주어야"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심지어는 인솔자였던 지점장이 "다음 번에는 모두 짚고 싱싱한 야가씨들로만 뽑아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회사측이 성희롱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자 회사측은 '뭘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야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사측의 무감각뿐만 아니라 평소 노동자를 '대상화'시킨 문화에 젖어있음을 보여주는 씩씩한 사례이다. 이후 비정규 공대위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단일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 △해의 체류 중인 박성수 회장이 빨리 귀국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협상에 나설 것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무더기 징징계 조치를 내린 것을 철회하고 원상 회복할 것 △불법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실정법대로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 △비정규직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에 임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였다. 아울러 노조측에 대해서도 사용자 비방과 회사 혐오 표현을 자제하고 교섭 분위기를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8일(금)

제 169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아이 지올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지난 5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
인여성노동자상담소(회장 김윤옥, 상
담소)는 연예인비자(E-6비자)로 취업
한 필리핀 여성노동자가 임신으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게 되자 중절수술
을 강요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유
니버설 프로모션 고재현 사장을 동대
문경찰서에 고소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필리핀인 신디(27,
가명) 씨는 현재 임신 7개월이며, 병
원진단서에 따르면 혈액 적혈구 수치
가 정상인의 절반도 되지 않아 아이와
산모 모두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
졌다.

상담소 고동실 간사에 따르면, 신디
씨는 98년 필리핀에서 만난 한국인 남
성과 현지 결혼한 뒤 E-6비자로 입국
해 유흥업소 가수로 일해오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일을 그만 두고 아이

를 낳으려 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계
약 위약금 2백만 원을 물든가 아니면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강제출
국 시키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았으
며, 이에 신디 씨의 남편이 올해 8월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 혼인에 따른
비자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등
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상담소를 찾은 고소인의 의뢰
로 고 간사 등이 유니버설측을 방문해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고
사장은 2백만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만
을 반복하다 급기야 위임자에게까지
폭언을 퍼부었고, 상담소측이 고소장
을 접수한 당일 오전 고사장과 몇몇
직원들은 국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
졌다.

고동실 간사는 이런 일이 “E-6 비자

소지자에게는 지극히 일반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주노동을 전담하는 에이전시
에서부터 시작된다. E-6비자 취업
을 전담하는 에이전시는 입국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해 버린다. 경찰도 “95% 정도가
그렇다. (이는) 불법이다”고 인정 하
면서도 관행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형편이다.

E-6비자 취업자는 6개월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1회에 한해 연
장이 가능하다. 신디 씨의 경우 99년
11월로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측이 노
동을 강요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
음에도 신디 씨의 동의도 얻지 않고
계약 기간을 연장해 부당 노동을 강요
했다.

또한 한국말을 못하는 약점을 이용
해 과도한 위약금과 소개비를 책정하
고 당사자 서명도 없는 계약서를 작성
해 문제가 생기면 협박의 근거로 사용
한다는 것이다.

신디 씨의 경우 위약금은 2천 달러
였고 올해 7월 M호텔에서 받은 임금
110만 원중 45만원을 소개비로 뜯겼
으며, 계약서는 본 적도 없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에이전시 등록 신고
를 받는 문화관광부는 감독권이 없다
며 발을 빼고, 출입국 관리소는 외국
인등록증을 찾아줄 생각을 하기보다는
회사측과 합의할 것만을 종용했다.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
임”의 정귀순 대표는 “관리, 감독,
보호 조치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E-6 비자 발급은 대책 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대책 논의 과정
에서도 E-6 여성 이주노동자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
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담소는 신디 씨의 고소건과
아울러 유니버설측의 부당노동행위 부
분을 노동부에 제소할 방침이다. (상
담문의 708-4370) (이광길)

만화사랑방



수배 노동자, 양심수

“보름달아 파작수지 마렵... 네 미소가 두렵구나~!”

이동수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산재 인정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따돌림
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산
재 신청 반려와 기각, 제심사 청구 끝
에 지난 7월 29일 산재인정을 받은 사
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의 주인공인 정국정(37) 씨는
LG전자에서 11년간 컴퓨터 엔지니어

로 근무해오던 중 지난해부터 회사 내
에서 조직적인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를
겪게 된 정씨가 낸 산재신청은 번번이
반려되다가 결국 올 5월 기각되었다. <관
련기사 본지 6월 2일>

이에 정씨는 지난 7월 5일 제심사를

매향리에 처음 가보았다

그 많던 집회에도 가보지 못한 매향리, 기사로만 보던 매향리, 그 매향리
에 집회 없는 날을 골라서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6일 정오 매향리를 찾았
다. 어느 농촌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벼가 익어 가는 들판을 한가로이
훑던 눈이 어울리지 않게 늘어진 철조망에 닿는 순간 번쩍 뜬다. 폭격장
이다! 버스에서 내려 ‘미군 나빠!’라는 글귀가 쓰인 매향리 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만규, 주민 대책위) 사무소로 향했다.

“황색기가 걸렸어. 좀 있다 싸대쟁지” 전만규 위원장이 옥상에서 고추를 말
리다가 맞이한다. “종합 대책 후에도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비행기는 떠나
니고, 기총 사격도 계속하고” 지난 8월 18일 국방부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육상 사격장에 대한 기총 사격을 중지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해상에 대한
사격을 계속한다는 거였다.

잠시 후 2대의 비행기가 공중을 순회하는가 싶더니, 매향리 코 앞의 작은
섬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인도, 농섬이다. “지
섬에 하도 총을 많이 쏘아서 크기가 3분의 1로 줄었다니까” 미군이 유일하게
인정한 매향리 희생자도 농섬 근처에서 사망했다. 임신 중인 아낙이었다.
주민 대책위는 지금까지 폭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12명
이라고 밝힌다.

전만규 씨를 따라 들어간 사무소. 이상하게도 분이 아닌 열 창문으로 들어
간다. “경찰이 건물 주인에게 계고장을 보내 정문을 막아버려서” 원래 창고
용도였던 건물을 불법전용을 했다는 거다. 6년 동안 쓰이던 사무소가 폐쇄
된 지 사흘째. “경찰이나 미군이나 다른 게 없지?” 라는 그의 물음 속엔 서
글픔이 고여 있다.

“8월 말, 비가 많이 와서 폭격장 벼가 모조리 쓰러졌거든요. 그래도 땅 주
인이 일으키려 들어가질 못해요.” “미군도 국방부도 믿지 못해요. 13년 동안
‘해준다, 해준다’ 하고 실제로 해준 게 없거든요.” 국방부의 종합 대책에 대
한 불만은 연속극처럼 이어진다. “당국은 소음문제만 거론해요.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닌데.” 사격장이 폐쇄되고, 농민들과 어부들이 땅과 어장을 찾
을 때야 비로소 매향리의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어느
덧 해는 떨어지고, 밀레니엄 정성화담 소식을 전하는 뉴스도 끝났다.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린다. “파과과 광-, 우우우-웅” 밤 10시에 난
소리다. “F-16이구나” 엔진 소리만으로 비행기를 구별할 줄 아나보다. “반드
시 저 사격장은 없애버려야 해.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전 씨의 아들 국이
가 갯벌일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다 소파에 잠들어 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국이가 잠이 깨어 “아빠! 이상한 꿈을 꿴어요. 우
리 마을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전쟁놀이를 했어요. 근데 왜 판 데도 아니고 우
리 마을일까 꿈속에서도 이상했어요”라고 재잘대지 않을까라는... (심태섭)

청구했고, 같은 달 29일 산재인정을
받게 되었다. 산재심사위원회는 “사실
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청
구인은 99년 3월 23일 내근적으로 발
령되면서 대기 발령 형태로 고유 업무
가 주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상사와
의 갈등으로 인해 이메일 ID, 책상
및 의자, 개인 사물함 등이 회수된 사
실, 지속적으로 퇴직을 종용받은 사
실, 상사가 참가에 서서 근무하게 한
사실, 사무실에서 상사가 먹살을 붙잡
고 밀어붙이는 등 청구인이 상해를 입
은 사실, 이메일을 통한 왕따 지침으
로 인하여 직원들로부터 소외된 사실
등 청구인이 업무 또는 직장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다”
면서 “정씨의 적응장애·우울장애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판단된다”는 취지
의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주영미 산업안전부장은
“신체 장애가 아닌 정신적 문제로 산
재 신청을 해본 예는 거의 없다”며
“법은 관련 규정이 있으나 안될 게 뻔
하니까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정 씨의 사례가 정신적 상해도도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노동자의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류은숙)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지난 4일 기획예산처가 2001년도 정
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보장
예산을 동결 및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
회단체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기초생활보장 및 실업대책 예산에서
찾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제위기 상
황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노동자·서
민을 위한 사회보장예산의 대폭 확충”
을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7일 민주당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2001년 본격적 실사를 앞
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예
산 확충 ▲자활대상자에게 지급될 급여의
확보와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도
입 ▲예산확충을 통한 공공청출정책 도입
등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명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9일(토)

제 169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장애인 실업대책 세우라”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장 기습 시위

장애인 실업자 연대 등 3개 장애인 단체 회원 5십여 명이 8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호진 노동부 장관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일제히 피켓을 펼쳐들고 지난 8월 30일 실업을 비판하여 자살한 고 이현규 씨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노동부 장관과의 약속 면담을 통해 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100인 이하 기업에 5%의 장애인 채용'으로 바꿀 것과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위 참가자 중의 한사람인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의 박경석 교장은 "일반인들의 실업률이 3.6%인데 반해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의 실업률은 27%에 이른다"며 "장애인 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실업 문제는 요원한 과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씨 죽음, 자살이 아닌 타살이다

한편,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장애인 고 이현규 씨의 죽음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우리 사회에 의한 '타살'이라고 말한다.

지난 8월 30일 지하철 5호선 잠안평역에서 휠체어를 탄 채 전동차에 뛰어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현규 씨의 죽음은 짙막하게 일간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지나갔다.

뇌성마비 1급의 중증 장애인 이었던

터에서 좌절하다가 최근에 면접까지 통과했다. 첫 출근에 대비해 양복과 구두를 새로 장만하기까지 한 이 씨를 회사는 결국 거부했다. 이를 절망한 끝에 자살을 선택한 이 씨의 죽음에 대한 장애인계의 안타까움과 분노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기명문)

▶ '선생님 사랑해요', 그 이면의 이야기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국정원으로 연행되었다.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것이 이화 외고 박정훈 교사에게 걸린 주요 혐의다.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움직임을 뒤집어 보려는 수구세력의 고심에 찬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국민의 '안보불감증'에 빨간 신호등을 켜기 위해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연행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일까? 설령 그가 무혐의로 석방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손해날 건 없다. "현직 교사가 버젓이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칠 수 있는 마당에 국가보안법 개폐가 웬말이냐"라는 위기감을 퍼뜨리는 데 성공하는 셈이니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나리오 밑바닥에 깔려있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청소년 관에 대한 염려이다. 아이들은 무조건 교사의 의도대로 조종되는 판단력이 없는 존재라는 인식, 교사가 하는 말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인식, 그러하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독버섯처럼 존재하는 '빨갱이'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연일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라며 박 교사의 석방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염려하고 제재를 가하는 학교측의 태도에도 여지없이 이러한 인식은 깔려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학교측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일, 명동성당 들머리는 교복을 입은 채 선생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3백 여명의 학생들로 가득 메워졌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학생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이 위축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는 묻고자 한다. 학교가 과연 '아이들 보호'를 앞세워 아이들의 집회 참석 여부를 허용하고 말고 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명백하고도 현재 하는 위협'도 없이 헌법과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가?

박 교사가 연행된 사실 그 자체와 그리고 이후 밝혀진 일련의 사태로부터 학생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교장이나 교사, 그 누구에 의해서도 자의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진실을 확인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기고〉 부당착취와 취업 방해에 맞선 두 명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원청 노동자들은 자기들도 하인이면서 우리를 노예 취급합니다."

부당 착취와 취업방해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김승태, 유창식 씨는 그렇게 말했다. 9년에 67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대우조선은 생존의 전장이자,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권탄압이다. 그 중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은 가장 어렵고 그늘진 섬을 이룬다.

"조선소가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긴 해도, 이 곳이 아니면 별 마땅한 생존의 대안을 찾지 어려운 평범한 노동자였던 이들이 전선에 서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차, 월차, 연차, 퇴직금도 없이 지시급 8,300원을 받고 일하던 이들은, 지난 6월 5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당제 전환, 회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퇴사, 3일 무단 결근시 해고 등 너무나 부당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강제하자 퇴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소영기업은 퇴사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이들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동료들은 이들이 대우조선 인력부에 시범 케이스로 전산 처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우조선 하청 기업에 취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원청의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들에게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계속 다른 업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하청 노동자들로 인해 어떤 기업은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기도 하고, 원청인 대우 조선 역시 원활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실제로 직영 플랜트 제작부의 문화용 기원은 5월 어느 월요일 아침 전체 조회 시간에, "내 허락없이 타업체로 이동하지 못한다. 내가 당신들 얼굴 다 알기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하청 노동자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통제와 관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청 관리자들은 작업 중이나 휴식 시간에도 하청 노동자들을 망원렌즈로 감시하면서, 원청과 하청 조반장 회의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원청 관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하청 관리자는 노동자들에게 찾아가는 날리는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대우조선은 이제 구사대를 만들어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현장중심의 민주노조 추진위원회' 소속 동지들에게 폭력과 감금을 통해 위협하고 있다. 이는 유창식, 김승태 씨의 투쟁이 바람 끝으로 내몰린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들불처럼 번질 것을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적극적인 연대와 동참만이 이처럼 포악한 자본을 꺾는 무기가 될 것이다.

- 박정미(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와 간접 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돌아보고 다독이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은 9월 15일(금)자부터 발행합니다.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9월 6일부터 8일까지 뉴욕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수반들이 모여 21세기 지구의 청사진을 그리며 유엔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밀레니엄 정상회의가 열렸다. 세계의 이목이 뉴욕에 집중된 동안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거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자본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단체들은 '민중정상회의(PEOPLE'S SUMMIT)'를 구성, 뉴욕의 회의장과 거리에서 직접 행동을 펼쳤다. 여기에는 제3세계 부채탕감을 목표로 하는 쥘빌레 2000, 아웅산 수지를 지지하며 버마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자유버마동맹,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자유티벳학생회, 아부자발 후원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존엄성과 사면을 위한 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주권을 초월하여 국제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조약, 자본의 자유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토빈세 제정을 위한 조약 등을 속히 비준할 것을 각국 정상에 촉구했다. 또한 냉전 이후에도 줄지 않고 있는 군비를 축소하고 그 자원을 에너지 절약,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 날에는 버마 군부독재의 종식, 멕시코 정부의 사파티스타 반군 탄압 중지,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 군비 지원 반대 등의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각국 영사관 앞 시위를 계획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민중정상회의 선언문'의 내용이다.

세계시민에게 책임지는 유엔을 위하여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정치·경제 지도자들은 온 세계인의 경제·사회·정치·문화적 권리를 위한 5백 개 이상의 조약의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불평등 구조와 자본의 영향력은 이 회의를 세계시민의 진정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 화려한 말 잔치로 만들고 있다...

계속되는 빈곤, 인종차별주의, 무력갈등, 생태계 파괴, 군비증강, 인권침해, 강제노동, 문화제국주의, 남북문제,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퇴색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회의의 목표가 진정한 세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정치구조와 세계경제의 민주화를 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평화와 안전보장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유엔의 설립목표를 지지한다. 또한 유엔이 단지 자유무역과 사기업의 이익이 아닌 세계시민과 지구를 위해 일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조직이 되기를 원한다...

9월 8일 뉴욕 거리에서 우리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시애틀과 워싱턴, 필라델피아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는 뉴욕에 울려 퍼질 것이며 진정한 변혁이 올 때까지 그 소리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15일(금)

제 169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KBS 대량 해고 방침 파문

노조, "총파업 대응" 반발

공기업인 KBS(사장 박권상)가 환경 업무 종사자 전원을 해고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KBS가 발표한 정리해고방침은 기본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지난해 운전직 노동자들에 이어 또다시 하위직 노동자들만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KBS노동조합(위원장 현윤상) 및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KBS는 인력효율화 시행 방안으로 10월 30일까지 환경직 종사자 94명(본사 46명, 지방 48명)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20명 이상의 대량 해고 시 거쳐야 하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고위직 축소, 공사 간부직의 개방형 임용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KBS 구조조정 선차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상대를 찾아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공사경영진의 작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급변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퇴진투쟁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도 성명을 통해 "박권상 씨가 사장으로 재직 한 2년 반 동안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대부분 소외된 직종과 부서의 직원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하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명분도, 근거도 없는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KBS노조의 선전홍보국장 김영삼 씨는 "KBS의 경우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무려 1천5백억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을 위해 하위직인 환경직 종사자들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측의 통보로 해고의 불안감이 떨고 있는 이한덕(52) 씨는 "20년 전

입사 후 지금까지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 한번 하지 않았다"며 "높은 자리는 계속 만들면서 노동의 대가로만 먹고사는 사람들만 자르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로비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측은 15일부터 철야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실국 총회와 대의원 간담회 등을 거친 뒤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병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최근 골프장마다 회사의 주도로 캐디(경기보조원) 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자치회'가 있으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한 회사측의 고도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한양프라자 컨트리클럽 등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직접·비밀투표로 선출된 조장들로 구성된 '자치회'가 불성실 경기보조원을 제재하고 봉사료도 결정하기 때문에, 회사측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반면 노동부는 '자치회'가 없는 88컨트리클럽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행정해석이 내려지자 88컨트리클럽 경영진은 지난 7월 15일 조장 8명으로 구성된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동조합 88컨트리클럽 신유자 부회장은 "기혼자, 고령자는 안 된다"는 기준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조장을 선정했고 노조(분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

하지 않는 행정해석을 내릴 때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직접·비밀투표'에도 어긋나는 우스운 짓이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지현 교육선전국장은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최상림)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등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불안정한 사람은 1백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로자성이란?>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이러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각종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다. 예컨대, 해고나 잔업, 산재 등 각종 노동문제에 있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보선)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산재추방운동연합 전 대표였던 구기일(66) 씨가 지난 10일 별세했다. 구기일 씨는 90년대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투쟁'을 이끌어오면서 국내 산업재해(산재) 추방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그의 사망을 계기로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 투쟁의 성과와 국내 산업재해 문제의 현실을 되돌아본다(편집자주).

◎ 구기일 씨는 누구인가?

고(故) 구기일 씨는 산재추방운동가이기 전에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였다. 환자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는 등 투쟁의 중심에 서 있던 구기일 씨는 99년 5월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산재 단체 초청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심장이상으로 쓰러졌다. 그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요양을 받던 그는 이달 초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가 10일 사망했다.

박찬호 원진 녹색병원 사무국장은 "이황화탄소 환자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투쟁의 고비마다 현장에 있었던 구기일 원장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다 결국 쓰러지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 원진레이온 투쟁이란?

1988년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

병 인정투쟁'은 우리 사회에서 '직업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1959년 설립된 인조견사 제조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은폐되었던 이황화탄소(CS2) 중독 직업병 문제가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고, 이에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투쟁의 대열에 나섰다. 이후 91년 직업병 환자 김봉환 씨의 사망 이후 1백37일간 진행된 농성투쟁 등을 거치면서, 마침내 원진노동자들은 '직업병 인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 원진레이온 투쟁이 남긴 것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의학과 과장은 △수많은 직업병이 밝혀지는 등 산재문제에 대한 의학적 관심과 접근수준이 높아진 것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신설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등 제도적 개선조치가 이뤄진 것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과 연구인력이 갖춰진 원진 녹색병원의 건립 등을 원진레이온 투쟁이 남긴 커다란 성과로 지적한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이 산업재해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원진레이온 투쟁이 갖는 가장 큰 의의"라고 임 과장은 평가했다. 원진 투쟁을 계기로 노조마다 노동자 건강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노동자들이 산업안

●정보생●

◎ 동두천 기지촌 여성운동단체인 새움터(031-867-4655)는 99년 9월 의문사한 고 이정숙씨 1주기 추모제를 9월 16일(토)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갖는다.

◎ <공청회>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 때 : 9월 15일(금) 오후 3시-6시

· 곳 :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명동역 근처, 3455-8358)

· 발제 : 1. 표현의 자유와 영화 완전등급제의 가능성(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2. 청소년 보호와 음란물의 이분법을 넘어서(이동연,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 주최 : 문화연대(773-7707)

진보건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끊지 못한 프리프 '산재왕국'

원진 직업병 투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문제에 대한 제도적, 의식적 발전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산재왕국'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한편의 현실이다. 하종강 한울노동연구소장은 "산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불평등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3년전 ILO(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요 36개국 가운데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은 노동자들의 주의를 떨어뜨리고 이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나마 지난 10여 년간 통계상 감소되고 있던 산재발생 수치도 IMF 구제금융체제를 거치며 다시 상승했다는 것 또한 하 소장의 지적이다.

한편, 임상혁 과장은 "우리나라가 산재발생율에서 최상위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직업병의 경우는 일본에 비해 1/1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직업병을 발견해내는 시스템이 여전히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 원진 직업병 환자 실태

올해 57세인 정현산 씨는 지난해 6월 이후 계속 입원요양중이다. 손발이 저리고 뒷골이 어지러우며, 청각과 시각 장애에서부터 협심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정 씨는 "원진 직업병 환자들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40-50대의 이른 나이에 벌써 '노쇠현상'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고 구기일 씨를 비롯해 지금까지 사망한 원진 직업병 환자는 모두 43명. 해마다 환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까지 확인된 환자의 숫자만 해도 8백여 명이 넘는다.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했던 노동자가 2만여 명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직업병 환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참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이해찬 의장, "당내 기구 구성해 여론수렴"

민주당이 인권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5일 민주당 6역 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의 보완 및 제정을 위해 당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기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한 달 동안 심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장이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을 한데 묶어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법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인권단체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날 이 의장의 '의원입법' 언급은 '인권법'을 염두

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무부가 만든 인권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법무부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창조)

중앙일보 계열사 위장폐업 노동계, "노조 말살 책동" 반발

중앙일보가 계열사를 위장폐업하는 방식으로 노조원 모두를 해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9일 윤전 부문 계열사인 (주)중앙기획을 폐업 조치한 뒤, 곧바로 동종 회사인 J-printing (제이프린팅)을 설립했다. 중앙일보측은 그 과정에서 노조원 1백23명 전원을 해고

한 반면 비노조원은 채용함으로써, 사실상 노조제거를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폐업에 앞서 노조는 회사측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단체협상에 합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최종 서명을 앞두고 ▲조합의 산별노조 탈퇴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과의 관계 단절 ▲조합원의 증가 및 세 확장 불가 등을 골자로 하는 부속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및 산별노조가입을 결정했으며, 이에 회사측은 위장폐업을 단행한 것이다.

그 후 조합원들의 농성이 추석연휴기간에도 계속 이어지며 항의가 거세지자 사측은 13일 또다시 협상을 재개했다. 노사는 협상과정에서 ▲임금22% 인상 ▲계약직 전원 정규직화 ▲부당해고됐던 조합원 전원의 고용보장에 합의하는 듯 했으나, 사측이 다시 합의를 일방파기함에 따라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조남영 노조위원장은 "중앙일보가 말하는 노조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민주노총, 언론노련과의 관계를 끊을 것과 산별노조건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해 회사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중앙일보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련도 즉각 성명을 발표해 "중앙일보의 위장폐업과 노조원 전원 집단해고는 언론노동운동 12년 사상 최초로 이자 최악의 노조 파괴 말살행위"라고 규정하며 "위장폐업과 노조원 전원의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앙일보불매운동, 삼성제품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비리·탈세 혐의로 구속됐던 홍석현 회장이 복귀한 지 6일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기명봉)

2000년 9월 16일(토)

제 169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만화사랑방

이동수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현)는 15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영화 '거짓말'과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진 가운데 열린 것이다. 주최측은 '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 대표 손봉호) 관계자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초청했지만, 이들은 참석치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화연대 이동연 청소년문화위원장은 "청보법이 청소년 보호라는 논리로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것은 대중들 스스로 표현의 자유와 불 권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망각케 하는 자기검열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명분을 제도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장치가 바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만화가협회 김수정 회장은 "97년 청보법이 시행된 이후, 1천7백여 종 이상의 만화가 유해매체로 선정되면서 만화계가 크게 위축됐다"며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만화계가 집중 공격을 받아 만화가들은 자기 검열에 시달리기까지 한다"고 성토했다. 문화평론가 이재현 씨도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실증도 없는데 음란물을 무조건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의에 대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연 위원장은 청소년정책의 대안으로서 "시행중인 규제와 통제 중심의 부정적 보호 정책보다는 인권과 복지를 신장시키는 긍정적 측면으로의 청소년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대섭)

●정보샘●

◎ 제1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

· 때: 9월 19일(화) 오후 2시 - 6시

· 곳: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

· 주제발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리(김주환 연세대 교수) /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오용 대책(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의 쟁점(유환빈 광운대 교수)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일일주점

· 때: 9월 22일(금) 저녁 6시부터

· 곳: 파노라마 호프루페 (734-4720, 종각역 3번 출구)

◎ 인권운동사랑방에 자리아동이 있습니다. 박래군 사무국장→정책기획실장으로,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편집장→사무국장으로 옮깁니다.

구타·살해 위협 속의 소년병들

내전 겪고 있는 시에라리온

아프리카 서부의 시에라리온에서는 내전으로 9백만 인구 중 최소 5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소년병 문제에 주목하고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보고서 2편을 발간했다. 내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보고서 주요 부문을 발췌, 게재한다(편집자주).

61년 독립한 시에라리온에서는 식민종주국인 영국으로부터 정권과 경제력, 특히 다이아몬드 광산의 이권을 둘러싼 소수 엘리트층과 다수 빈곤층간의 갈등으로 극심한 정치불안이 지속되었다. 91년 엘리트 계층의 다이아몬드 광산 독점에 불만을 품은 산코(Sankoh)는 반군을 조직하여 민간인 살해·강간, 천정부인사의 수족 절단 등 잔혹한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정부군 또한 초법적 사형집행·구타·인신구속 등을 저질렀다. 99년 토고의 수도 로메(LOME)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올해 5월 초 다시 내전이 재개되고, 계속되는 전쟁범죄로 정부군과 반군 모두 정당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내전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니세프는 18세 이하 소년병이 최소한 5천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구타, 살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강제로 마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아래는 2000년 6월 앰네스티의 인터뷰 내용이다.

- 이브라힘(가명, 16세) : "92년 반군에게 잡혀 전투 훈련을 받고, 마약을 복용한 채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고 했어요. 천정부 쪽 사람의 손과 발을 잘라 버렸죠. 못하겠다고 한 14살 소년병은 즉석에서 처형당했어요."

- 반군 소년병 데이빗(가명, 14세) : 군사훈련이 힘들다고 불평한 11세 된 친구가 30여 명의 소년병 앞에서 맞아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00년 5월 이후 유니세프와 민간단체들은 소년병에 대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영양실조, 에이즈, 마약중독, 행동 장애, 약물, 사회성 결여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어려서 납치된 소년병은 자기 본명도 모르고 가족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가족 상봉에도 어려움이 있다. 정부군 역시 공식적으로는 소년병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부와 연합한 민병까지는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앰네스티는 정부군에게 ▲18세 이하 징집을 철저히 금지할 것 ▲15세 이하 소년병을 강제징집한 전범자를 사면하지 말 것을, 반군에게는 ▲소년병 강제징집과 자원병 모집의 즉각 중단 ▲유엔군의 소년병 무장해제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반군에 대한 군비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군을 지원할 경우 인권보호와 소년병 징집금지에 대한 약속을 받을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유엔과 NGO를 지원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만창

경찰이 '전투경찰'의 변신을 꾀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전투경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변신이다.

경찰청(청장 이무영)은 지난 17일 "전투경찰이라는 호전적인 명칭을 시민 친화적인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11월말까지 새 이름을 공모하고 최종 명칭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시위 진압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름'만 바꾸는 것일 뿐, 전투경찰 제도에 대한 다른 사항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원래 대간첩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1970년에 제정된

법이다.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배경 속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전투경찰은 실제 법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돼왔다. 대부분 훈련소나 군부대에서 차출된 군인 신분의 전투경찰은 대간첩 작전과 같은 군사 목적보다는 대(對)민간 작전인 학원·노동계의 시위 진압을 주로 해왔던 것이다. 최근에도 롯데호텔 파업 진압과정에서 그 역할을 특출히 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창동 전 부산외대 교수(법학, 현 독일 체류)는 98년 <말>지 8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의 군인을 민간 치안에 출동시키는 행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인을 출동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

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1년 전투경찰 신분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석진(31)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전투경찰설치법이 "국민의 평등권·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투경찰은 군인 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과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5년 박 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선 시위진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5:4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다. (심대섭)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인권연대,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연대)가 지난 15일부터 한달간 경찰폭력에 따른 인권피해사실을 접수한다.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방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 및 형사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피해 사실이 그 대상이다.

10월 한달 동안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위한 집중캠페인'을 벌이게 되는 인권연대는 경찰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경찰폭력 백서발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의 다양한 행사도 전개할 예정이다. (기명문)

피해사례 접수: 02-749-9004(전화)
www.hrights.or.kr/campaign2.html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본래의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 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국방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함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입법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 부처간의 업무공조체제 등의 대체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점에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2. 28. 91헌마80 [각하 · 기각]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에게 충고하지 말지어다

제벌 회사 백화점에서 일하다가 한 달만에 해고당한 사람이었다. 그 백화점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 시설 관리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회사에 소속된 이른바 '파견직 노동자'였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지는 장애인이었으나 냉동기를 관리하고 형광등을 교체하는 따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참 이상한 사건이었다. 노동자에게는 해고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회사로서도 이 사람을 해고한 후 다른 일자리를 주선하려고 애 썼던 것으로 보아, 굳이 해고할 마음은 없어 보였다. 나는 행여나 싶어 마지막으로 물어보았다.

"혹시, 이 사람이 파견 나가 일하고 있던 백화점의 관리자가 '손님들이 왔다갔다하는 매장에서 장애인이 저렇게 질뚱거리고 다니면 보기에 흉하니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오'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나온 책임자는 머뭇거리면서 답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는데, 다른 이가 그에게 물었다.

"다른 직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질문에 그 장애인 노동자는 대답을 못했다. 그랬을 것이다. 그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직장을 다녀보지 못했던 것이다. 잠시 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지만... 저는요... 보일러 기능장 자격도 갖고 있고요... 냉동기 산업기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자격이 더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내가 무식한 탓에 못 알아들었다. 기능장 자격증, 그것이 얼마나 갖기 어려운 자격증인가... 산업기사 자격증 역시 만만한 게 아니다. 남들이 하나도 갖기 어려운 자격증을 세 개 씩이나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장애인 노동자는 아직 어엿한 직업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게 '색을 놔' 우리 사회다.

어려움 속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끝에 보란 듯이 성공한 훌륭한 장애인들에 관하여 언론은 격찬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교양 있는 지도층은 그 장애인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옳은 게 아니다. 장애인에게는 온통 두려움뿐인 세상을 고스란히 내버려 둔 채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충고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약세리리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장애인이 서울시장 앞으로 "서울 시내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라는 유서를 남겨 놓고 자살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충고하는 잘난 지도층에게 화 있오라.

- 하종강 씨는 한울노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

주간인권호름

(2000년 9월 5일 - 9월 17일)

1. '양의 탈' 쓴 청소년보호법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를 주제로 열린 문화개혁시민연대 주최의 공청회에서 "청소년보호 논리로 치장된 청소년보호법이 실상 대중에 대한 검열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쏟아져 (15일)

2. "법무부 물렸거라!" 인권활동가들 힘찬 다짐
전국 70여 개 단체 25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 한국어성개발원에서 1박2일간 토론회를 갖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문 채택 (6일)

3. 무노조 신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
중앙일보, 윤전부문 계열사를 위장폐업해 노조원 1백 23명 전원을 무더기 해고 (9일)

4. 구타없는 군대는 언제쯤...
고참의 구타를 못 견디던 육군 이등병 강현구 씨가 "구타가 싫어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군화끈으로 목을 맨 채 숨져 (6일)

5. 백만의 원혼이 한반도 남북을 떠돌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창립 (7일)

6. 그녀가 당신 가족이었다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필리핀 여성노동자가 임신으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게 되자 중절수술을 강요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유니버설 프로모션 교체한 사장을 동대문경찰서에 고소 (5일)

◎ 수치로 본 인권 ◎

1. 인터넷 이용정보, 수사기관으로 송출
울 상반기중 통신사업자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일반감청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7.4%가 줄었으나, 인터넷을 포함한 피시통신 이용자의 자료제공은 상반기 10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1건에 비해 76.6%가 늘어났으며, 이동전화 자료제공도 4만8215건에서 5만3891건으로 11.8% 증가. 자료요청기관은 경찰 62.1%, 검찰 20.6%, 국정원 4.7% (14일, 정통부)

2. 도시가구 실질소득 IMF이전보다 못해
2분기 중 도시노동자가구 실질소득은 193만9천원으로 97년 2분기의 203만1천원에 비해 95.5% 수준에 머물러 /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배율과 지니계수는 올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나 (7일, 통계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인터넷 검열’ 논란을 빚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이 마침내 입법예고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을 마련, 오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초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법안의 내용 가운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법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삭제명령권)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를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일정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불법정보 관련 조항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전 검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정보’ 조항은 삭제

그러나 정통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엔 ‘인터넷 등급표시 의무화’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보내용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7조)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 의무부과”(개정안 제48조 1항)함으로써 결국

‘인터넷 등급제’로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별도 입법” 요구

이러한 정통부의 새 개정안에 대해, YMCA,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19일 간담회를 가진 사회단체들은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과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신의 내용검열(감청)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형식으로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틀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폐기만이 대안”

내용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제도를 인터넷에 도입하려는 것은 인터넷 내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표현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라며 “인터넷이 ‘외부의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특별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위헌 소지마저 안고 있는 ‘등급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단체들의 견해였다.

이처럼 정통부의 새 입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전히 ‘수용불가’의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인터넷 검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조)

“백악관으로 항의메일을”

매향리 관련, 21일 온라인 시위 소파국민행동, 밤미시위단 파견

한동안 주춤했던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과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문정현 상임대표를 비롯한 사회단체 인사 5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이들을 미국 출국한 뒤, 미국에서 ‘전면적인 소파개정’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21일 오전 11시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단의 미국활동 계획을 밝히게 된다.

또한 ‘매향리 대책위원회’ 등은 오는 23일을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오케나와 등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각국 민중들과 공동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는 ‘국제행동의 날’ 사전 행사로 21일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백악관과 미국무성, 국방성, 미 대사관 등지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온라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온라인 시위 참여는 매향리 홈페이지(maehyang.jinbo.net)에 마련된 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매향리 대책위는 또 오는 23일(토) 오후 3시 매향리에서 ‘빼앗긴 매향리를 되찾자!’는 주제로 범국민 문화제를 갖기로 했다. (이창조)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문전산화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프라이버시권’ 포괄적 이해 요구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주환 교수(연세대)는 “프라이버시를 단순히 사생활 보장권으로 번역한다면 세 가지 포괄적 권리(사생활 보호권,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로서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기 힘들고, ‘배부른 자의 인권타령’ 쯤으로 여겨지기 쉽다”며 “프라이버시권은 통치대상으로서의 ‘국민’이기 전에 주권자인 자연적 인간, 사적 시민으로서의 권리(사민(私民)권)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를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데이터 감시)’라고 규정했다. 그가 데이터 감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것은 지문의 데이터화와 주민등록번호의 데이터화. 즉, 종이카드 위에 찍혀 전국 동사무소 캐비닛에 소장되어 있는 지문이 일당 디지털화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면, 전국민에 대한 지문대조가 순식간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약 수사기관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수사에 사용한다면, 이는 곧 전국민을 범의의자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정보가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하나의 백과사전처럼

검색대상이 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완벽한 복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에 있다. 특히 “한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일수록 완전한 폐기가 어려우며, 합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 하더라도 수집된 목적이 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화가 갖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는 분산되어야 한다”

이같은 데이터감시 체제를 예방하고 정보의 ‘사민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라는 두 개의 제도가 반드시 요청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는 분산

유지되어야 하며, 통합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필요성 제기

한편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정책연구팀 팀장은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오용대책’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에게 과다한 정보를 요구하는 상업사이트가 대다수라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는 타인에 의해 수집·처리·이용돼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보안성과 소비자를 위한 개인정보관리방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열람·정정·삭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감독기관과 함께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일반인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을 제정할 때만이 실효성 있게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명문)

● 정보생 ●

간행물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박이섭 목사)이 『비전향장기수 백서』를 펴냈다. 제1부 ‘비전향장기수의 현황과 역사적 의미’, 제2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제3부 ‘비전향장기수의 삶과 실태’로 구성된 이 ‘백서’에는 비전향장기수들이 겪어온 고난과 투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김익진 씨등 비전향장기수 42명의 삶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부록으로 ‘주요 사건 연표’와 관련 법률, 통일관련 선언 등이 실렸다.

◎ ‘인물과 사상’의 여덟번째 시시인물사전으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가』(가격 9천원)가 발간됐다. 이번 인물사전은 인권운동을 위해 애쓴 국내외 인물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인 강정구(동국대 교수), 곽노현(방송대 교수), 문정현(신부), 손석춘(한겨레 기자), 조정래(소설가),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장) 씨등 한국인 10명과 에밀 졸라(프랑스) 등 외국인 3명이 등장한다. 특히 사형집행 대기 중인 미국의 흑인인권운동가 무미아 아부자말이 포함돼 주목을 끈다.

행사와 동경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2일(금) 저녁 6시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에서 제8회 시민인권상 시상식을 갖는다. 수상자로는 김해성(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목사가 선정됐다.

◎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발족식 및 조선일보 규탄집회
·발족식: 20일(수)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집회: 20일(수) 낮 12시-1시 조선일보 사옥 앞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중간착취로 인한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총·민변·사회진보연대 등 22개 노동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20일 발표한 '2000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파견·용역·도급·사내하청 등이 서로 형식은 다르지만, 일을 시키는 사용업체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근로관계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고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리하고 있다.

파견직 90%, 최저생계비도 못받아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70-100만원이 50%, 50-70만원이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99년 10월 자료를 근거로 제시된 이 통계는 파견노동자들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93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의 감독 밖에 있는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임금의 수치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공대위 관계자는 밝혔다.

165만원이 33만7천원으로

이처럼 낮은 임금의 주요한 이유는 '중간착취'에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업체에서 업무를 용역화할 때 일단 인건비가 삭감되는 데다가, 용역업체를 거치는 과정에

서 다시 30-50%의 임금이 중간착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제철의 사내 하청업체인 거림산업의 노동자들은 한 달에 165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실제 받는 돈은 월 33만7천원, 3교대 근무를 할 경우 64만3천원이었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8조와 직업안정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생계 위한 장시간 노동으로

중간착취에 따른 낮은 임금은 곧바로 생계유지를 위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상식품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밤 11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대략 한 달에 100시간 정도의 초과 노동을 해야만 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파견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연중무휴 맞교대로 일하고 2-3일에 한번 썩 야간 근무를 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2-8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파견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회사측에서 전화상담 횟수를 감시하고 매일 실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오전 8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 줄곧 앉아서 말하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두통·후두염·청력감소·어깨 등의 근육통과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고 소음성 난청 등 더 심한 증

2000년 9월 21일(목)

제 169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세로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고용불안의 위협이었다.

‘근로자파견법 철폐’ 유일한 대안

공대위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파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됐지만 불법 파견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해졌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열린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에서 김선수 변호사도 "근로자파견에는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해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를 금지하고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대위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철폐!"를 촉구하는 정기집회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주영)

- 인권공대위 하루주점 -

독립적 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인권난정”

·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때: 9월 22일(금) 오후 6시부터

· 곳: 파노라마 호프부페 (1호선 종각역 부근 동양서적 골목안 734-4720)

· 공대위 계좌

513-386541-02-001 (예금주:조영임)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장기파업을 벌여온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고 20일 업무에 복귀했다. 사회보험 노조는 롯데호텔 노조와 함께 올해 가장 큰 탄압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본지 7월 4일, 6일자 참조). (이창조)

◇ 아무 조건 없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까닭은?

“국민건강공단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의보통합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무작정 지속할 수만은 없었다. 파업을 지속한다고 해도 사태가 해결될 전망은 없었다. ‘낙하산 임명’된 박태영 이 사장은 ‘공단이야 어찌되는 배제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도 사태해결을 위한 의사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공단 운영을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었다.”

◇ 회사로부터 교섭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결국 노조가 물러선 셈인데?

“우리에게 앞으로 한달 이상 파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했다. 84일간의 투쟁 속에서 조합원의 이탈률은 10%에 불과했다. 지켜보라. 이번 복귀는 언제든 재파업에 돌입한다는 전제 아래 내려진 전술적 복귀에 불과하다. 회사측은 오늘(20일) 이미 ‘노조와 교섭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교섭이 계속 거부되면 재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 노조는 업무복귀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의료보험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의료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보험료는 국민부담이 아닌 국고지원을 통해 충당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공단과 노조의 입장이 다른 것이다.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약속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보험료가 60%가량 인상된다고 하는데, 실제 인상은 재산가치 증식에 따른 자연인상율을 감안할 때 사실상 100%인상이라고 봐야 한다.”

◇ 파업과정을 돌아보자. 파업 이틀만에 경찰력이 투입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파업이 장기화되던 시점도 아니고,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것도 아니었다. 교섭과정에서 핵심쟁점 7가지가 모두 수용돼 최종타결을 앞둔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사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사장의 의도와 달리 이미 경찰력 투입은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다. 결국 ‘손 좀 봐줘야겠다’는 ‘공안’ 쪽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 노조는 공공연맹 소속 노조 가운데 가장 투쟁력이 강한 노조로서 민주노총 공공부문의 핵심사업장으로 꼽히고 있다.)

◇ 파업 이후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 현황은?

“역대 어느 파업 때보다도 해고자가 많았다. 2백60명의 징계결정자 가운데 1백25명이 해고당했고, 약 3백명 정도가 자위해제를 당했다. 구속자는 위원장을 비롯해 9명, 수배자가 6명이나 된다.”

◇ 파업투쟁의 성과가 있는가?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에 대한 경찰력 투입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파업투쟁이 거둔 성과다. 정권의 실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조직적 각성이 이뤄졌고 조직력도 좋아졌다.”

◇ 같은 시기 경찰력이 투입됐던 롯데호텔 노조에 비해 사회적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다. 경찰 진압과정에서 조합원이 이 사장을 폭행한 사건이 근거 없는 ‘괴담’ 수준으로 퍼졌는데, 시민단체들도 이를 사실로 믿고 있었다. 결국 정권의 기조에 장단을 맞춰준 것 아닌가?”

한총련 ‘영원한 국보법 제물’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

한반도의 화해 흐름 속에서도 대학가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 구속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구속된 대학생의 숫자는 최소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시통신 나무누리 내 ‘민권공대위 CUG’인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올라온 소식만으로 집계한 결과다.

지난 18일 연행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송재혁(창원대 총학생회장) 씨를 비롯해 연행·구속자 모두는 한총련 대의원들이며, 경찰은 이들에게 반성문이나 한총련 탈퇴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의 남규선 총무는 “여담 내에서도 국보법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경은 여전히 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심태섭)

“통신질서확립법 폐기” 촉구

41개 사회단체 성명 발표

피스넷, 국제민주연대 등 41개 사회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 전날 입법예고된 정통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관련자료 3면에>

이들은 “정통부의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라기보다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정통부의 개정안과 원래 법안 모두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간교육실현하부모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전화연합 등 청소년·여성운동계도 동참하고 있다. (이창조)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정통부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오늘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바,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공청회 당시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부분 수정되었으나 이 법안의 기본취지 및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예고된 법안이 이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정법안의 실제내용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지적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2. 인터넷 등급제에서 제시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신공간에서의 법적규제는 정보제공자일반, 즉 비영리목적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대상화 함으로써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하였던 검열적 요소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기업인수, 합병의 경우를 예외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킨 점이나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

련하여 준수법적 권한을 지니게 될 개인정보분쟁조정기구를 정통부 산하에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정책도 이미 시민사회의 자율에 의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정통부가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짜고 있다.

3.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 외에도 우리는 이 법안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관리정책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법적 규제의 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자율규제능력을 강화해 가려고 하는 지향보다는 정보통신부 자체의 소관업무영역 및 권한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통부 스스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의 근본문제와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정보통신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것은 현재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기형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회기내에 이같은 법안을 국회에 정통부의 개정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입법청원할 것이다.

2)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이므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제시된 현재 개정안의 관련 부분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단,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의 기술관련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통합하여 존속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0. 9. 20

PeaceNet,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사회진보연대, 성남청년정보센터, 서울YMCA,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민주주의를위한네트워크사업단 INP,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22일(금)

제 170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또다시 공권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3시경 스위스그랜드호텔 마당에서 진행되던 노조(위원장 이성중)의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노조원 10여 명을 연행해 2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구금했다.

이날의 경찰력 행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진행되어온 노사간의 분쟁이 잠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노조 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 측은 경찰력 행사의 배경으로 21일부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콘크리트학회 주최의 국제회의를 지목했다. 노조 측은 "경찰이 교섭상황과는 별개로, 서울콘크리트학회 국제회의 기간에 시위를 할 경우 지체없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국제회의

를 의식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을 방해한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주 교육선전부장은 "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노·사를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교섭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날 경찰력 행사가 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1백여 일째 파업을 겪고 있는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사는 각각 관광연맹과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한 후 교섭을 진행했으며, 노사간의 쟁점사항인 ▲비정규직 사원을 2년이 지난 후 정규직화로 전환 ▲월급 10% 인상 ▲파업기간 고소·고발 철폐 등의 사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관련 기사 8월 17일, 18일자). (기명문)

'소파 항의방문단' 미국행

워싱턴 시위 및 상·하원 면담 계획

미국 워싱턴에서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된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문정현 상임대표를 비롯한 국내 평화운동가 5명은 21일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밤미 목적과 일정을 밝혔다.

미국에서 9박 10일간 체류할 '밤미대표단'은 우선,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섬(미 공군사격장) 시위대' 주최의 집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푸에르토리코 시위대는 6개월 전부터 백악관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밤미대표단은 동아시아 문제에 관심 있는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소파 전면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며, 기자회견과 미국 라디오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 내 여론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정현 상임대표는 "미국에서도 소파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미국 시민들에게 한국인들의 소파 전면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번 방문단의 면담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명문)

◎ 고칩니다

21일자 1면 특기사 가운데 "거림산업 노동자들은 한달에 165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실제 받는 돈은 월 33만7천원, 3교대 근무를 할 경우 64만3천원이었다"는 대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기본급이 33만7천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 수령액이 64만원이었다"로 바로잡습니다.

만화사랑방

어동수



'마마' 노동자를 아십니까? "체불임금해결·고용승계" 두달째 농성

"나도 답답해요. 마길평이 그 놈, 내가 생각해도 나쁜 놈이요. 부도 나더라도 임금은 쥐야지! 우리가 알기로 지내들은 몇억 정도 챙겼다는데... 노동부에서라도 나서면 뭔가 해결될 수도 있을텐데."

9월 19일, 관악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마마노조 사수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 대회'를 갖고 구로공단 역까지 행진하는 조합원들을 따라다니며 "차도로 행진하지 말고 제발 인도로 올라가라"던 남부경찰서 한 정보과 형사의 말이다. "집시법에 주요도로로 지정돼 차선으로는 행진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서도 전경 80여 명을 길 건너편에 늘어놓도록 한다. 이해하지 못 할 수 없다.

부도 낸 사장은 도망가고

(주)마마의 마길평 회장과 마준호 사장이 부도를 낸 건 6월 26일 저녁. (주)마마노조가 결성된 건 6월 19일. 체불임금문제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뒤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노조가 접한 첫 소식이 바로 '부도'였다.

회사는 이미 3-4개월째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 전임 노조위원장 신성아(29) 씨, "체불임금 받을 방안을 연구하다가 노조를 만들었죠." 서울남부지역 금속노조의 한 조합원, "신성아 씨는 제 친구거든요. 평소에는 아주 조용하고 노조위원장 같은 것 못할 친구로 보였는데... 상황이 사람을 떠미는 것 같아요."

몇 달씩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해결책은 노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거란다. 조합원들은 부도 직후 회사산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마길평 회장, 마준호 사장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구조조정 전문회사라는 시데코(대표이사 김중기)가

(주)마마를 인수하겠다고 나타났다. 노조와 시데코는 체불임금 청산, 8월 31일까지 새로운 공장부지로 이전, 고용승계를 골자로 8월 3일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고, 노조원들은 시데코에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 새벽까지 농성을 벌였다.

그마저 시데코가 9월 4일 인수포기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다시 부도 이전으로 돌아갔다. 시데코는 인수포기 의사를 전하며 마씨 일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마마의 부실채권이 예상을 훨씬 초과한 3백80억원에 이르러 인수를 못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노조 때문에 인수를 못한다"고 탄소리를 하고 있다.

신성아 씨는 "체불임금 청산과 완전한 고용승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요구"라고 단언했다. "마씨 일가는 길평전기에서 마마전기, (주)마마로 오는 동안 회사에 채무가 많아지면 고의부도를 내 채무와 노동자의 임금을 털어 버리고 다른 법인을 차려 밥술 장사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마길평, 마준호 부자가 이번에도 공장 계약 만료일인 6월 30일을 앞두고 부도를 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싸우며 배우는 '노동자'

회사부도 후 오랜 싸움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은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적극적인 연대를 하게 됐다. 지금까지 마마 노조가 지역노조 투쟁과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한 것만도 20회가 넘는다.

서울 남부지역 금속노동조합 일신통신 김남숙 분회장은 "19일 일신통신 현장에서 회사가 구성한 구사대와 싸우는데 마마 노조원들이 달려와 큰 힘이 됐다. 조합원들은 회사 정문 밖으로 일방적으로 밀려내면서도 혼자만 아니라라는 생각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속 천막농성장을 지키며

철거되는 건물 한 칸에 천막을 치고 농성한 지도 56일째. 마마 조합원들은 임금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잘 못한다. 서울 시흥동 코카콜라 옆길로 50미터 정도만 들어가면 눈에 띄는 천막하나가 그들의 농성장이다. 농성장 담 너머에서 한창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이 (주)마마의 건물이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임에도 천막은 먼지로 가득하다.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물을 길러오고, 부탄가스로 불을 밝히는 마마 노조의 천막. 한 조합원은 길어온 물로 빨래를 해서 천막 안쪽에 널고 있다.

천막 옆 깨끗한 건물에서 나오는 한 아주머니, "시데코라는 데서 인수 안한다면 저 어린 사람들은 뭘 하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 딸 또래고 임금 못 받는데도 한창이라는데..."

배수진 신임 노조위원장은 "3월 이후 월급구경을 못해 봤다. 가을은 그냥 그냥 버티겠지만 올 겨울을 지낼 못 살 돈도 없고, 방세를 어떻게 낼지도 걱정"이란다. 80명의 조합원 중에는 18-21세의 어린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고등학교 때 취업 나왔다가 그대로 놀러왔던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마마 노동자들의 막막함을 사회에서 외면한다면 이들은 영원한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 한 서울남부지역 금속노조원의 말이다. (심보선)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소송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최종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23일(토)

제 170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1평 남짓한 쪽방에 쇠창살까지

군산 화재사건, 윤락여성 비참한 죽음

군산지역 윤락여성들의 비참한 삶이 세상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도 이 여성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 밝혀진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9일 군산 대명동의 속칭 '감둑'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사망한 5명의 여성들은 밖으로부터 자물쇠가 채워진 방 안에서 속절없이 숨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2층에 위치한 방이었기에 창문으로의 탈출도 가능했겠지만, 창문은 두꺼운 쇠창살로 막혀있는 상태였다.

화재당시 주변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카크레인으로 2-3층 창문을 깨고 쇠창살을 부순 후 구출을 시도했지만, 여성들은 이미 질식사한 뒤였다.

현장에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전북 평화인권연대 김영옥 씨도 "두꺼운 쇠창살과 외부 잠금 장치로 바깥과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관료들, 책임회피 급급

더욱 분개할 일은 관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재가 난 업소의 입구에는 시청에서 발급한 '청소년출입금지' 스티커가 여전히 붙어있는데도 군산시청 위생과는 "술을 팔고 매춘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기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김영옥 씨는 전했다. 또한 군산경찰서 형사계장도 "윤락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 단속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을 다녀온 '오마이 뉴스' 기자

인신매매 의혹도 제기

한편 이번 참사로 희생된 임 아무개(20)씨의 일기장에 '윤락 강요' 사실이 적혀 있어 이 지역 윤락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인권단체들은 인신매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지는 미지수다. (기명문)

논평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전투경찰'(전경)의 명칭이 바뀐다고 한다. "전경"이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이미지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의 애칭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 경찰의 변(辯)이다. 그러나 늑대에게 양의 털을 씌운다고 해서 그것이 '양'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박통'으로부터 '양(兩) 김통' 시대에 이르는 동안, '전경'은 각종 시위와 민중들의 투쟁을 최선두에서 짓밟아 온 '정권의 친위대'였다. 전경이 출동하는 곳에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유린되고 폭력이 난무했다. 전경의 폭력성은 이한열(87년), 강경대(91년), 노수석(96년), 류재을(97년)씨 등의 죽음을 통해 그 '절정'을 보여왔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늘어선 전경들 사이를 지나며 일반 국민들이 느껴왔을 위축감과 피해의식은 얼마나 될지... 현 정권 출범 이후 한동안 전경의 활동이 뜸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올 여름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현장에서 '화려하게' 자신의 존재함을 과시했다.

그런데 아직도 전경의 시위진압 업무(치안) 업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전경은 엄연히 '군인'의 신분이다. '군인'이 '비상계엄'이나 '대간첩작전'도 아닌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95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은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경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출한 바 있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친구와 부모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기막힌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우리는 시위대와 마주선 채 눈물 흘리는 전경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 '전경'들이 있어야 할 곳은 파업이나 시위현장이 아닌 '국방'의 현장이다. 당국은 단순히 '전투경찰'의 이름만을 바꾸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그들을 '군인'의 자리로 되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순서일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정부, '매항리 항공사고 위험' 쉬쉬

미 조사단, "가능한 한 빨리 이전" 권고

매항리 사격장의 미공군 비행구역이 영종도 국제공항 비행구역과 인접해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는데도, 정부가 이를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이윤수 의원(건설교통위)이 입수해 공개한 '한국 항공시스템 플랜 2000'이란 보고서는 Romeo-79(매항리 사격장 공역)기지가 "인천공항에 이르는 효율적인 교통흐름과는 충돌을 빚을 것"이라며 "비행안전과 운영효율성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성 켄 세일러와 연방항공청 파울 바트코가 99년 8월 매항리 사격장 일대를 답사한 뒤, 99년 10월에 공동작성한 것이다. 이 조사작업은 건교부, 한·미 공군, 민간항공사가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 보고서가 '가능한 한 빨리' 이전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제공훈련장(ACMI)의 폭을 축소하고, 오산공역의 일부를 서울 접근관제소로 이양하는 등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직접당사자인 미 공군과 논의하는 대신 한국공군기지의 폭을 축소하는 미봉책을 택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98년 12월 '인천국제공항 공역체계 및 비행절차 수립검토 보고서'에서 이미 "인천국제공항이 활주로 4개로 운영되는 2005년에는 매항리 사격장이 폐지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두 보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와 '2005년까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심보선)

매항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매항리 사격장 폐쇄 투쟁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일·김용한(이상 매항리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최용운·주영배(이상 매항리 주민)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속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매항리 사격장의 이전을 권고한 '한국 항공시스템 플랜 2000' 보고서와 록히드-마틴사가 매항리에서 신무기 시험을 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공판부터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매항리 주민대책위 전반기 위원장의 사건도 병합됐다. 앞서 1차 공판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은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

한편 매항리 주민대책위가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2차 공판도 20일 열렸다. 공판에서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서울민사지방법원 561호실. (심태섭)

시애틀에서 프라하로

올 10월 열리는 아셈회의에 맞춰 한국의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경제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맥락에서 체코의 프라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19일부터 28일까지 IMF와 세계은행의 연례총회가 열리는 체코의 프라하는 자본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특히 26일엔 전세계 각지로부터 온 노동자·실업자·농민·여성·환경운동가·평화운동가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체코 정부는 시내 곳곳에 경찰을 배치하고 국경 지대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21일엔 모든 거리 집회의 불허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원래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금융불안으로 인한 단기적 외환부족과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개발자금부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건설되었다. 그러나 IMF와 세계은행이 자금 지원의 대가로 요구하는 구조조정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제1세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켰다. (78년에서 95년 사이에 IMF의 지원을 받은 국가들 중 72%가 실업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26일 열릴 프라하 집회는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그리고 올해 4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강도높게 진행되었던 경제세계화 반대운동의 맥을 잇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동·중부 유럽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인 만큼 이 지역에서 IMF와 세계은행이 해온 역할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꾸준히 동·중부 유럽권 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하도록 지원해 왔고 체코는 그 모범 사례로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분배보다는 성장, 복지보다는 효율에 중점을 두는 지원책은 사회·경제적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세계은행이 체코의 원전 개발을 지원한 것은 환경단체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프라하 집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체코의 인권, 환경, 진보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경제 세계화 반대 행동(Initiative Against Economic Globalization, 인백)'이다. 인백은 "IMF, 세계은행, WTO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생존권·환경·인권을 보호하려는 민중들의 권한을 제한하는지를 폭로하겠다"며 지난 여름부터 이번 집회를 준비했다. 이미 유럽 뿐 아니라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각지에서 인백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을 의식해 IMF와 세계은행은 향후 경제의 성장 뿐 아니라 분배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지향적 방침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세계금융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26일(화)

제 170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서울대생,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지문날인 폐지' 촉구...서명운동도 전개

서울대생들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이하 지문거부모임)은 25일부터 29일까지를 '지문날인 반대주간'으로 정하고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지문전산화 폐지'를 위한 범서울대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지문전산화 추진상황의 공개와 개인 지문정보의 폐기 △지문거부자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문거부모임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항의행동의 하나로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운동도 펼친다. 캠페인 첫날인 25일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2백여 명이며, 10명이 지문거부모임 측에 주민등록증을 맡겼다. 지문거부모임은 또 26일 저녁 서울 신림동 '녹두' 호프집(화랑고 근처 '녹두

거리'내)에서 일일주점 행사를 갖고,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의의와 활동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문의: 019-229-9493)

"지문날인 이해할 수 없다"

25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이택수(자연과학부 2년) 씨는 "동사무소에서 집에 계신 부모님 앞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와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었지만,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함으로써 지문날인거부의사를 다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문거부모임의 오석영(전기공학부 4년) 씨는 "우리는 지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문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경찰청에서 이를 전산화해 사용하고 있었다"며 "왜 우리가 지문을 찍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결국 국가가 국민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에는 약 6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내 지문거부자들의 규모는 최소 2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문거부자 피해 방지

한편, 구 주민증의 효력이 사라진 지난 6월 이후 지문날인 거부로 인해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업무 등 일상 곳곳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의 경우,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선 '템스'(영어시험의 일종, 조선일보사 주관)에 응시해야하며,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신분증이 없어 템스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 서울대생은 구 주민증으로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선일보사에 요청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처럼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조)

"경찰청장이 근기법 위반"

면허시험장노조, 체불임금 고소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노동조합(위원장 현철민)은 23일 이무영 경찰청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일 유급수당 및 연월차 유급수당, 여직원의 생리수당과 산전, 산후 유급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무영 청장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방조해왔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창조)

들끓는 함성, "인터넷 검열반대"

네티즌, 온라인-오프라인 오가며 시위

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인터넷 검열반대를 외치는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0일, 21일자 참조).

정보통신부의 법안이 입법예고된 23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진보 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등이 주최한 '제3차 네티즌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간략한 집회에 이어 '검열반대' 글씨가 새겨진 풍선과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다.

통신질서확립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하게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 온라인시위와 격주 토요일 오프라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 사이트 : freeonline.jinbo.net> (이창조)

● **경제속의 인권이야기**

도보권도 인권이다

한 친구와 인천까지 걸어갔다 온 일이 있다. 80년 겨울이었다. 이른 아침, 그와 내가 다녔던 재수학원이 있던 노랑진계에서 만나 무턱대고 걸었다. 둘은 어려운 1년을 보내고 막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고 난 참이었다. 이미 대학에 간 친구들이 많았기에 봄·여름에 걸쳐 서울역 관장과 시청 앞으로 달려나갔던 그들에게서 날아온 최루탄 냄새는 그 전염성이 너무 강했음에도, 우리는 감옥같은 학원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소심하고 민감했던 10대 꼬트머리에서 '실패자'라는 자의식으로 움츠러들었던 우리가 인천으로 도보여행을 떠난 것은 아마도 그러저런 부끄러움과 화한을 털기 위한 의기투합 때문이었을 것이다.

벌써 20년이 흐른지라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아름다웠던 길이 푸르듯 떠오른다. 꽤 추웠지만 두툼한 등바에 목도리를 한 우리는 들판과 거리를 지나 인천으로, 다시 서울로 켜 걸음을 놀리며 아꼈던 1980년을 마무리하는 의식을 치렀다. 우리는 어쩌면 병자였고 무조건 걷는 일은 회복기 환자에게 좋았다. 걷는 일은 요즘 말로 치면 '느림'으로 가는 행위였고, 삶은 선택하는 절실함을 한 발 한 발 확인하는 다짐이었던 것 같다.

지금 다시 인천까지 걸어갔다 오려면 아마 못할 것이다. 마음도 문제겠지만 길이 없다. 차도에 밀려 인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 국토가 사람 다닐 길보다 차 달릴 길 내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올 여름 백두대간을 따라 전국도를 걸어서 종주한 원공 스님(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은 "큰일 났어. 걸어다닐 길이 없어" 한탄하셨다. 지난 20여년 '걷는 스님'으로 이름이 난 그는 이제 길이 없어 차 없는 사람들은 걸어다닐 수도 없게 됐다고 기가 막혀 하셨다. 하루 일백리를 걸으며 '한민족 동질성 회복 기원' 순례도보기도를 바치던 스님은 땀뻘거리며 걷는 이들을 위협하는 차들 때문에 깜짝 놀라기를 여러 번, 찰과상에 교통사고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원공 스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전국에 걸어다닐만한 길이 없다. '길'하면 다 찾길을 뜻한다. 게다가 자연이고 뭐고도 이젠 없다. 옛날에는 산이 있으면 땀 돌아 길을 내던 것이 막바로 땀 뚫어버리는 지경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조국 근대화가 대한민국에 남긴 것이 사방팔방 길뿐이란 생각도 든다. 시대에 한참 뒤쳐진 말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한방 울도 안나는 기름 사다 쓰며 무슨 차들을 그리 굴리느냐"는 원공 스님 꾸짖음은 맞아 싸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자동차 회사와 건설회사 좋은 일 시키자는 도로공사요, 그 재벌들 뒤에 서 그들 손 들어주던 나랏님 때깔나는 길내기다.

고속도로 없었으면 이만큼 밥먹고 살게 됐겠느냐는 큰소리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린 "도보권도 인권"이란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다. 차로 썩썩 달리는 길이 보여줄 수 없는 절실한 아름다움과 깨달음이 그 길을 제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이에게 온다. 걷기에 참 좋은 철이다.

- 점재숙 씨는 한겨레 문화부 기자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1. 전투경찰, 이름 바꾼다고 달라지나?

경찰청,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의 애칭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그러나 전투경찰제도 개선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어 (9/17)

2. 자유를 갈구하던 여성의 '유서'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으로 5명 사망, 윤락여성들은 삼중 감금장치와 쇠창살 안에 갇힌 채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져. 사망한 한 여성의 일기장에는 이들이 '윤락'을 강요당한 사실 적혀 있어 (9/19)

3. 매향리·소파, 질질 끌지 말라니까!

정부가 매향리 폭격장의 항공사고 위험을 알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 드러나 (9/20) / 백악관·미 국무부 사이트 등에서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온라인 시위 벌어져 (9/21) / 사회단체 대표단, 전면적인 소파계정을 위한 미국 내 여론조성 위해 미국행 (9/22)

4. IMF? 세계화? 우리는 인간이고 싶다!

IMF체제 이후 수업료 못내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9/19) / 통계청 발표, 8월 실업률 3.7%로 올 들어 처음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9/22)

5. 중간착취 고리를 끊자

「과건·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에서 과건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산업재해의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 (9/20)

6. 사이버는 사이버답게 놔두소!

정보통신부, '인터넷 내용등급제'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사회단체들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 (9/19)

7. "너들은 화해해! 우리는 잡아갈게!"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잡혀간 사람이 60여 명에 달하고, 그 중 대다수가 한총련 대의원들이므로 드러나 (9/20)

8. 국제회의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경찰, "국제회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의 파업집회 강제해산 (9/21)

9. 위안부 할머니들, 진실을 향한 순례

위안부 할머니들 미국 순회하며 그림전 행사 가져 (9/22) / 대구출신 김상희 할머니, 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군 만행 증언 (9/1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27일(수)

제 170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청소년들의 이유있는 저항

두발자유 권리 요구 들끓어

"앞머리 2cm" "귀밑 3cm" "바리깡 단속". 수십 년간 변함없는 교문 풍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치마를 들추어 속치마 검사를 하는 것, 손끝부터 발끝까지 점수가 매겨지는 것, 교문 앞에서 고슴도치처럼 머리카락을 잘리는 것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이러한 관행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에 9만여명 서명참여

우선 지난 5월부터 인터넷상에서는 서명운동에 불이 붙었다. 청소년 관련 사이트인 사이버유스, 채널10, 아이두가 운영하고 있는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에는 26일 현재 9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그 내용은 교육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은 지난 6월부터 대학로와 명동 일대에서 두발규제 폐지 캠페인을 벌여왔다. 두발자

유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는 서울 시교육청 게시판을 연일 달구고 있다.

교육청 '일관된' 발뺌

"오늘 머리를 20번은 넘게 잘렸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라는 항의부터 "교육청은 학교하고 학생이 해결하러는데, 해결이 안되니까 교육청에서 나서달라는 겁니다!"는 한탄, "바리깡으로 밀렸어요. 10번 넘게 참았는데, 이번에 전학 실패하면 고발할꺼예요"라는 협박성 발언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다양하다. 그러나 교육청은 "두발 관련 문제는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획일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게시판을 찾은 청소년들로부터 "참으로 일관성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8월 초 두발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낼 계획이었으나

한 달 만인 9월초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인권을 말하게 하자"

두발자유화 논의와 관련해 김정욱(전 교조 학생생활국) 교사는 "두발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임에도 기성세대가 보기에 안 좋다고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또 청소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사회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었다는 이석재 씨는 "염색이나 특이한 머리형태가 아닌 이상 아이들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두발 완전 자유화를 요구하는 청소년들과는 약간의 의견차를 보이면서도 "청소년을 '아이들화'하지 말고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는 활동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은 오는 30일 두발자유화를 포함해 학생 인권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학교민주화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선언과 함께 학생인권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연합의 윤아무개(17세)군은 "이번에 학생회가 많이 참여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학생회가 외부단체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니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계 얘기도 나오니까...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학생의 인권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테고 다음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겠죠"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근예]

● **정보샘** ●

◎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 주최: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 때: 9월 30일(토) 오후 3시 · 곳: 장소 미정
- 문의: 02-755-8025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행동의 날

- 때: 9월 30일(토) 오후 2시 · 곳: 영등포역 → 여의도 국회 앞

◎ 비정규노동자 문화제 및 투쟁선포식

- 때: 9월 30일(토) 오후 5시 · 곳: 홍익대학교 · 주최: 민주노총

〈인터뷰〉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 대표 “인권은 당사자가 찾아야죠”

두발자유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의 공동대표를 만났다. 학생의 처지임을 고려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고근에)

▷ 두발문제에 대한 학생연합의 주장은 무엇인가?
“완전한 두발 자유화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자고 해도 학생회가 발원권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해'하면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구조가 안 돼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자율이 '자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는 자율 화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 이해해... 여기까지만 들어 줄게' 하는 식으로 우리의 주장을 양보 받으려는 게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런 거, 당연한 것을 지키려는 거죠.”

▷ 직접 활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인권은 당사자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냥 하늘에서 던져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두발문제도 그냥 둔다고 해서 언젠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두발자유화 주장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가?

“학교마다 차이가 커요. 지방 쪽에서는 전부터 자율적인 분위기였던 학교도 있고, 서울에서도 학교마다 다른데,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는 있어요. 하지만, 규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도 내일 두발 검사한다고 했는데... 개질러구요.”

▷ 관련기관에 문제해결을 요청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럼요. 그런데 두발 얘기 꺼내면 똑같은 말만 해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학교에 이래라 저래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썼더니 교육청에서 집으로 전화했었어요.”

▷ 학교 내 인권문제가 두발 문제만은 아닐 텐데?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문제예요. 자율과 자치는 없고, 통제되는 분위기가 말이에요. 체벌만 해도 그래요. 저는 '교육적 체벌'이라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약속했는데, 학생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면 학생은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나 죄의식보다는 폭력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는 거죠.

학교가 수직적인 교육구조라서 그래요. 교장이 왕이고 교사가 신하고 학생이 노예같은...

체벌이나 성차별 같은 인권침해도 앞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방 학교 중에서는 소지품 검사나 학생회 활동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는 예들도 있어요. 학교의 여러 가지 인권문제를 이야기 해야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이번엔 폭행수난 “수당 지급·블랙리스트 폐기” 시위 도중

대우조선 사내하청기업의 부당행위에 항의하던 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인 대우조선 측 관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9월 9일자 참조>

대우조선(거제도 소재) 사내하청기업인 '소영기업'의 노동자 유창식 씨와 김승태 씨는 25일 오전 7시 경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대우조선 인력부 소속 직원 30여 명에 의해 현수막을 뺏기고 구타를 당했다. 당시 유 씨와 김 씨는 '소영'을 상대로 △주·월차 수당의 지급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폐기 등을 요구하는 출근투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유 씨에 따르면, 대우조선 인력부 직원 안정주 씨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협박했고, 곧이어 인력부 소속 직원들 약 30명이 몰려와 유 씨와 김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유 씨는 전치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김 씨는 어깨 인대가 끊어지는 등 무려 전치 6주의 상해진단을 받아 27일 수술을 받는다.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요구 확산

회사로부터 주차·월차·휴일수당 등을 일절 받지 못한 채 일해 온 유 씨와 김 씨는 지난 6월 5일 소영기업이 더욱 불리한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자 퇴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회사는 고의적으로 퇴사처리를 지연시키며 이들의 취업을 방해했다. 또 대우조선 인력부도 이들의 신상을 파악·관리하고 있어 더 이상 대우조선 하청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을 거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되었다.

이에 유 씨 등은 지난 7월 26일부터 대우조선 서문에서 출근 시간에 현수막을 들고 주·월차 수당의 미지급 및 취업 방해 등의 부당행위를 알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지난 8월 5일 통영 지방노동사무소는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휴일수당 및 주차·월차수당) 총 2백24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소영기업에 지시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껏 소영기업은 '절대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유 씨 등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이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원청회사인 대우조선 측 직원들이 무리하게 대응한 배경엔 '하청기업의 비용상승을 원치 않는' 대우조선 측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해석이다. 유창식 씨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주하청을 주는 원청기업으로서 '소영기업' 사태를 선례로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주·월차·휴일 수당 지급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실제 유 씨 등의 투쟁 이후 노동부에 집단 진정이 잇따르고, 8월 31일 현재 4천여 명이 '착취한 임금인 주·월차 수당 지급과 외주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파악과 개선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확산되고 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28일(목)

제 170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정통부 '공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정보통신부가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 및 검열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이하 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 관련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분쟁조정기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검열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처럼 언론보도를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21일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망법'에서 빠진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독소조항, '이법'에서 '저법'으로

우선, 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불온통신' 관련조항(제53조)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통부는 당초 '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조항을 새로 삽입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통신망법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한 대신 통신사업법에 관련조항을 존치시킨 것이다. 이 조항은 99년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개정안은 존폐가 논의되는 윤리위의 기능과 위상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윤리위 업무에 '정보내용등급자유표시촉진' 기능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분쟁 조정' 기능을 새로 추가하고, 윤리위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는 "통신망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통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하며 이

를 보도시키고, 한편에선 통신사업법에 그 내용을 슬쩍 집어넣음으로써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보안검열 부활

한편,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기반보호법) 제정안은 '온라인 시위 규제'와 '국정원 개입'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기반보호법(안) 15조와 33조는 '온라인 시위 규제'와 '처벌'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이는 최근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벌어진 '온라인 시위'와 같은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을 철저히 규제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이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 수립,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업무 지원과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경보조치, 대응시스템 구축, 침해 예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제6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 조항은 94년 안기부의 전횡을 막기 위해 각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다시 국정원에 되돌리는 것"이라며 "이는 사이버상의 보안검열이며, 나아가 국민개개인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장애영 정책실장은 "최근 정통부가 내놓은 법안들은 지배권력이 인터넷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돈하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조)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본지 발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 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중한 점 △현재도 공산주의사상을 갖고 있다고 추단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약법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의 소송대리인 차병직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의 가능성만으로 보안관찰법 상 제법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시국의 변화를 감안하면 더더구나 제법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9월 들어 새로 재판부가 구성되자 26일 변론 재개 신청을 했지만, 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선고재판을 열었다. (심대섭)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일방적 '규제와 통제'가 더 이상 '보호'라는 명분으로 치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집행위원장 김정현, 이하 문화연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화연대는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인권단체에 '청소년보호법 대체 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대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유해한 경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제정취지와는 달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문화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은 그 심의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짓말>, <춘향전> 논란과 같은 문화검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문화적 권리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 이동연 청소년문화위원장은 "청소년이 사회 주체로 인식되고, 매체 역시 수용주체인 청소년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이 포함하고 있는 유해매체에 대한 보호한 규정을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겪는 △노동현장에서의 저임금과 차별,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 △청소년들의 창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조치 △교육의 주체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소년진흥법'으로 청소년보호법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공대위가 구성된 이후 네티즌의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운동 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고근예)

소과개정 미국방문단, 활동 본격화 미 상원의원 및 주미대사 면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과)의 전면개정과 매항리 폭격장 폐쇄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사회단체 대표단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정현 신부 등 '밤미 대표단'은 25일(이하 미국시각) 폴 웰스톤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웰스톤 의원으로부터 "미 의회에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소과개정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밤미 대표단은 양성철 주미대사도 만나 '소과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미리 준비한 서한을 통해 △대사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부속 문서에서 환경·노동·검역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이 이번 소과 개정 협상에서 이 조항의 신설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확증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며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했는지 △이상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대사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양성철 대사는 보도내용이 오보였다고 해명하며, "소과는 한미 동맹 관계라는 큰 구조 속에서 원만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표단은 22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열린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섬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 집회에서 연사로 나선 문정현 신부는 "미군은 즉각 비에케스와 매항리의 폭격장을 폐쇄하고, 한국과 푸에르토리코를 떠나라"고 주장했다. (이창조)

제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한 제소자가 법원, 검찰, 교도소의 단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감 중에 지명 수배되었다가 출소 직후 연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최근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편오만(42세, 9월 15일 출소)씨는 지난 25일 의정부부민회시험장에서 기소증지자인 것으로 확인돼 연행됐다 20여 시간만에 풀려났다.

편 씨가 연행된 사유는 98년 광주교도소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고로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것. 편 씨는 99년 7월 청송제2교도소 수감 중 벌금납부명령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편 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편 씨는 출소직전인 9월 7일 가족들을 통해 수원지검에 벌금 150만원을 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편 씨가 정식재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제탐지명령을 내렸고 결국 편 씨는 본의 아니게 수배자 신세가 된 것이다.

사건 담당인 광주지법 3단독 문정현 판사실은 "광주지검의 이석환 검사가 기소장에 표기한 피고의 (구속 전)주소지(의정부)로 출두명령서를 보냈으나 편 씨가 재판정에 계속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소제탐지를 명령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편오만 씨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구속전 주소지로 출두명령서를 보내고 기소증지자로 전국에 수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법원은 벌금을 문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사과 한마디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법원이 공소장만 제대로 읽어보아도 피고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던 검찰과 교도소의 업무공조만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15년만에 교도소 밖 생활을 하게 된 출소자에게 20여 시간의 연행은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고된 행정착오였다. (김보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29일 (금)
제 170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무지와 뻔뻔스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이런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준식 씨에게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어" 보안관찰 처분은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선 보안관찰법이 지닌 인권 유린의 구조에 대한 아무런 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옛날에 선고받고 끝내버린 사건을 다시 들먹이며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보안관찰법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법이며 법원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이밖에도 보안관찰법의 인권침해

소지는 한 둘이 아니다. 보안관찰법은 가족 및 동거인 상황, 교우관계, 월수, 재산상황, 주요활동사항, 여행에 관한 사항 등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거의 무한대의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법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일상 생활에 코를 처박고 연신 냄새를 맡아대면서 그 당사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참여 없이 행정부서에서 자의적으로 보안처분을 내리면 그 대상자는 매일 매시간 족쇄를 끌고 다녀야 한다.

보안관찰법은 한 인간의 속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 볼 권능이 있는 양 그 내심을 억측하여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규정에 보안관찰법은 정면에서 짐을 뺄어 대는 것이다.

그간 당국이 서준식 씨를 표적 삼아 자행한 일들만 보아도 보안관찰법이 목격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확인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안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의 발동이자 서 씨와 같은 인권운동가의 발목을 낚아채려는 짓을 놓아두는 것이다. 서 씨가 재판에서 선고받은 7년을 다 채우고도 재판도 없이 10년의 옥살이를 더 해야 했던 것은 보안관찰법의 아비인

사회안전법에 의한 것이었고, 그 세 끼인 보안관찰법은 '유서대필사건'의 진실규명에 힘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당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글을 쓰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에게 두 번의 옥살이를 더 안겨 주었다.

권력과 인권침해는 본래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그에 맞선 인권운동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서준식 씨가 10여 년이 넘도록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이면서 그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그의 인권운동의 일환이었다. 그런데서 씨가 벌여온 인권운동을 '반사회성의 징표'로 바라보는 보안관찰법은 인권운동에 대한 보복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서준식 씨와 같은 인권운동가를 일상적으로 박해하고,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잡아 가둘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닌 폭력이다.

폭력에 대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준식 씨는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에 자신이 작은 도구로서 쓰여지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고 말해왔다. 물론 그는 혼자가 아니며 악법과 폭력에 저항하는 모든 자유 양심들이 반 보안관찰법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시대를 거스른 촌극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다.

2000. 9. 28
인권운동사랑방

커밍아웃 홍석천씨, 방송에서 '아웃' 각계, 흥씨 지지 선언 준비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한 연기가 무대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관련 인터뷰 3면).

MBC 어린이 프로그램 <뽀뿌뿌>와 KBS 제2라디오 시트콤 <우리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는 지난 22일 커밍아웃(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한 연기자 홍석천(29) 씨에게 출연증지를 통보했다.

홍석천 씨는 방송출연을 못하게 된 데 대해 28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출연취소 통보를 받으니 납득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힌 것 때문에 출연취소를 통보받으니 섭섭하다"고 밝혔다. 흥 씨는 일부인론이 방송국과 합의해서 출연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입장에서 어린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뿐이다"며 방송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석천 씨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문화연대, 동성에 전문지 버디 등 6개 단체는 28일 성명을 발표해 "일부 언론이 흥 씨의 성장체성을 앞다투어 폭로하고 방송사가 출연을 정

지시킨 것은 다양한 삶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는 '홍석천 씨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연락 2235-7422). [심보선]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청주지역 노동자, "간첩조직" 폭로

국가정보원이 협조자(프락치) 공작과 간첩단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청주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무개 교사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공작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 아무개 교사는 "동네 오빠인 국정원 직원이 지난 6월부터 찾아와 '간첩단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따르면,

국정원이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은 청주건설일용노동조합에서 일하는 박응용(37, 한국타이어 해고자)씨며, 이 교사가 회원으로 있던 '새아침노동청년회'(이하 새노청) 회원들이 박 씨에게 포섭된 조직원으로 지목되었다.

새노청은 98년 구성되었다가 지난해 해산한 단체로 노주호(청주건설일용노동조합 위원장), 윤태영(충북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염은경(대전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씨 등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이 씨는 "국정원에서 이들을 장기간 사찰해 왔으며, 이미 그들의 생활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은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해보려는 국정원과 수구집단의 무모한 기도"라고 비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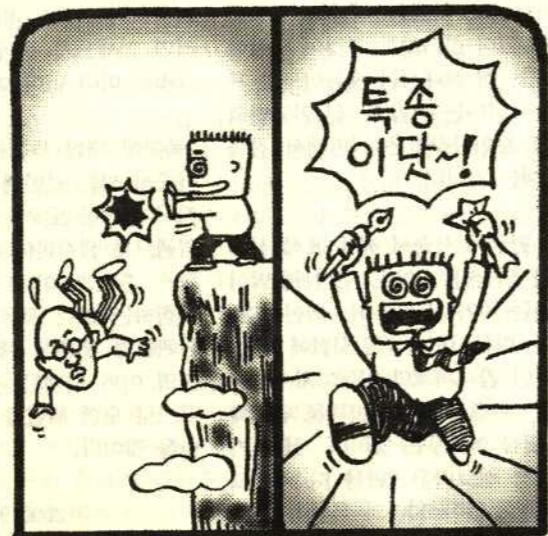
◎ 사건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배경

국정원이 간첩단 구성원으로 지목했다는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충북지역에서 '갈치거리'로 불리는 노동운동가들이다. 노주호 씨와 윤태영 씨가 각각 위원장으로 있는 청주건설일용노동조합과 충북여성노동조합은 99년 설립된 신규노동조합으로, 지역 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나 부당하고 문제 등을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타 사업장 문제에도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 6월(국정원 직원이 이 교사에게 접근한 시기)에는 지역 내 유망벤처기업인 '텔슨전자'에서 1백명 가량의 정리해고 발생한 데 대해 두 노조가 적극적으로 규탄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박응용 씨는 한국타이어(신탄진 소재) 노조민주화운동의 핵심인물로, 오랜 수배생활 끝에 99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올해 사면복권됐다. 최근엔 과거 한국타이어 노조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사건'이 있었다. 97년 이후 뿔뿔이 흩어졌던 노조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한국타이어 측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 박응용 씨의 설명이다. 즉, 이번 사건은 지역 내 유력 기업의 이해관계와도 관련 있다는 것이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터뷰> 커밍아웃한 연기자 홍석천 씨 "동성애는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출연증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8일 만난 홍석천 씨의 표정은 밝았다. 방송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친진난 만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면도를 못 해 덩수룩한 구레나룻은 그의 마음고생을 보여주는 듯 했다. [심보선]

▷ 방송중지통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상은 했지만 막상 통보를 받고 보니 납득이 잘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출연증지가 됐다면 모를까, 동성애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출연증지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커밍아웃을 한 이유는?

"커밍아웃을 꼭 생각해왔다. 처음에는 픽션 형식을 통해 할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나한테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생 숨기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월간지 기사가 붙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않으면 좀처럼 때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 커밍아웃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커밍아웃은 실존의 문제이다. 주위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부모님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이해는 못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커밍아웃 후 주위의 반응은 어땠는가?

"한 게이 형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평생 숨기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살고 싶었다. 또 앞으로 주위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다. 그냥 홍석천으로 봐주면 좋는데... 그렇지만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 동성애자를 불온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사회분위기는 다른 혐오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이 그렇다. 동성애 문제는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다. 성장체성을 떠나 인간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 문화방송의 <세 남자, 세 여자>에서 '쁘아송'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자인 듯한 연기를 했는데...

"사실 그 연기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미안하게 생각한다. 동성애자가 뿌아송이란 캐릭터로 연상될까봐..."

▷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연예인으로서 처음 커밍아웃을 해서, 동성애자들과나 차별받는 소수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됐다.

"알고 있다. 그냥 자유롭게 구속당하지 않고 살고 싶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렵듯이 나만 알고는 있다. 그러나 투사처럼 살기는 정말 힘든 것 같다. 투사가 못 되더라도 열심히 살겠다."

▷ 방송출연증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는가?(거침없이 말하던 흥씨, 이 대목에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방송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소송을 할 경우, 이기고 지고를 떠나 방송활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도 않다. 우선 워낙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흥씨는 요즘 하루에 백통도 넘게 전화가 온다고 한다. 인터뷰 도중에도 걸려오는 전화로 대화가 자주 끊겼지만 그는 묻는 말에 성실히 답했다.)

홍석천 씨 커밍아웃과 관련된 인권단체 의견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

동성애자라고 방송출연을 못하게 하는 것은 미개하고 우매한 처사다.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의 이면에는 동성애자를 정상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잘못된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 흥 씨를 지지하며 힘내라고 격려하고 싶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진이지선 지역운동센터 부장

동성애자의 존재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커밍아웃은 정치적 결단이다. 이 정치적 결단으로 방송출연이 중지된 것에 대해 분개한다. 또 흥씨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보도는 인권침해다. 언론에 의해 반강제로 커밍아웃을 한 흥씨가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해 할 것으로 보인다. 흥씨에게 지지를 보낸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출연을 못하게 된 것은)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

방송출연증지는 한국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다.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흥씨에 대한 테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편견을 깨고, 소수자의 권리찾기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돼야 한다.

◎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흥씨가 방송활동을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심대해질 경우 공인의 커밍아웃은 아주 어려워 질 것이다. 커밍아웃으로 인해 직접 불이익을 받을 경우 동성애자들은 음지로 들어갈 것이다. 이걸 아주 비극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9월 30일(토)

제 170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그간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던 법무부의 변명이 '근거없는 핑계'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99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법무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3급 비밀에 속하고, 만약 공개할 경우 관련 직위가 곤란하게 되며 북한의 흑색선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현황 등 보안관찰 관련정보의 공개를 철저히 거부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가 3급 비밀이 아니었음을 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적 우려만으로 비공개 안돼"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법 운영기본계획이 비밀로 돼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며 "정보의 공개로 보안관찰처분 직무 수행이 곤란해진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우려만으로 원고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규정취지를 몰각케 할 우려가 있

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 박 씨는 "법무부가 소송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

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결여돼 있었다"며 "법무부가 항소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말했다.

한편, 피고 측 소송수행자 진선희 검찰사무관(법무부 검찰3과)은 "재판 내용에 대해 할 말은 없다"며, "당연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태섭]

논평

동성애자에 대한 '상식의 폭력'을 멈춰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언제나 '장막 뒤에 가려진 존재'였다. 그들은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연예활동을 직업으로 가진 한 동성애자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다.

"내 커밍아웃은 성(性) 정체성 확립과 같은 거창한 얘기가 아니다. 살면서 기본적인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심정을 아나. 나의 가장 큰 목적은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려는 것이다"는 말처럼 홍석천 씨는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고자 당당히 동성애자임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러나 그에게 뒤따른 결과는 '방송출연 취소통보'. 동성애는 사회전체가 합의한 상식 선에서 벗어나고, 동성애자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국 너희 동성애자들이 꼭꼭 숨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겠지만,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하지만 사람은 각기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야 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게된다면 이는 그에게 실존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란 무엇인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터부이자 낙인'이 아니던가? 결국 동성애자에게 던져지는 사회적 지탄은 '상식'의 이름을 빈 '폭력'이며, '합의'를 가장한 '과시즘'인 것이다.

홍석천 씨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눈에 잘 띄지 않게' 살았다면 그는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홍 씨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홍 씨의 진실은 더욱 아름답다. 홍 씨는 자신의 커밍아웃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상대로 투쟁에 나선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비단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 아래 놓여 있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이제 '자신과 다름'을 이유로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다수의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홍석천 씨가 진정한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본다.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2000년 9월)

흐름과 쟁점

1. 착착 진행되는 '인터넷 통제' 수순

◎정통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계류중인 '불온통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9/21).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하려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는 '온라인 시위' 규제와 국정원의 통제권 부활을 명문화하는 조항마저 삽입.

◎시민사회단체들, '입법 저지' 선언하며 강력한 투쟁 예고(9/20). 네티즌들, 온라인·오프라인 오가며 '인터넷 검열반대' 시위(9/23)

2. 시대와 상식에 역행하는 수구세력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자가 60여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그중 대다수는 한총련 대의원(9/20)

◎청주지역 노동운동가들, "국가정보원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면서, 한 교사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했다"고 폭로(9/28)

◎서울고법 제5특별부,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있다고 추단되며,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서준식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계속하라고 판결(9/27)

3. 정리하고 계속되고, 비정규직 불안하고...

◎KBS, 인력효율화 명분 아래 환경직 종사자 94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방침 발표(8/31)

◎이랜드 파업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불법파견노동 판치고 단협 무시된 사실 드러나(9/6)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장시간노동·산재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9/20)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로자 인정' 여부 계속 논란(9/15)

4. "청소년보호법 가면 벗기자!"

◎문화개혁시민연대,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주제로 토론회 개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문화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점 제기(9/15).

◎문화개혁시민연대,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인권단체들에게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5. 권리찾기 나선 청소년들 ... '두발제한 반대' 9만여명 서명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두발제한 반대 서명'에 9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9/26).

◎지난 6월부터 거리 캠페인을 벌여온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 학생인권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발표 예정(9/30)

인권시평

- 학교와 종교의 자유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 9/5)
- 장애인에게 충고하지 말지어다 (하종강 한울노동연구소장, 9/19)
- 도보권도 인권이다 (정재숙 한겨레 기자, 9/26)

기고

-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제이 마크, 9/2)
- 부당착취와 취업방해에 맞선 대우 조선 하청노동자 (박정미, 9/9)

논평

-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며 (9/2)
- '선생님 사랑해요', 이면의 이야기 (9/9)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 (9/23)
- 동성애자에 대한 '상식의 폭력'을 멈춰라 (9/30)

주요판결 / 공판

-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서준식씨 보안관찰 지속" (9/27)
-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법무부의 보안관찰 관련 정보 비공개는 부당" (9/29)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국적 취득해야 한다" (8/31)
- 매항리 사격장 소음피해 관련 민사소송 및 매항리 사격장 폐쇄투쟁 관련 자 형사재판 속개(9/20·22)

성명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9/21)
-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9/28)

인권일지

1. 울산 핵발전소 건립반대 위한 농성단, 상경투쟁 (8/29)
2. 경찰,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태와 관련해 진보넷 압수수색 (8/29)
3. 국회 공전사태로 인권 관련법 표류 (9/1)
4. 비전향장기수 63명, 북한으로 돌아가 (9/2)
5. 국가정보원 민혁당 사건 억지수사 - 고3학생까지 소환방첩 (9/2)
6. IMF이후 한국 사회권 현황, 유엔 심사대 올라 -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검토 위한 사전회의 가져 (9/4)
7. 대인지뢰대책회의,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 (9/5)
8. 250여 인권활동가, "인권위에 대한 법무부 통제 막겠다" 결의문 채택 (9/6)
9. 고참 구타에 못 이긴 육군 이등병, 목을 매 자살 (9/6)
10. 기획예산처 사회보장예산 동결 및 축소 방침에 사회단체 강력 반발 (9/7)
1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창립 (9/7)
12. 장애인 고용촉진대회장에서 장애인들 기습시위, "장애실업대책" 촉구 (9/8)
13.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재 인정 (9/8)
14. 중앙일보 계열 인쇄회사 위장폐업, 노동계 "노조 말살 정책" 반발 (9/9)
15. 산재추방운동가 구기일씨 사망...원진래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9/10)
16.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피시통신 이용자 자료가 지난해에 비해 76.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9/14)
17.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9/15)
18. 인권실천시민연대,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9/15)
19. 경찰청, 전투경찰 '이름'만 바꾸기로 (9/17)
20. 군산 윤락여성 5명, 삼중 감금장치 속에서 화재에 의해 질식사 (9/19)
21. 건교부, '매항리 항공사고 위험' 보고서 쉬쉬한 사실 드러나 (9/20)
22.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집회 강제해산 (9/21)
23. 소파개정 촉구하며, 백악관 사이트에서 온라인 시위 벌어져 (9/21)
24. 소파개정을 위한 민간단체 대표단, 미국에서의 활동 목적으로 출국 (9/21)
25. 운전면허시험장 노조, 이무영 경찰청장을 '근기법' 위반 혐의로 고소 (9/23)
26. 서울대생, 지문날인제 폐지 촉구하며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전개 (9/25)
27.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회사 앞 시위도중 관리자들에게 폭행 당해 (9/25)
28. 연기자 홍석천씨 커밍아웃...방송출연 중지 조치에 각계 지지 움직임 (9/27)
29. 제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무성의 행정예 20여시간 억울한 구금 (9/25)
30. 안윤정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씨, 보안관찰면제 통보 받아

〈기타〉

© 인권하루소식 창간 7주년, '쏟소리' 모음 (9/7)

현장 / 르쵸

- 사무실 폐쇄된 매항리 주민대책위 (9/8)
- '마마노동자'를 아십니까? ... "체불임금 해결·고용승계" 농성 두달째 (9/22)

인터뷰

- 김동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 위' 사무처장 (성공화대 교수) (9/7)
- 최재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9/21)
-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 학생연합(준) 공동대표 (9/27)
- 커밍아웃한 홍석천씨 (9/29)

국제기사

- 〈선언문〉 '관용과 다양성, 21세기를 위한 비전'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넬슨 만델라) (9/1)
-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9/9)
- 구타·살해 위협 속의 시에라리온 소년병들 (9/16)
- 시에라에서 프라하로 - 프라하의 반(反) IMF, 세계은행 시위 (9/23)

토론회

- 정부의 무모한 간첩 비난 - 통신질서확립법 시민공청회 (9/6)
-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 2백여 활동가 참석 (9/5)
-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9/15)
-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 '디지털시대의 인간존엄성' 토론회 (9/19)

만화사랑방

- 진보넷 압수수색과 통신질서확립법 (9/1)
- 추석명절의 수배노동자와 양심수 (9/8)
- 외국인여성노동자에게 중질수술 강요한 약덕업주 (9/16)
- '이름'만 바뀌는 전투경찰 (9/22)
- 언론에 의해 '아웃팅' 당한 홍석천 씨 (9/29)

인권하루소식

2000년 10월

(제 1707호 - 제 1726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3일(화)

제 170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사람 있어도 포크레인 밀어붙여

월곡동 철거용역, '행인 검문'까지

철거를 강행하려는 용역회사측과 이를 지지하려는 주민들 사이에 충돌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월곡4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들이닥친 철거반원들의 강제철거 시도 이후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철거반원들이 '공권력'을 대신하듯 행인에 대한 검문까지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새벽 깨운 화재와 포크레인

29일 새벽 2-3시경 월곡4동 철거민대책위가 들어서 있는 상가건물 바로 옆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철

거민대책위에 따르면, 1차로 진화됐던 불이 오전 5시경 재차 타오르자, 곧바로 소방대와 함께 경찰이 출동했다. 그리고 30여분이 지난 뒤 밀려들기 시작한 철거반원들은 사람들이 들어 있는 건물의 외벽을 포크레인으로 찍어 가며 철거를 시도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철거민과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방문중이던 대학생들이 있었으며, 건물 내 사람들은 포크레인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한 끝에 철거를 저지했다. 2일 현재 철대 위사무실에는 철거민과 대학생 등이 남아 있으며, 이들은 "새벽이면 언제 철거반원이 들이닥칠 지 모른다"며 경

계의 눈빛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 대학생들 무작정 연행

29일을 전후해 많은 대학생들이 철거대책위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경찰서로 연행된 학생만 15명에 이른다. 우선, 29일 이후 마을에서 나가려던 대학생 11명이 연행됐으며, 29일 밤 대책위를 방문했다가 이튿날 오전 건물에서 나오던 대학생 4명도 중앙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6명에 대해 '화염병투척'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일 영장심사 결과 한국의국어대생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근 주민도 '철거반원 공포'

월곡4동에 상주하고 있는 신한환경소속 철거반원들은 건물 내 철거민들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공포'의 대상이다. 철거지역 건너편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덩치가 큰 철거반원들이 위압적 자세로 마을을 돌아다녀 불편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철거반원들이 지나가는 청년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까지 벌여 젊은 이들은 이곳을 지나다니는 것조차 꺼리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먹고 살 대책만이라도..."

월곡4동의 철거민은 주택세입자가 아닌 상가세입자들로 현재 3명이 남아 철거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철거민대책위원장인 문보준(37·식당운영) 씨는 "2년전 보증금 1천5백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 총 4천여 만원을 투자해 식당을 시작했는데, 달걀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는 말에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다"며 "가수용상가나 임대상가 입주를 허용해 줄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조)

'우리가 주체로! 권리를 찾아서!'

중고등생들, '학교민주화 선언' 발표

지난 9월 30일 서울 명동에서는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하 학생연합) 주최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학생들 스스로 준비해온 '학교민주화 선언'이 발표됐다.

학생연합은 집회를 통해 "억압과 통제가 가득한 학교는 학생의 불행을 조장하고 있다"며 "삶과 지혜를 터득해야 하는 학교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연합은 이날 발표한 '학교민주화 선언'을 통해 "두발·복장제한, 소지품검사, 체벌, 성차별, 종교의 강제 등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반대하며, 학생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이는 교과선택권과 대표선출권 및 자기규제권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획일적, 일률적 학생상을 조장하는 입시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통한 교칙의 개정 △교육 기획의 평등과 빈부, 성별, 신분, 나이에 따른 차별금지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참석자와 시민들의 자유발언대, 학생회·두발자유화 관련 설문조사로 마무리됐으며, 학생연합은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회가 참여하는 '학교민주화 공동선언'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고근예)

●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법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말한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데 확신이 어디 있느냐고 냉소하기도 한다. 어쨌든 확신이야말로 각자의 뉘이기 때문에 어떠한 확신을 갖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또 어떤 확신을 예찬하거나 비난 하는 것도 국가의 공증사항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식에 속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권력은 무엇을 처벌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 밀이 말한 바와 같이 국가권력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 위에 대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즉 처벌될 것은 구체적인 행위이지 확신이나 사상이 아니다.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본원칙을 훌륭하게 관철시킨 현정덕씨 판결 (2000/4/20 서울고법)에서 느낀 윤희함은 이번 서준식 대 표에 대한 판결(2000/9/27 서울고법)을 보면서 이내 사라 졌다.

확신법은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 고 일반형법—확신법만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형법이 아니 라!—을 위반하는 자"이다. 즉 확신법이란 구체적으로 일 반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범 행의 동기를 고려하였을 때 확신법으로 분류된다. 그러므 로 확신만으로는 애초부터 범죄가 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확신법을 말하는가? 예컨대 정치적 동 기에 의한 살인법(확신법)을 확신 때문에 통상의 살인법보 다 가혹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신법의 특권이 이야기된다. 이것이 자유주의 형법철학의 기본이다.

그런데 확신법을 처벌하는 우리의 특별형법들은 권위주의 적인 형법답게 확신법을 관대하게 처우하기는커녕 더욱 가 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확신에 입각한 일반형법의 위반자 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으로 탈선하여 일 반형법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까지도 오로지 확신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확신자체를 처벌기준으 로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확신의 철회여부를 석방의 기준 으로 보호관찰처분의 취소기준으로 휘두르는 것은 국가권 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테러형법이다.

물론 국가는 체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처벌권력이 타격해야 할 것은 확 신이나 사상이 아니라 일반형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행위 들이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자유이다. 개인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확신을 무한정 캐내어 죄주려는 우리의 감시와 처벌의 체계는 확실히 자유주의적으로 교화되어야 한다.

- 이재승 씨는 국민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

인권하루소식 10월 4일자 쉽니다.
주간인권을 기사넘쳐 한주 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 돌입 4일 자전거 순례단 발족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2백32개 단체 참여)가 국 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국민연대는 지난 9월 30일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서 시민홍보활동과 집회를 가졌다. 참 석자들은 집회 후 국회 앞까지 행진을 하며, "이번 정 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오는 4일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폐 지를 위한 자전거 순례단' 발족식을 갖는다. 순례단은 매주 수요일마다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행진을 하며, 시민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심대섭)

"무노조아성을 깨뜨리자!"

삼성해고자 1700여명 원직복직 요구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이하 삼성해복 투)는 2일 삼성생명 노동자 1천7백여 명의 해고 2년을 맞아 오전 11시 30분부터 을지로 입구 내외빌딩 앞에서 '삼성생명 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귀 쟁취를 위한 결 의대회'를 가졌다.

울산, 대구,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삼성 그룹 해고자 2백여 명은 '삼성재벌의 봉건적인 족벌세습경영' 과 '전근대적인 무노조 노동자 탄압'을 규탄하고 원직복 직을 요구했다.

삼성해복투 김성환 의장(48, 이천전기 해고자)은 "삼 성생명은 살생부(인력조정 시행지침)에 의해 98년 10 월 장기근속한 여성노동자들을 강제해고 했다"고 지적 하며, "삼성생명은 경영이 어렵다며 해고해 놓고는 그 해 연말에 1천억에 이르는 흑자를 봤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냈다"고 비난했다.

한편, 삼성은 올 5월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의 노조결 성 움직임이 있자, 유령노조를 만들어 사실상 노동자의 조직결성의 자유를 가로막았으며, 삼성중공업도 유령 노조를 통해 자주적 노조결성을 막는 등 무노조 경영방 침을 고수해 오고 있다.

노조결성 시도 중에 해고된 노동자들과 삼성생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삼성해복투를 만들어 지난 9월부터 전 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해오고 있다. (심보선)

● 정보생 ●

- 투자협정 반대, WTO반대, 세계화 반대 연합공연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서울"
- 10월 8일(일) 오후 5시-8시 · 중앙대 대운동장
- 주최: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02-778-400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5일(목)
제 170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경찰, 인권단체 홈페이지 '점령' '경찰폭력근절 캠페인' 비난 글 폭주

경찰폭력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 권단체의 홈페이지가 경찰의 항의와 협박성 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아래 인권연대)는 10월 한달 간을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과정의 폭 려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권리 방해 △유치장의 인권유린 및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 종 경찰폭력사태를 접수받고 있다. 그 러나 최근 인권연대 홈페이지는 인권 연대에 대한 비난과 욕설, 조롱과 협 박성 글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경찰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접수 창구에 항의문 도배

홈페이지(www.hrights.or.kr)에는 "인간쓰레기 같은 인권연대, '개XX 인 권이나 지켜라'는 욕설부터 "경찰관 여러분! 인권위원(인권연대 활동가·편 집자주) 명단을 기억합시다. 이들의 가정에 감도가 들어 가정을 파괴하더 라도 절대로 신고 접수하면 안됩니다" 는 상식이하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또 "난 누구?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감도지. 내가 열심히 감도질 할 수 있 는 이유는? 바로 인권연대가 있기 때 문이지"라는 글은 경찰폭력근절 캠페 인이 범법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인 양 매도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를 통해 "절도범, 강도범, 살인범, 한총련 등의 인권만을 중시하 는 '인권연대'라는 페이지에 항방(항의

방문·편집자주) 감시다"며 '도배질'을 선동하는가 하면, "조직원들의 과감하 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 사이버폭력 아닌가?"

한편, '경찰사람'이라는 명의로 글을 올린 한 시민은 "계시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이제는 사라지게 하자는 뜻으로 생각했는데 계시관에 올라오는 글들은 이러한 취지를 왜곡 하고, 악의적으로 인권연대를 음해하 는 글로 보여 매우 불쾌하다"며 "경찰 관 개인의 자질과 그 중 몇몇의 문제 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인권연대가 경찰을 상대로 시비나 거 는 단체인 것처럼 매도하는 여러 글은 계시관에 대한 경찰의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창조)

유령단체 동원 집회봉쇄 의혹 경찰청 앞 집회 "이미 찾아오"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경찰폭력근절 캠페인의 하나로 계획했던 경찰청 앞 집 회도 열릴 수 없게 됐다.

인권연대는 4일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려 갔으나, 집회에정 지인 경찰청 맞은 편 인도에 이미 집 회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생활환경보호회'라는 단체 명의로 신 고된 집회는 '집회시위로 인한 생활환경 보호 결의대회'로, 지난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종일 진행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경찰이 이 지역 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인권연대 조영민 간사는 "경찰이 프 라이버시를 이유로 주취측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앞 시위를 막기 위해 유령단체를 동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창조)

"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

사건 관련자, 시·도별 공동접수 예정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명예회복 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오는 16일 국가보안법사건 관련자들이 시·도별로 모여 집회를 가진 뒤, 공동으로 명예회복 신청서를 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사건 중엔 사회변혁을 지향한 조직 관련 사건도 있는 만큼, 접수 이후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박태균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보법 사건 관 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명예회복을 신청하고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사건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정치사건의 피해자들도 16일 공동으로 명예 회복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창조)

원손잡이가 '변태'가 아니듯...

커밍아웃 지지모임 발족

홍석천 씨가 동성애자임을 밝힌 것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에 맞서기 위한 모임이 발족됐다.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이석태(변호사)·정범구(국회의원)·김훈(시사저널 편집국장) 씨 등 사회단체·법조·여성·문화·인론·정계 인사들로 구성된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은 4일 안국동 너티나무 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성적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커밍아웃 2000'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커밍아웃 2000' 캠페인 사이트(www.comingout2000.org)도 개설했다.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씨는 "발족선언문에 서명한 사람 이외에도 네티즌 1천여 명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3백여 명이 서명참가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하은희)도 4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동성애자 문제는 사회적 억압구조와 맞물려 있으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수자라고 해서 폭력과 차별, 비인간적인 대우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보선]

◎ '동성애' 일문일답

독자들이 홍석천씨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련했다(편집자주).

▷ 동성애도 다양성이라는 이름아래 인정돼야 하는가?
원손잡이가 사회에 해악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자도 역시 그렇다. 원손잡이에게 오른손잡이가 되라고 '권유'하는 것은 다수의 기준에 맞출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성애자가 다수인 사회에서 동성애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유전적·환경적·문화적 요인 등 성적 지향의 근본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원손잡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되듯, 자기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 동성애는 동물적 성행위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성애가 성행위에 국한되지 않듯 동성애도 그렇다. 동성애자들도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며, 거기에 성행위가 포함되는 것이다.

▷ 어린이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닌가?
홍석천 씨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출연정지 당한 것에는 반대하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출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어린이들이 동성애를 배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씨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가진 어린이가 자기의 성적지향을 일찍 깨달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성애자가 억지로 동성애자로 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 중엔 우선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들은 기한이 늘어난 만큼 비정규노동자를 더 많이 쓸 것이고, 현재의 정규노동도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과연·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대위'(아래 과연철폐공대위)는 2일과 4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계약직 노동을 확산시키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비정규노동자를 억제하고 정규직화하려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비정규노동자를 늘리려는 사용자 쪽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란 비판도 잇따랐다. 이제껏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에 한해서만 계약직을 허용할 것"을 주장해왔고,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정기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었다.

또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실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 자영업주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근로자에 준한 자'로 규정하겠다는 부분도 문제다. 정부는 이들을 해고·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준한 자'라는 하위개념에 묶어둠으로써 오히려 노동관계법의 보편적인 적용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의 요지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과연철폐공대위 회원들은 4일 오후 김호진 노동부장관 등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열리던 서울 명동의 전국은행연합회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종합대책을 철회하고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주영]

● 정보생 ●

- 민주화운동 심포지움
 - 10월 6일(금) 오후 4시30분-7시30분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02-766-462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6일(금)

제 170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해외단체와 공동투쟁 결의”

‘소파개정투쟁 방미대표단’ 귀국보고

12일간 방미 활동을 벌였던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국민행동)의 대표단이 지난 2일 귀국했다. 대표단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개정과 미군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 네트워크 형성'을 이번 방미활동의 큰 성과로 꼽았다.

5일 방미 성과 보고회를 가진 대표단은 "War Resisters League(WRL), International Action Center(IAC), Asia Pacific Center for Justice and Peace(APCJP) 등의 해외 단체들과 집회를 가지면서 매항리나 소파,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폭격장 문제 등에 대해 연대하여 싸워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행동은 오는 10일-20일 사이에 백악관, 미대사관 등을 상대로 한 온라인 시위를

해외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위는 지난 9월 21일에도 한 차례 실시된 바 있다.

대표단은 또 방미 기간 동안 미 의회·언론 관계자들과도 접촉해 매항리 폭격장 폐쇄와 소파 개정을 원하는 한국인들의 입장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9월 28일자 참조).

대표단 실무 책임자였던 최재훈(국제민주연대) 씨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재미동포들과 해외 단체들에게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알릴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였다"며 "이번에 형성된 국제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단체들의 활동 폭과 국제적 운동의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대표단이 당초 계획했던 미 국

무성 한국담당 관리와의 면담은 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해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심대섭]

“비정규직 권리 보장”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맞서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10월 5일자).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 등, 아래 비정규직공대위)는 5일, 서울역 광장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서명과 거리상담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2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공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비정형노동자 보호대책'은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킬 뿐"이라고 비난하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이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공대위는 오는 10일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고 정부 규탄 집회 및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캠페인을 매주 수요일 벌여나갈 예정이다. [고근예]

● 정보생 ●

- 매항리폭격장 폐쇄, 소파 전면개정, 양민화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민행동의 날
 - 때 : 10월 7일(토) 오후 2시 30분
 - 곳 : 서울역(부산, 대구, 광주에 서도 동일한 행사 개최)

만화사랑방

이동수



<현장> 철거촌 두 풍경

◎최촌마을 주민들의 천막농성장

천대 매트리스가 나란히 깔린 천막 안에 한 소녀가 쓰러져 잠을 청하고 있다. 인기척에 놀라 일어난 소녀는 낯선 남자의 출현에 잠깐 당혹스러워 했다. '기자'라는 설명에 안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난 소녀는 대화를 나누는 시종 수줍은 손장난을 멈추지 않았다.

경기도 구리시청 입구의 10평 남짓한 천막. 이곳이 다슬이(구리여중 1년)의 현 주소지다. 6개월 전까지는 '최촌마을'에 살았지만, 살던 집이 다 철거된 이후 얼마아빠를 따라 천막으로 '이사'를 왔다. 다슬이의 천막에는 모두 네 가구 14명이 산다. 최근에 시청과 싸우던 아줌마 두 분이 구치소에 갔기 때문에 지금은 12명. 그 중엔 미취학 어린이 3명과 초등학교 1명, 중학생 3명이 포함돼 있다.

최촌마을은 지난해 여름 강제철거 반대투쟁이 거세게 벌어지면서 주목을 받게 된 지역이다(관련기사 본지 4월 8일, 99년 7월27일, 8월 4일). 올 4월 남아있던 가족들마저 모두 철거를 당하자 주민들은 시청으로 옮겨와 천막농성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농성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전망은 밝지 않다. '가수용시설' 마련과 '임대주택 입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건설회사측에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는 이들을 '돈 더 받아 내려는 집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누구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저항'으로 이들을 바라본다.

다슬이는 비올 때 비 세는 것, 여름엔 더워, 지금은 아침 저녁의 쌀쌀함이 견디기 어렵다면서도, 그마저 이젠 익숙해졌다고 한다. 천막이 왕복 6차선 도로 바로 옆에 위치했기에 자동차들의 소음이 '기자'의 귀청을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데도, 그 또한 다슬이에겐 '익숙한 것'에 불과했다. 다슬이에게 바람이 있다면 공부를 맘껏 하고 싶다는 것. 학교에 혼자 남아있기 싫어 집(천막)으로 돌아오지만, 천막 안에서 아무 공부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냥 집"이면 좋다는 것이 수줍은 다슬이의 요구사항이었다.

◎울타리 너머 판 세상, 인창마을

최촌마을에서 한 정거장 지난 곳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뿜 뿜 뿜 들려져진 철제 울타리 안으로 포크레인이 바빠 움직이고 있는데, 한쪽 편에 나무판자와 슬레이트로 열기설기 엮은 집 30여 채가 다다다다 붙어 있다. 구리시 인창동 인창2지구 91번지. 90년대 초반까지 벽돌공장의 사원주택이었던 이 곳도 이제 철거가 머지 않은 곳이다. 많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남은 주민은 이제 5세대. 이미 철거를 하라는 행정대집행 명령이 떨어진 곳이지만, "최촌마을을 덕택에" 아직 철거의 긴박함은 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창조)

◆ 알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4일 갖기로 했던 자전거 순례단 발족식은 국회개원 이후로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① 다산인권

격주간 인권소식지인 <다산인권>이 지난 4일 창간됐다. 인권하루소식은 <다산인권>의 창간을 계기로 각 지역에서 묵묵히 '인권과수꾼'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인권소식지'들의 현황을 4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기대하며(편집자주).

"우리도 동지 들고 노동3권 도전합니다"(수도권 레미콘 운송협회의 출범 소식).

<다산인권> 창간호의 머릿기사다. 3회에 걸친 준비호를 내면서 호흡을 가다듬어온 <다산인권>이 마침내 시위를 날렸다. "오직 진실만이 가장 큰 힘이라는 믿음으로 시위를 당겼고, 인권유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개의치 않고 겨냥하겠다"는 것이 창간의 변.

다산인권센터(소장 여운철, 수월 소재, 2000년 3월 창립)가 발행하는 <다산인권>은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해 나가는 최전선에 서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정책실장은 "지역의 많은 노동·인권문제를 접해왔지만, 그것이 인권의 시각에서 이슈화되지 못해 왔다"며 "인권문제를 계속 발굴·쟁점화시키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면서 현장과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다산인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역인권문제 발굴 힘쓰겠다"

단체의 전신이 노동상담소였던 만큼, 다산인권센터엔 노동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따라서 <다산인권>에는 노동인권 기사가 꾸준히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모든 인권현황을 담아내는 것"이 <다산인권>의 편집방향이다. 박진 실장은 "특히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인권문제를 발굴해내는 매체이고 싶다"고 말한다.

<다산인권>은 현재 5백부 정도가 발행돼 지역 내 각 사회단체와 노조, 전국의 인권단체에게 주로 발송되고 있다. 다만 일반인들에게 전달될 경로가 아직 없다는 점이 아쉬움이다.

<다산인권>은 '지역 인권현황 기사와 인권계시판'(1면), '인권기사와 인권정보'(2면), '인권칼럼'(3면)의 게재를 기본 구성으로 삼을 예정이며, 앞으로 주간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칼럼의 필진으로는 손경미(노무사), 최종식(경기일보 기자), 염태영(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한옥자(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고길섭(문화연대 편집주간) 씨가 참여한다.

"많은 시민들과 지역운동단체, 그리고 지역활동가들이 인권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길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 <다산인권>의 희망이다.

◎ 전화 : 031-213-2105 ◎ 전송 : 031-212-1006

◎ 이메일 : humandasan@hanmail.net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7일(토)

제 171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아닌 민주화운동 계승작업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6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에 즈음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방안' 토론회에서는, 한편에서 국가가 나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보상작업이 전개되는 이중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이 새로운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가칭 민주주의 기금을 만들어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이 운동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와 내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삼웅 대한신문 주필은 "박정희 기념관에도 나랏돈 2백억원을 쓰겠다고 나서는 정부에게 최소 2백억원 이상의 국고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상징적이라도 아주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또 "독재와 유착했던 사회 세력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풍토도 조성돼 있지 않다"며 △독재인사 명부작성 △독재시대의 죄과에 대한 사과 및 속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6·10 항쟁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음 세대에게 민주화운동을 유의미한 것으로 전하기 위해서 △교과서 개정 집필 △민주주의 관련 연구 지원 촉진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에 연대성을 표시해야 한다

논평

두발 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

최근 강압적인 두발 단속에 항의하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주목을 끌었다. 서명운동에서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발표에까지 이른 집단적인 품물거림에 지난 4일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자율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인격모독이다', '체벌과 징계의 남용을 부른다'는 등 두발 단속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인권 침해시비를 물고 다녔다. 그런데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린 추억(?)과 분노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할 만큼 오랜 관행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드러냈다.

교육부의 권고도 이런 청소년들의 요구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데서 나온 듯 하다. 그러나,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각 학교에 교육부의 지침이 하달되면 두발 자유화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실 두발을 통제하라는 지시나 두발을 자유화하라는 지시나 본질상 다를 바가 없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거에 해결된다면, 또한 청소년들이 그런 방식으로 두발 자유화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화가 아니다. 문제는 교육부의 권고대로 '학생회 등 학생 자치회를 통한 학생들의 충분한 토론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율결정을 원한다면 교육부나 각급 학교 당국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아이들은 결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 '아이들의 결정은 학교 생활의 조화와 안정성을 위협한다' '책임을 이행할 능력을 가질 때까지 권리는 유보된다'는 생각 말이다. 그러면서 '자율 결정'을 권고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한판 쇼에 불과할 것이다.

'자율 결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의견이 진지하게 고려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두발 자유화 논의가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탐색하고 판단할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설가 서해성 씨는 "현재 국민에게 인식된 반민주행위자는 이근 안 한 명에 불과하다"며 "과거 반동세력에게 낙인을 찍어 민주화운동정신이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태상 변호사는 "시행령에 있는 민중생존권운동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에 규정돼야 보다 분명하게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면으로 이어짐

“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 주장 민변 대전지부, 관련 경찰 처벌 촉구

경찰관이 대학생을 연행하던 도중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지부장 이현, 아래 민변충청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 ‘고려대생 장아무개 씨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벌,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충청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치원 봉암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고연전’에 참가중이던 고려대 서캠퍼스 학생 3명을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고려대 서캠퍼스 여학생회장인 장아무개 씨가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봉암수사대과장으로 호칭되는 자가 “팔을 잡은 채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 민변충청지부는 주장했다.

민변충청지부는 “이번 사태는 여성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신체적 모멸감을 심어주면서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에 임하려는 수사편의주의와 수사기관의 인권의식 박약으로 인한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성명에는 대전충남여민회, YMCA 성폭력상담소, 대한가족보건의학회 대전충남지회 성폭력상담소 등도 참여했다. (이창조)

행자부에 “지문정보 폐기” 요청 서울대생 32명 주민증 반납

서울대 지문날인거부모임(대표 오석영)은 6일 ‘지문날인제 폐지와 지문정보 폐기’ 등을 요청하는 서울대생들의 서명용지를 행정자치부 민원실에 전달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6일자).

지문날인거부모임은 지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문날인 반대주간’ 행사를 가졌으며, 행사 기간 동안 4백8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또한 지문날인거부모임은 지문날인제 폐지운동의 하나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32명의 주민증과 항의서한을 이날 행정자치부로 발송했다

이들은 앞서 오후 1시부터 1시간여 동안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뒷편 인도에서 퍼포먼스를 갖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창조)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1면에서 이어짐

조명우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지원과장은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됐지만 입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교원 미임용자, 지명수배자, 해외 민주화활동자 등이 제외돼 있고 △명예회복의 방안에 대해 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돼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심보선)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②

울산인권소식

ULSAN HUMAN RIGHTS WEEKLY NEWS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로 불린다. 지난 총선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동자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자의 도시’에서도 인권의식은 ‘별로’라고 한다. 노동자 자신들의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간울산인권소식>(아래 소식)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소식>의 발행처인 울산인권운동연대는 98년 ‘영남위원회’ 사건 대책위원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단체다. 대책위 활동 속에서 맺어진 인권단체들과의 교류가 창립(2000년 6월 23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소식>은 단체가 정식 창립되기 전인 99년 11월부터 만들어져 현재 43호에 이르고 있으며, 매주 3백부 가량 발행되고 있다.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씨는 “지역의 특성상 노동문제와 노동권리찾기 움직임 등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때문에 <소식>에는 지역 노동자들의 사건이 주요하게 보도된다. 43호의 머리기사로는 43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김석진(현대미포조선 해고자) 씨의 소식이 실렸다. 발행 초기부터 김석진 씨의 복직투쟁을 꾸준히 보도해 온 <소식>은 중앙언론과 지역매체들이 외면하고 있는 빈틈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해고노동자들의 모든 집회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원천 봉쇄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해서도 활발히 알려내고 싶은 게 <소식>의 바람이다.

“노동권의 올바른 이해를 기대하며”

<소식>이 자임하는 역할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즉, 활발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지역 내 사회운동진영의 유희유자 ‘알림이’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박영철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농성 투쟁을 보면서 “대기업이나 투쟁이 활발한 사업장에 보도가 편중되었던 것이 아니냐”는 반성도 했다고 한다. 앞으로 단체에서 운영중인 사회권모임과 자유권모임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숨겨진 인권 문제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노동자의 파업을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것”과 “노동권과 진보적운동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식>의 편집진들은 바쁘게 뛰어나고 있다. (이창조)

◎ 구독문의 : 052-242-1119 / 팩스 052-242-1120

◎ 이메일 : ulsanhr@ulsanhr.jinbo.net

◎ 홈페이지 : http://ulsanhr.jinbo.net

◎ 후원계좌 : 농협 823-01-235248(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10일(화)

제 171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허가제 도입배경으로 △연수생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현행법의 문제 △연수생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범위관례 누적 △외국인 노동자

의 끄찍한 현실이 알려져 더 이상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골자는 △계약기간 1년으로 하고 두 번 연장 가능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연수업체를 선정하던 것에서 노동부가 고용허가 △노동관계법 적용 △중소기업협의회가 아닌 노동부에서 지도관리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내용이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기획단)이 개최한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조·학계 인사들 간에 국보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부딪혔다.

첫 발제자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국보법에 대해 “지금 서점엔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책까지 나온 지경인데 국보법마저 개정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며 국보법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백승현 변호사는 “우리보다 이념적 대립이 심한 대만도 국가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금도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언제까지 폐지는 않고 논의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동국대 법학 교수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통일된 독일도 비슷한 법률이 있다’고 했지만 그 법률은 나치 등 일부 극단주의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갖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혁명 사건’ 구속자 박정훈(현 이화외고 교사) 씨 부인 유영순 씨는 “국보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미참한 수사 과정에 모욕까지 감수해야 된다”며 “인간의 가장 작은 자존심마저 유린하는 국보법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행사를 주최한 기획단 단장 유재건 의원은 “국보법 개정법률안에 반영할 의견들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며 “모임 내용을 당정회의에 반영하여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태섭)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엔 많은 제약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결성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는 “고용허가제가 일본전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진(28) 선전국장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선택 및 이동의 권리가 없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고용계약 연장 등을 위한 단체행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관계법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노동부가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중지 조치를 통해 언제든지 출국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듯이,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쓰도록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흥·요식업을 대상으로 제외해 불법취업자의 60%가 넘는 중국동포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고, 중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주에 대한 ‘노예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는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골프장 경기 보조원, 고등학생 실습생 등과 이주노동자의 이해는 일치한다”며 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14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노동·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주노동자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심보선)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오늘의 말말말... 사라져야 할 말

"경영자는 딸도 없나? 니 딸도 당해봐라." 가슴 서늘하게 하는 이 구호는 얼마 전 롯데노조의 투쟁현장에서 여성조합원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 담겨진 문구.

"조선처녀 윤금이가 미군의 손에 죽어간 것을 추모하며 만든 이 노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뒤이은 노래말... "♪- 조선의 처마사이로 들어온♪-".

그제 있었던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이 주관한 문화제에서 정태춘씨가 한 발언과 노래말.

"당신의 딸처럼 생각한다면 10대를 성적 대상으로 살 수 있겠소?" 원조교제, 10대 매매춘을 공격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

이쯤에서도 필자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들을 모아다 놓은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혹시나 그런 분들은 정말 여성인권에 대해 귀담고 살았던 과거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분노하고 절망감을 맛보는 것은 어디에서도 여성 개인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오직 자본가에게 침탈당한 노동자와 훼손 당한 민족의 자존심으로서의 조선의 처녀가 있을 따름이다. 그들이 당한 문제는 그것이 투쟁의 대상들과의 전선 형성에 유리한 고지를 제공할 때만 받아들여지고 화려하게 포장된다는 점이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소위 인권을 말하고 진보를 말한 운동 내에서도 여전히 여성은 한 존엄한 인간이기보다는 적과 아를 구분할 때 그의 처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지탄받거나 혹은 보호받는 대상으로 될 뿐이다.

그런데 왜 '개인'의 고통보다 '집단의 수치'가 문제시되는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여성이 속한 집단이 당한 명예 훼손·수치로 인식되어 온 것은 여성이 집단의 성원이 아니라 소유물·교환물·재산으로서 간주되어온 가부장제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진보진영과 그 중에서도 인권운동진영 내에서 내재화된 가부장제외식에 대한 뚜렷한 저항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여성들의 인권은 말로만 외쳐지는 공허한 언설이라는 사실의 반증이다. 우리말이 생겨난 기념일인 한글날을 보내며 여성의 인권이 우리의 언어 속에도 피어나는 그날이 오길 바래보면 너무 과도한 욕심이 될까?

정주연 씨는 '운동사회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 회원이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활동가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1. 어울릴 수 없는 두 이름, 민주화운동과 박정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토론회-"박정희 대신 민주화정신을 계승하라"(10/5) 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으로 제적·구속된 '71동지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보완추구, 박정희 기념관 반대(10/4)

2. 두발자유화는 학교민주화로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열고 "두발기준과 관련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10/4)

3. 비정규직 오히려 늘린다 정부, 현재 1년까지로 되어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제출키로(10/1)

4. 포돌야, 네 본분을 아느냐? 경찰, 아셈회의장 주변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인근 건물주·회사에 '위장 집회'신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과 관련해 인권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을 '비난 및 헐박'성 글로 도배질

5. "커밍아웃을 지지한다" 홍세화, 정범구, 김훈 씨등 각계 인사 58명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발족. 모임 측은 홍석천씨의 방송복귀를 촉구하는 사이버 서명운동에 1500여명 참여했다고 밝혀(10/4)

6. 가부장 질서에 균열은 오는가?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10/4) 페미니스트 그룹 '입김', '아(름답고)방(자한) (자)궁-종묘 점거 프로젝트' 무산(10/6)

7. 은밀한 이름, 버려진 존재 '북파공작원' 민주당 김성호 의원, 정부가 북파공작원 중 극히 일부인 약 100명의 유족들에게만 98년부터 극비리에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고 공개.

수치로 본 인권

불법 취업 외국인노동자 1008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외국인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4.1시간이며,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7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또 29.5%가 산업재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10/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11일(수)

제 171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고발한다! 인권의 이름으로"

제5회 인권영화제, 10월 27일 개막

영화를 통해 인권을 말하고, 인권의 눈으로 영화를 만나는 공간, 제5회 인권영화제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다. 제1회, 제2회 때의 매서운 탄압을 뚫고 어느덧 5회에 이른 인권영화제는 올해도 역시 굵직한 국내외의 인권영화 29편을 엄선, 대중들 앞에 소개한다.

'세계바라', 35미리 필름 야외상영 기존 영화제에서 모든 작품을 비디오 상영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35미리 필름 상영을 처음으로 시도한다. <세계바라, 불리비아의 일기>. 남미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빨치산 투쟁 기록인 이 작품은 개막작으로 선정돼 10월 27일 이화여대 내 이화광장에서 야외상영될 예정이다.

미국의 히스테리를 비판한다 5회 인권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꼽는다면 아마 <대지의 소금>과 <처벌에 맞춘 범죄>일 것이다. 좌익사냥이 극에 달했던 메카시 시대,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이 뉴멕시코의 탄광노동자 파업을 기록한 영화 <대지의 소금>. 우리나라의 <파업전야>와 같은 대접을 받는 이 작품은 미국독립영화의 자랑스런 성과물로 기록되고 있다. <처벌에 맞춘 범죄>는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의 히스테리를 비판하면서 <대지의 소금>의 의미를 다시 되짚는 다큐멘터리로, 두 작품 모두 28일 이화광장에서 야외상영된다.

동성애인권 등 각종 토론회 마련 5회 인권영화제는 최근 홍석천 씨의 아웃팅으로 촉발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제3회 상영작이었던 <제9법안 찬반투표>을 특별상영하고 '동성애자 인권'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마련한다. 또, 하와이 미군기지 문제를 다룬 <카호 오라위>,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투쟁>, 매항리 문제 등을 살펴본 <평

제5회 인권영화제

-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이화여대 총학생회
일시 : 10월 27일(금) - 11월 1일(수)
장소 :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주상영관), 이화광장(야외상영) 외
후원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문의 : 02-741-2407 / 741-5363 (담당 : 유해정, 김정아)

영화제 후원회원 모집

- 1만원 : 해설책자 증정
-2만원 : <어린이 인권만화 모음집> 증정
-10만원 이상 : <대지의 소금> <어린이를 위한 인권만화> <평행선> <황제의 새 옷> 가운데 택 3편

화의 시대)등 미군기지 관련 작품들의 상영 후,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다. 더불어 <덕테이터> 등 미디어 관련 다큐멘터리의 상영과 '미디어와 인권' 토론회도 준비되고 있다.

케빈 맥케이언 등 초청

올해 인권영화제는 두 명의 해외 감독을 초청했다. 우선, 니토와 터키 등의 등쌀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쿠르드족을 9년 동안에 걸쳐 취재한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의 감독 케빈 맥케이언. 맥케이언 감독은 이 작품으로 2000년 에틀렌타 영화제에서 '최고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고, 산타바바라 영화제에서 '인권상'도 수상했다. 또 9년 동안의 경제 제재 속에서 이라크 민중들이 겪은 참상을 고발한 영화, <바그다드의 비기>의 감독 사이드 케도(레바논) 역시 관객과의 시간을 갖는다. 다만, 케도 감독에게 한국비자가 발급되느냐의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인혁당 사건 등 한국작품 9편

인권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의 제작에 힘을 북돋기 위해 99년부터 신설된 '올해의 인권영화상'이 올해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상금을 후원한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에 오른 국내작품은 모두 9편. 인혁당 사건을 되짚어보는 <4월 9일>, 현대사 동차에서 해고된 식당 아주머니들의 복직투쟁을 담은 <평행선> 등.

<세계은행 부수기>

지난해 시애틀에서 올해 워싱턴과 프라하로 이어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이번 영화제에서도 만날 수 있다. 미국의 독립프로덕션 딥디쉬TV가 제작한 <세계은행 부수기>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과 IMF반대 투쟁을 담은 기록물이다. [이창조]

기고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김영옥(전북평화와인권연대)

군산 화재사건의 희생자들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소송을 위해 새우터(매춘여성을 위한 인권단체) 사람들이 군산으로 내려왔다. 증거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검사를 만나기 위해 군산법원으로 간 이들을 찾아갔을 때 이들은 이미 검사와 한바탕 한 뒤였다.

나를 보자마자 새우터의 김현선 대표는 "선생님 큰일이예요. 검사가 너무 방어적으로 나와요. 아침에 변호사가 미리 전화까지 했는데도 '구속영장' 사본하나 안 때 줄려고 해요. 검찰의 수사마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라며 걱정 어린 표정을 지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용의자들에 관한 자료가 필요했다. 그러나 검사는 "그런 일로 검사한테까지 찾아오느냐, 피해당사자나 유가족도 아니지 않느냐,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데 왜들 난리냐"며 끝없이 불쾌감을 표했다고 한다. 아침 일찍 들려온 군산경찰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으니 검사한테 가보라"며 거드름피우는 꼴을 당한 직후여서 사람들은 더욱 겁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꼭질 끝에 구속영장 사본을 떼고 다시 몇몇 혐의자들의 신상명세를 확인하기 위해 한나절 내내 법원 민원실과 형사계 직원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돌아온 건 냉대를 넘은 적대일 뿐이었다.

유리한 증거품조차 찾지 못한 이유는

9일 현재 검찰은 서류상 화재건물의 전세자로 되어 있는 전갑덕(63)과 박중환(29·전씨의 아들) 두 사람만 구속한 채 그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 포주는 작년에 이미 감금매춘 혐의로 한 번 구속된 바 있는 이형열(46·전씨의 사위)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된 전씨가 자신의 딸 박복현(39·이형열의 부인)을 포주로 지목하고 있다면서 박씨만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씨에 대해선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발생 3일후 유족들은 현장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숨진 여성의 일기장과 장부를 주워왔다. 그 며칠후 한 방송사 기자도 단서가 될 다른 물건들을 현장에서 주워왔다. 여기에는 이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었고 하루 매상이 얼마며 포주에게 수익금을 어떻게 뜯겼는지 등 사건해결에 단서가 될만한 중요한 얘기들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아무나 주워올 수 있는 물건들을 경찰은 왜 찾지 못했을까. 아예 찾을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 경찰은 수사를 하긴 한 걸까?

이런 경찰과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다섯명의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인신매매망' '유착관계'들을 밝혀 내기란 힘들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결국 우리가 싸워서 밝혀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정보력도 없고 수사권도 없는 우리에게 누군가 양심선언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그 엄청난 고리들을 밝혀낸단 말인가. 이런 저런 생각들로 군산을 빠져 나오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연재> '인권소식'와의 만남 ③

제주인권지기

<제주인권지기>(아래 인권지기)는 같은 이름의 인권단체인 제주인권지기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인권소식지다. 지난 7월 5일 창간호 이제 갓 7호를 발행한 새내기 소식지라 할 수 있다. 이미 <월간>지 발행을 통해 다양한 인권문제들을 심도 있게 전달해 왔던 제주인권지기가 새로이 격주간 매체를 창간한 것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현안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박용배(제주인권지기) 씨는 "인권소식의 전달 외에도 지역 내 진보진영의 동향을 전달하는 것"이 <인권지기>가 수행할 역할이라고 했다. 아직 제주지역 내엔 마땅한 소식지를 내는 단체가 없어, <인권지기>가 그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다. 최근엔 민주화운동병역회복보상법 시행 문제를 주요하게 보도함으로써 제주지역 관련자의 집단적 대응을 촉구하고, 제주지역 내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작업의 촉매제 구실을 맡았다.

격주간 매체와 함께 발행되는 <월간 제주인권지기>는 좀더 심층적인 보도와 기획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호에선 주민등록제도와 의문사를 주제로 한 기획을 마련했고,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인권문제도 꾸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 단신으로 보도된 사안일지라도 그 중요성에 따라 상세하게 추적보도하는 것 역시 <월간 제주인권지기>의 몫이다. <월간 제주인권지기>에는 그외에도 '제주사 바로 알기', '4·3읽기' 등의 고정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서둘지 않고 서서히 인권의식 확산 노력"

상근활동가 2명과 비상근활동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주인권지기는 모두가 활동비를 받지 않는 자원활동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인권지기>의 편집진이기도 하다. 박용배 씨는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시각이 인권적 시각이라고 생각했다"며 "지역 운동단체나 지식인들에게 인권적 감수성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제주인권지기에게는 어려움이 많다. 박 씨는 "인권을 바라보는데 있어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며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조차 인권문제를 '작은' 문제로만 바라봐 이를 설득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다.

결코 서둘지 않고 서서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인권의식'을 확산시키는 과정 속에서 <인권지기>는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한다.

◎전화 : 064-702-5250 팩스 : 064-702-5251

◎이메일 : rightscj@hanmail.net

◎후원구좌 : 제주은행 11-02-060197(박용배) 농협 901010-52-099479(박용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12일(목)

제 171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퇴직 앞두고 열심히 뛰었지만...

경북상주 탄광 노조위원장 분신자살

"대통령님...노조 대표로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 저는 죽음으로 향거하오니 정밀조사를 하시어..."

지난 9일 노조사무실에서 몸이 시너를 뿌리고 분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길동(56)씨 유서의 한 대목이다.

경북 상주의 석탄회사 (주)흥진태백의 노조위원장인 김길동 씨는 내년 11월 정년퇴직을 앞두고도 올해 5월 노조위원장직을 사정했다고 한다. 27년간의 광부생활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게 동료가 전하는 김 씨의 각오였다. 김 씨는 조합원들 앞으로 남긴 유서에서도 "좀더 나은 임금과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했으며 죽음 직전의 회한을 전하고 있다.

"회사 간부의 탄압이 분신배경"

(주)흥진태백의 최저임금은 70-80만 원선으로 강원지역의 탄광에 비해 수십만원 이상 낮다고 한다. 이에 김길동 씨는 노조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회사측에서 보기에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분신자살에는 위원장직 수행과정에서 당한 회사 간부의 탄압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변 사람은 전하고 있다.

조합원 김아무개 씨는 "한 간부가 위원장이 하려는 일마다 사사건건 가로막았고, 평조합원들 앞에서 심하게 욕설을 함으로써 망신을 주는 등 위원장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방치한 '윗사람'들은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근로자들이 고통없이 일하길"

고 김길동 씨는 모두 세 통의 유서를 남겼다. 하나는 대통령 앞으로, 하나는 조합원들 앞으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과 같음을 벗어난 '회사 간부' 앞이었다. 김 씨는 유서마다 "권력을 남용한 회사 간부의 처벌"과 "근로자들이 고통없이 일하게 되기를" 호소했다.

김길동 씨는 유서에서 "정말로 모범적으로 위원장을 하다가 멋지게 퇴직할 계획이었으나, 그렇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27년간의 삶터였던 막장을 떠났다. 김 씨의 장례는 13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창조]

정보상

- ◎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엄
 - 때: 10월 13일(금) 오후 1시30분
 - 곳: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열린의회 교실
 - 주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 (02-3675-5810 / 담당 김숙경)
- ◎ 재일동포와 재외동포법 워크숍
 - 때: 10월 13일(금) 오후 7시
 - 곳: 참여연대 2층 대강당
 - 주최: 지구촌동포청년연대 (02-708-4327)
- ◎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 때: 10월 14일(토) 오후 3시30분
 - 곳: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 ◎ 군산화재참사를 통해 본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토론회
 - 때: 10월 16일(월) 오후 2시30분-5시30분
 - 곳: 서울 YMCA 7층 자원방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02-2273-9535 / 담당 최문성미)
- ◎ <국제워크숍> 세계화와 비공식화 : 여성노동자의 경험과 대응
 - 때: 10월 15일(일) - 17일(화)
 - 곳: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02-708-4620 / 담당 박진영)
- ◎ <워크숍> 다국적기업과 사회권
 - 때: 10월 19일(목) 오전 9시-12시
 - 곳: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 주최: 아셈민간단체포럼 노동분과 (02-3675-5808 / 담당 최미경)

유린당한 프라하의 평화시위

체코 당국 과잉진압...850명 연행

지난달 26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례총회가 열린 프라하. 전세계에서 모인 1만5천여 명의 시위대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에 앞장서고 있는 IMF, 세계은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원래 28일 폐막예정이던 총회가 하루 앞당겨 끝났는데 세계은행 총재 올펜스는 시위대가 조기폐막에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내 언론에는 시위대의 폭력성이 부각되었지만, 시위현장에 있었던 영국 <가디언>지 바이너 기자는 "시위대 중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1-2%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특정 지도부가 없었음에도 각 단체가 대표인을 보내 회의하는 방식으로 시위는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총회기간 중에는 시위 뿐 아니라 경제학자, 철학자들의 회의 등 각종 행사가 진행돼 외채문제, IMF 구조조정프로그램의 문제점, 부패, 반환경적 인프라구축의 대안 등이 논의됐다. 반(反)세계화운동가들을 산업혁명 당시 기계과 피자에 비교하며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 바이너 기자는 만델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적 형태이고 인간행동의 다양한 양식 중 하나일 뿐'이라는 말을 인용, 반박했다.

오히려 체코 당국의 과잉진압과 체포 이후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국내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는데, 시위 기간 중 약 8백50명이 체포되었으며 이중 3백60여 명은 외국인이었다. 시위에 참가하다 체포돼 약 40시간 동안 구금되었던 로젠탈(미국) 씨는 "구타는 일반적이었으며 남자 경찰이 체포된 여자를 알몸 수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돈을 내야만 음식을 주거나 4제곱미터 넓이의 유치장에 22명을 구금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빈번했으며, 한 이스라엘인은 구타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프라하 시위에 참가한 외국인들 중 많은 수가 구소련과 동구권 출신이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공산권의 시장경제 이행과정에서 빈곤층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계화의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연례총회 기간 중에는 프라하뿐 아니라 40여개 국에서 수백 건의 반세계화 운동이 벌어졌고, 특히 미국에서는 65개 도시, 인도에서는 1백50여개 도시가 이에 호응했다. 이들은 제3세계에서 매일 1만9천명의 아동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돈이 외채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있다며 IMF와 세계은행이 개도국 부채탕감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했다.

프라하의 시위를 주도한 체코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인 경제세계화반대운동(Initiatives Against Economic Globalization)은 "총회의 조기폐막은 세계은행 측이 외채문제해결 등의 기만성을 인정하고 거짓보다 침묵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계민중은 주어진 경제구조를 받아들이도록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경제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선]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④ 끝

평화와 인권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발행하는 <평화와인권>은 지역 인권소식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94년 12월 10일 창간 이래 올 10월 11일 현재 216호까지 발행했으며, 올초엔 94년부터 99년까지의 발행분(준비1호-177호)을 엮은 합본호가 발간되기도 했다.

<평화와인권> 합본호는 지난 6년간의 '전북지역 민중운동사'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지역현안과 인권문제를 촘촘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역운동의 성과를 축적하고 정리해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문민식 전 편집장)는 창간 취지에 걸맞는 성과다.

더불어 <평화와인권>은 지역 내 주요사안을 쟁점화하면서, 이를 통한 지역운동의 촉매제 구실을 맡고 있다. 최근 <평화와인권>이 기획보도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점' 관련 기사들은 전북지역의 새만금개발사업 중단운동을 적극 추동해내고 있다.

"이 자체로 사회변혁의 도구이자 운동이길 바란다"

그러면서도 <평화와인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고통받는 민중들의 이야기를 진실 그대로 보도하는 것". (김영옥 편집장) 김 편집장은 "언론에서 외면하고 지역 안에 묻히기 쉬운 민중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전달하고자 하며, <평화와인권> 그 자체가 사회변혁의 도구이자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 체제를 건드리는 내용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역량의 부족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정식언론매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官)에서 취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평화와인권> 편집진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요즘 <평화와인권>에는 새로운 쪽지 하나가 만들어졌다. 우화를 통해 인권을 이야기하는 '윤구병의 인권과 평화이야기'이다. 이밖에 고정 쪽지로 운영되는 인권주평도 주요한 읽을거리. 오우희(평화와인권연대 평화운동팀장), 김용완(CBS 기자), 김선경(작가), 이성호(전북대사회교육학 교수) 씨가 현 필진이다. [이창조]

◎ 전화 : 063-231-9331 팩스 : 063-231-9332
 ◎ 이메일 : onespark@chollian.net
 ◎ 홈페이지 : www.onespark.or.kr
 ◎ 후원계좌 : 국민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 535-21-0304454(예금주 문규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13일(금)
제 171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신자유주의 반대 기치!"

국민행동, 아셈반대 시위 준비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의를 앞두고 당국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회의 당일 국내외 민간단체와 민중들의 시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애틀에서 프라하로 이어져온 반(反)신자유주의 투쟁의 파장이 국내에서도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기대'의 시각이 교차하기도 한다. 20일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박하순 집행위원(민주노총 정책부장)을 만났다. [이창조]

□ 10월 20일 아셈회의장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으로 알고 있다. 왜 시위를 벌이는가?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아셈의 중요한 논의사항 가운데 하나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문제다. 아셈은 이미 외환규제의 철폐나 '낮은 관세', 파업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투자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아셈은 시애틀 뉴라운드 회의나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들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가?
 = 국제무역기구든 아셈이든, 모두가 세계시장으로의 편입과 개방화를 추진하는 것들이다. 신자유주의란 노동과 여성, 생태, 제3세계에 대한 공격을 통해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것인데, 이런 식의 개방화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다. 다시말해, 국제적 금융자본의 투기이익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제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투자무역의 자유화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주권이나 민중들의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내용은 무엇인가?
 구조조정 반대, 외채탕감,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WTO 등 국제기구의 폐지 혹은 민주화가 신자유주의 반대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가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운동 역시 반신자유주의 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

□ 민간단체포럼과 같은 '대항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자체'를 저지하려는 이유는?
 = 국제회의가 열릴 때 그에 대한 대항회의가 열린곤 하는데, 민간단체들의 견해를 모아 본 회의에 제출하거나 발언을 해봐도 민간단체들의 의견은 사실상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아셈 때도 민간포럼에서 '선언'을 발표하겠지

만, 아셈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민간포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스스로 배우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행동 소속단체들 모두 '아셈 반대'에 합의한 것인가?(국민행동에는 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참여연대, 환경연 등 40여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 소속단체 모두가 공식적으로 '아셈 반대'에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논의 초기에 '아셈 반대' 기조에 공감했기 때문에 국민행동의 실무기획단은 민중대회위원회측과 '아셈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민간단체포럼과의 연대집회도 있다고 하는데?
 = 민간단체포럼과 국민행동, 민중대회위원회의 세 연대조직이 20일 오후 공동으로 집회('아셈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 행동의 날')를 개최한다. 다만, 19일 전야제부터 20일 오전까지는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 두 조직만이 공동으로 집회(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구조조정 반대 민중행동)를 개최한다.

□ 10월 20일 투쟁이 갖게 되는 의의는 무엇인가?
 = 시애틀로부터 다보스, 워싱턴, 방콕, 프라하로 이어져온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맥을 잇는 것이다. 서울에서 타오른 횃불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겨갈 것이다.

"인권단체 본연임무 수행"

인권단체들, 아셈민간포럼 탈퇴

10일 아셈민간단체포럼에서 11개 인권단체가 탈퇴했다. 탈퇴를 결정한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김유경 씨로부터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심보선]

□ 탈퇴 이유로 장소문제를 들고 있다. 무슨 말인가?
 = 당초 포럼이 열릴 장소였던 봉은사는 아주 중요한 위치다. 아셈회관 바로 앞에 있어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하다. 처음엔 민간단체포럼 집행위와 정부가 봉은사를 장소로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셈회관 변경 5백미터 이내를 전면통제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민간단체포럼 집행위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아이디어를 발급받겠다는 등의 굴욕적이기까지 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끝내 건국대로 물러서고 말았다. 민간단체포럼 집행위가 봉은사를 고수할 의지가 부족했다. (->2면에 계속)

삼성 SDI, 또다시 노동자 납치 의혹

지난해에도 '노조결성 방해' 전력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던 노동자들을 납치, 4일 동안 억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그룹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산하 삼성SDI 해복투(위원장 송수근)는 "지난 9월 삼성 SDI의 노무담당 직원 7-8명이 퇴근하던 노동자 김갑수 씨 등 5명을 납치했다"고 12일 주장했다.

삼성SDI 해복투 송수근 위원장은 "김갑수 씨로부터 '상황이 나쁘다. 지금 속초 모 콘도미니엄에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통화 도중 전화가 강제로 끊겼다"고 밝히며, "도와달라는 말까지 할 정도면 납치로 봐야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당사자와 직접 연락이 되질 않고 집이나 회사로 복귀하지도 않았으니 납치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SDI가 노조결성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를 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관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노조 결성을 주도하던 고영선 씨 등은 해외 연수 기간동안 일본에서 억류당하며 노조 결성 포기를 화유당한 바 있고, 비슷한 시기에 김갑수 씨 역시 국내에서 같은 이유로 화유를 당했다. 당시 김갑수 씨는 사측의 압력에 의해 "노동조합과 관계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지난해 삼성SDI의 노조 결성 시도는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송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천안 삼성SDI 칼라필터사업부가 11월말 수원 삼성전자와 통합된다는 공고가 8월에 있자 '노조결성을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다시 싹텄다"고 한다. 통합과정에서 7백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눈치를 쳤는지 그 사실을 알고 김 씨와 동료들을 납치해 과거의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삼성해복투는 11일 삼성SDI를 납치 혐의로 천안 부성과출소에 고발했고, 천안경찰서는 12일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심태섭)

☞ <아셈> 1면에서

□ 재정문제도 걸려있다고 하는데? = 우리는 재정으로부터 독립해야 민간단체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단체포럼 집행위는 포럼에 참가한 130여 단체가 어떻게 예산을 조달,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예산안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인컴포럼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1억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물러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간단체포럼 집행위가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 했다고 생각한다.

□ 일부 언론에서 민간단체의 '분열, 갈등'으로 표현하던데...

= 그렇게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셈회의의 성격, 요구 등이 서로 달라서 탈퇴한 것이 아니다. 아셈회의

를 맞아 인권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결정이다. 물론 민간단체 활동의 원칙과 실재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

□ 탈퇴한 인권단체들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가?

= 탈퇴한 11개 인권단체와 국제민주연대가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포럼'을 구성했다. 아셈회의 기간, 특히 전야제가 열릴 19일과 본회의가 열릴 20일의 시위 중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다. 법률구조팀도 구성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 서울 아셈정상회의는 신자유주의의 전령사라는 IMF, IBRD 총회 등과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 물론 IMF, IBRD, WTO 등과 다른 점이 있다. 아셈이 IMF, IBRD, WTO에 비하면 결속력이 약하지만, 역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정부는 의제설정부터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마땅하지 않나?

또 정부가 마지못해 말한 바에 따르면 아셈회의에서 무역과 금융거래 전면개방, WTO 뉴라운드의 조속한 출범 등이 주요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논의야말로 인간의 삶의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인권은 추상적으로 혹은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14일(토)

제 17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김대중 정부 집권 2년차인 99년 한해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2백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발간한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고서」는 99년 국가보안법 구속자 가운데 90%가 넘는 2백61명이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조항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히, 7조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는 4백13명이었으며, 그중 92.3%가 7조 적용을 받았다(「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특히 국

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조항)와 제7조 제3항(이적단체 조항)을 밀도있게 분석하면서, "7조 3항이 어떠한 형태로는 존치될 경우 그 개정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영남위원회' 사건의 경과와 쟁점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 검토회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구입문의 : 민변 (02-522-7284)

[이창조]

논평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가 한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아셈회의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불법시위'를 '초장강력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3만명에 이르는 경찰을 동원하고, 헬기와 장갑차까지 준비하고, 시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불허하기로 했다. 이미 회의장 주변 곳곳에 정체를 모를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여 민간단체들은 집회신고도 내지 못하도록 해 지금 상황대로라면 시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불법시위 혐의로 모두 연행되게 생겼다.

아셈회의는 이런 외형상의 문제보다도 그 내용에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번 아셈회의의 핵심의제는 '자유화와 시장개방', '아시아·유럽 금융안정협력', '아시아·유럽 투자 무역촉진' 등이다. 2025년까지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완전한 자유화를 달성하고, 지구화 시대에 맞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하며, '투자촉진행동계획',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등을 신속히 이행할 것 등이 서울 아셈회의의 골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자간 투자협정이 아셈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유럽 자본이 중심이 되는 또 다른 세계화 추진기구가 아셈인 것이다.

따라서, 시애틀, 다보스, 워싱턴, 프라하를 잇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아셈반대 투쟁을 전개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문제의식은 정당하다. 신자유주의가 오로지 자본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이미 IMF 체제로부터 뼈저리게 체험한 사실이다. 자본의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지극히 유연화된 노동시장, 해체되어지는 공공영역과 후퇴한 거둬들이는 삶의 질, 생존을 위한 고통의 한 가운데 신자유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아셈은 이런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니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제신인도 제고'와 같은 허황된 포장 대신 신자유주의 반대를 주장하는 민간단체들의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월 20일 전쟁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곧 노벨평화상 수상의 빛이 퇴색될 운명을 맞게 될 지도 모른다.

아셈 시위, 장갑차 진압 예정

경찰청, '아셈 경비대책' 공개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간단체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아셈 회의장 주변에 장갑차까지 동원된다(관련기사 10월 13일자 참조).

경찰청은 13일 공개한 '아셈 경비안 전대책'에서 "불법시위는 자칫 군중심리에 편승, 폭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으므로 초장부터 강력 대처"하고 "특별치안강화지역에서는 살수차, 장갑차, 다연발차, 소방차 등 특수진압장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의 시위꾼은 입국거부 조치하고 체류기간중 불법 시위자는 강제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종로와 광화문 등 도심지역의 시위에 대해서도 '기동타격대 운용'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조]

‘베트남전 심포지움’ 좌절

서울시의회, ‘마찰’ 핑계 장소 불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상임대표 강정구, 아래 베트남 진실위원회)가 주최하려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움’이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단체들의 방해와 서울시의회 측의 행사 불허로 무산됐다.

베트남 진실위원회는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심포지움을 열 예정이었고 이미 10여일 전에 시의회로부터 장소사용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이날 오전 10시경 느닷없이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

시의회 의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사를 허가하긴 했지만 이대로 심포지움이 개최되면 고엽제전우회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며 “공공단체 특성상 물적·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월남전 참전 단체들의 항의 전화가 계속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의회 별관 주변과 로비 근처에는 낮 12시30분 경부터 군복을 입은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모여들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베트남 진실위원회 측은 시의회 측의 불허통보와 전우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때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건물로 들어가려는 베트남 진실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국제민주연대 차미경 사무국장 등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결국 베트남 진실위원회 측은 오후 3시경 행사를 포기했으나, 고엽제전우회 회원 20여명은 여전히 별관 로비를 점거하다가 오후 4시가 넘어 해산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베트남전 참전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조망해 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대한해의참전전우회 체명신 회장도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었다.

베트남 진실위원회 김숙경 씨는 “고엽제전우회 사람들도 베트남전의 피해자”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베트남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 모습만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차미경 국장은 “때리면 맞는다는 자세로 베트남전 진실규명 활동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태섭)

“인권과제 실현에 노력 기울이길”

인권기구 공대위, 노벨상 관련 논평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73개 단체 참여)는 논평을 발표, “김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 실현되지 않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남북화해를 향한 진전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고,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실현했어야 할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의 개폐,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조)

“국제인권기준 위반한 민간인 발포”

중동사태 관한 국제사회 여론

이스라엘 민족주의 정당인 리쿠드당의 당수가 팔레스타인의 성지를 방문한 이후 촉발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혈사태는 전쟁 수준으로 확대됐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락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 두 명의 죽음에 대한 제한적 대응조치일 뿐이라고 했으나 팔레스타인 대표는 ‘헬기와 미사일이 배치되고 군인이 무차별하게 민간인을 공격하는 이 상황이 전쟁이 아니라면 무엇이 전쟁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주일간의 팔레스타인 희생자수는 최소 1백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팔레스타인 인권단체인 LAW(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팔레스타인협회)는 국제사회와 유엔, 미국, 이스라엘의 평화운동가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호소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 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조건없는 완전한 철수
- 모든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과 그들에 대한 보상
- 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립

또한 아랍지역 사회단체연합(Ittijah-Union of Arab Community Based Associations)은 10월 7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청원서를 제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의 인권 수호에 유엔과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팔레스타인인은 자치지구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이스라엘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서에서 아랍지역사회단체연합은 최근의 유혈충돌 이후 이스라엘은 자치지구와 이스라엘 역내를 불문하고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거주 팔레스타인인은 국제적인 이스라엘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측이 먼저 소요를 일으켰다며 최근 유혈사태의 책임을 팔레스타인측에 돌렸다. 그러나 국제엠네스티가 파견한 진상조사단은 10월 9일 발표한 임시보고서에서 국제법은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군, 경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발포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군인의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았다며 이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환자와 후송자 등 공격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민간인에게까지 발포한 것은 군대의 내부규율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은 최근의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0월 10일 53개 위원국 중 48개국의 찬성으로 팔레스타인 유혈충돌에 관한 특별위원회 소집을 결의했으며 특별위원회는 10월 18일부터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김민선)

성명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쳐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벨상 위원회는 ‘남북 관계에서의 화해와 평화, 남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대한 기여와 버마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보편적 인권의 옹호’를 선정 이유로 밝혔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박수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하며, 김 대통령 개인의 영광이자 국민적 경사로 여겨지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권 대통령을 표방한 김 대통령을 평가하는 우리로서는 우려 섞인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인권 보장은 위정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에 속하는 문제이며, 김 대통령이 내건 인권의 구호는 근사했지만 실질적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는 결코 인색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 대통령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하여 ‘자만’의 선반 위에 산적한 인권 과제들을 방지할 것을 염려한다.

우리가 그 과제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을 지라도 김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본인이 야당 지도자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 줄곧 외쳐온 ‘약속’들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국회 문턱에 쌓여있거나 들어가서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사안들을 쟁겨보길 바란다. 기존의 관료조직과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며 국가인권위 설치나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등에서 김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에 질식할 대로 질식한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길 바란다. 김 대통령의 어깨를 한층 으쓱하게 해줄 아셈 개최의 뒷그늘에서 하루하루를 고민하고 탄식하는 국민의 생존권 위기를 생각하길 바란다. 집회·시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건강을 누릴 권리 등의 기본권이 얼마나 우롱 당하고 있는지를 자성하길 바란다.

혹여 노벨상 수상이 현 정권의 실책과 과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두길 바란다. 이번 노벨상 수상이 자족과 자만에 걸리지 않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00년 10월 13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17일(화)

제 171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유치장 내 알몸수색 문제와 관련, 인권침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행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14일 전교조는 단체협약의 이행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으나, 경찰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3백여 명의 교사를 연행해 서울시내 16개 경찰서에 분산 구금했다. 그 가운데 16일 풀려난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장 박진영 교사는 “중부서로 이송된 후 목비권을 행사하자 곧바로 ‘유치장에 가둬’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유치장 내에서 알몸으로 수색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교사는 또 “알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하기를 3회 반복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과는 16일 “연행된 전교조 회원들은 현행법으로 체포된 자들로,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에 의해 신체수색 후 입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영화 변호사는 “적법한 체포일 경우 피의자 알몸수색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범죄의 성격이나 목적이 수색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미약사범도 아니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다 붙잡힌 교사들을 불필요하게 알몸수색한 것은 수치심 자극 또는 전의 상실, 기선제압의 목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영장의집행)는 “피의자의 신체 및 명예를 보호하는 데 유의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1조(현행법 체포)는 “현행법인을 체포하거나 인도 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규칙상 알몸수색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인권침해를 없도록 하라’는 조항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며 “불필요한 상황에서 알몸수색을 실시했다면, 이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불법 선전물 소지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알몸수색을 진행했다가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본지 3월 25·28일, 4월 11일자 참조).

한편, 연행된 교사들은 강제로 지문을 채취당하거나 사지가 붙들린 상태에서 사진촬영을 당하는 등 많은 수모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서에서는 강제 지문채취에 항의하던 교사 한 명이 수감에 채워진 채 풀려가 격리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16일 김은형 수석부위원장과 조희주 서울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조합원들은 석방했다. 또 11월 5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회에 대해 폭력행사의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창조)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며 온라인 시위를 벌인 네티즌들을 ‘사이버 테러범’으로 몰아가려던 정보통신부의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단장 하옥현)는 11일 “정통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웹서비스 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과다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조사결과에서도 사건 당일의 접속시도량(총 113,480회)이 정상작동일의 접속시도량(8월 21일 총 238,757회)에 훨씬 못 미치며, 인터넷 주소 확인 결과 공격용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허위주소가 아닌 실제 사용 중인 정상적인 주소로 드러난 점 등을 들어 “온라인 시위로 정통부 홈페이지

가 마비된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정통부가 홈페이지 마비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5일 성명을 통해 정통부의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에서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온라인 상에서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이 ‘사이버 테러’ 따위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일부 네티즌의 해킹’이라고 ‘특종보도’한 MBC 최희재 기사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에서 시상하는 ‘이달의 기자상 특별상’에 선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보선)

아동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르는 이름도 참 여러 가지다.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용역직, 파견직, 위탁계약직,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 봄, 충북대병원 파업 현장에 붙어있던 손바닥만한 ‘소자보’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내 이름은 비정규직. 상여금 한 톨 못 받고 6년을 살았다. 앞으로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원장님, 당신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거룩한 ‘역사’와 ‘운동’을 떠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어긋나서 옳지 않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수준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제도권 언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두고 “고용주 입장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해고가 자유로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위와 같은 무책임한 ‘이해’는 명백한 ‘오해’일 뿐 아니라 무식의 소치다.

사용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 법원조차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서울지방법원 96가합 16815, 1996. 6. 28.)이라고 판결했고, 그와 유사한 판례들은 꽤 많다.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루살이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일하는 것을 며칠 계속했다면 명칭만 ‘일용직’일 뿐이지 ‘상용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그 계약이 반복된 경우에는 명칭만 ‘계약직’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상용직’ 노동자와 같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계약이 한번도 갱신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일텐데, 그에 관해서도 학자들의 주장은, 아무리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회사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그만 나오라”고 말하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그에 관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계약기간을 한번만 마치고 갱신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그것을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의 원칙은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이고 그 원칙이 확립되는 기나긴 과정은 ‘가치를 생산하는 계급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역사의 진행 방향에서 필연적 결과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여서 정당할 수가 없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9일 - 10월 15일)

1. 노벨평화상, 그 이름 헛되지 않기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10/13)…청와대, 인권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등에 박차 가할 것이라 밝히/인권단체들, “실질적 인권개선에 박차” 주문
2. 발가벗은 경찰 인권익식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3백여 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알몸수색·강제 지문채취 등 당해(10/14)
3. 맨몸동이 시위, 무력진압 방침
경찰청, 아셈 대화장 주변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장갑차 등 특수진압장비 동원키로(10/11)
4. 시각장애인, 교수직에서도 퇴출
공주영상정보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였던 이광만 씨, 3급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소송제기 의사 밝히(10/10)
5. 피지도 못하고 스러진 탄광노동자의 꿈
퇴직 앞두고 노조위원장에 취임해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던 탄광노동자 김길동 씨,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 간부의 방해와 모욕에 견디다 못해 분신자살(10/9)
6. 닦아낸 ‘의문사진상규명’, 시계는 불투명
국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 활동 드디어 시작…조사권 약하고 기간도 짧아 성과 여부는 불투명(10/12)
7. 험난한 여정, 베트남전 진실규명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주최하려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파병에 관한 심포지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방해와 서울시의회 측의 장소대여 불허로 무산돼(10/13)

◎ 수치로 본 인권 ◎

1. 국가보안법 구속 여전…실형선고율 고작 2%
99년 한해 동안의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모두 286명이며, 재판이 마무리된 249명 가운데 실형 선고자는 5명(2%)으로 나타나. 신분별로는 학생이 226명으로 가장 많고, 261명(91.3%)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2. 삼성그룹, 일관된 반노동 정책
삼성그룹 장애인고용률 0.13%, 전체 기업 장애인고용률(0.91%)에도 턱없이 못 미쳐(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자료)

<제5회 인권영화제 일정표>

10월 27일(금) - 11월 1일(수) 이화여자대학교

10월 27일(금)

- ◎ 법정대 강당
 - 5:00- 5:15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 시리즈 (외국, 애니메이션)
 - 5:25- 6:50 스킨츠보로; 미국의 비극 (외)
- ◎ 이화광장(야외상영)
 - 7:00- 8:20 개막식 - <2000 인권뉴스> <올해의 인권영 화상 후보작 하이라이트> <상영작 하이라이트> 상영
 - 8:30-10:00 에르네스트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 (외)

10월 28일(토)

- ◎ 법정대 강당
 - 1:00- 2:20 세계은행 부수기 (외)
 - 2:30- 4:20 평행선 (국내)*
 - 4:30- 6:20 바그다드의 비가 (외)* (감독과의 대화 취소 시 '판단' 상영)
 - 6:30- 7:30 마리아나의 눈동자 (외)
- ◎ 법학관 405호
 - 1:00- 2:20 나는 행복하다 (국)*
 - 2:30- 3:30 사라 바트만의 생애 (외)
 - 3:40- 4:30 덕테이터 (외)
 - 4:30- 5:00 판단 (외)
 - 5:10- 6:20 데일리 네이션 (외)
 - 6:30- 7:30 <부대행사> '범죄보도와 인권' 패널토론

- ◎ 학생회관 씨네마텍
 - 1:00- 2:15 세계은행 철폐 (외)
 - 2:20- 3:50 평화의 시대 (국)*
 - 4:00- 5:30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투쟁 (외)
 - 5:40- 6:40 카호 오라이 (외)
 - 6:50- 7:40 <부대행사> '미군기지'에 대한 패널토론

- ◎ 이화광장(야외상영)
 - 7:40- 10:00 대지의 소금, 처벌에 맞춘 범죄 (외)

10월 29일(일)

- ◎ 법정대 강당
 - 1:00- 1:20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 시리즈 (외, 애니메이션)

- 1:30- 2:50 엄마와 섬 그늘 (국)*
- 3:00- 5:20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 (외)*
- 5:30- 7:10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 (국)*
- 7:20- 9:40 대지의 소금, 처벌에 맞춘 범죄 (외)

- ◎ 학생회관 소극장
 - 1:00- 3:20 인간의 시간 (국)*
 - 3:30- 6:10 바람과 함께 오고간다 (외)
 - 6:20- 7:15 베트남; 마지막 전쟁 (외)
 - 7:20- 8:35 제9법안 찬반 투표 (외)
 - 8:40-10:00 <부대행사> '동성애자의 인권을 이야기 하자' 패널 토론

10월 30일(월)

- ◎ 법정대 강당
 - 5:00- 7:40 4월 9일 (국)*
 - 7:50- 8:50 버림받은 사람들 (외)
 - 9:00- 10:00 고향 (외)

10월 31일(화)

- ◎ 법정대 강당
 - 5:00- 7:20 데모크라시 예더봉 (국)*
 - 7:30- 9:30 보이지 않는 전쟁 (국)*

11월 1일(수)

- ◎ 법정대 강당
 - 5:00- 5:55 사라바트만의 생애 (외)
 - 6:05- 7:40 에르네스트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 (외)
 - 7:50- 10:00 폐막식, 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작 상영

*표시는 '감독과의 대화' 마련

영화제 후원회원 모집

- 1만원: 해설책자 증정
- 2만원: <어린이 인권만화 모음집> 증정
- 10만원 이상: <대지의 소금> <어린이를 위한 인권만화> <평행선> <황제의 새 옷> 가운데 택 3편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741-2407)

◎ 모든 영화는 무료 상영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18일(수)
제 1717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이창조

먼저간 아들을 대신해 싸운다

군의문사 유가족, 국방부 앞 식발농성

국방부 청사 맞은 편의 용산 전쟁기념관 앞 인도. 엠프에서 흘러나오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소복을 입은 한 어머니의 절규와 교차하고 있다. 사발한 어머니 열세 분과 아버지 두 분은 "내 아들을 살려내라"며 통곡하고, 급기야 한 어머니가 혼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7일로 닷새째 국방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모임인 전국군포격회생자유가족협회(아래 전군협) 회원들. 이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국방부 앞 농성을 시작한 까닭은 최근에 국방부의 사건 조작 은폐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군 당국 사건조작' 드러나

지난 10월초 전군협 이해숙(고 박현우 씨 어머니) 회장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98년 국정감사 당시 천용택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발견했다. 당시 국방장관은 "(박현우 상병의 경우) 구타에 의한 사망이 자살로 조작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군 당국의 사건조작 사실을 시인했던 것이다. 이해숙 회장은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의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었다"며 "사건 조작사실이 확인됐다면 당연히 유가족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고 분노를 토했다.

농성에 돌입하면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요구사항은 세 가지. △군 당국이 자살 조작을 유가족과 언론에 은폐해 온 사실에 대해 유가족과 고인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

을 만들어 전군에 시달리고, 이를 각 언론사에 알릴 것 △모든 군의문사에 대한 정당한 후속조치를 통해 고인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매일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 까니도 거른 채 차가운 길바닥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특조단 해결사건 전혀 없어

17일은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현판식이 열린 날이었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민주화운동 의문사 사건'에 비하면, 일반 군의문사 사건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일반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작업도 '진행중' 이기는 하다.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지금까지 특조단에 의해 의혹이 해소된 사안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숙 회장은 "특조단에서는 내 아들을 제외하곤 모두 자살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달려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의 죽음 또한 영원히 '자살'로 은폐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개혁의 밑거름 되길 바랄 뿐"

98년 12월 7일, 아들을 잃은 동병상련으로 모인 유가족들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로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 아래 버티고 투쟁해왔다. 99년 6월 5일엔 국방부 앞에서 열흘간 단식농성을 전개한 끝에 조성태 국방장관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당시 조 국방장관은 "의문사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군포격 근절"을 약속했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상황은 제자리 일 뿐이다.

이해숙 회장은 "군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처지는 사실 우리뿐이다. 욕심이 있다면, 먼 훗날 내 아들이 군 개혁의 밑거름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조]

아셈 관련 민간단체 주요행사

10월 19일(목)

-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행동
 - 오후 2시, 건국대 학생회관 앞, 주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경제의 세계화와 인권침해' 국내외 인권단체 간담회
 - 오후 5시, 건국대, 주관: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포럼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세계화 반대 투쟁 전야제
 - 밤 9시, 송실대, 주최: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10월 20일(금)

- 아셈반대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를 민주노총 결의대회
 - 오전 10시, 강남 뽕뽕사거리(강남역과 양재역 사이)
- 아셈 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
 - 오후 2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 잠실종합운동장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루기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이와 관련, 지난 14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 주최로 '이주노동자노동권 완전쟁취 및 고용허가제 도입 대응 투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투쟁본부의 이윤주 집행국장은 '고용허가제'를 규정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고용중지'를 당할 경우 14일 이내 출국조항'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이 억압되며 △고용계약 연장을 내건 이주노동자의 단체행동 금지 조항 등을 들며 사실상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또 "3년이라는 최대 고용기간은 값싼 미숙련 노동자들을 최대한 헐값에 부르먹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사회·노동단체는 물론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했던 일부 단체들마저 정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정진우 간사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연수취업제(산업연수생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들이 아무 제약 없이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또 "차별과 냉대를 받는 한국노동자가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 등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를 사면하고 이들에 대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 간사는 강조했다.

이밖에 해외 현지법인에서 취업해 국내로 옮겨와 일하는 '현지법인 연수생'들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지법인 연수생들은 월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연수비'를 받고 있을 뿐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연수취업제 폐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건철폐공대위'의 윤애림 씨, 민주노총의 박하순 정책부장과 한국내 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KASAMAKO)의 제이 마크(필리핀) 씨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김보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아셈 정상회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인권운동시랑방을 비롯한 40여 사회단체가 속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아셈 개최와 관련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사령탑이라 할 국제기구들과 각종 투자협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행동'이 발행한 자료집을 통해 살펴본다(편집자주)

초국적자본이 자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각종 국제기구들이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에 기반해 출범한 WTO는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가 공산품의 교역만 다뤘던 반면, WTO는 농업 및 지적재산권 같은 새로운 영역까지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WTO는 또한 '자유무역'의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곧바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즉 WTO의 규정은 개별 국가의 법률을 훨씬 능가한다. 세계화 체제의 명실상부한 '지휘자'인 셈이다.

WTO는 출범 때부터 교육 '시장'을 일반서비스협정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교육 부문도 언젠가는 '자유' 무역의 원칙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권마저도 무시되는 것이다.

IMF의 파괴력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경험한 일이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공공지출의 대폭 삭감을 강제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초국적자본에 모든 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임금,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98년 2차 런던 정상회의 때 만들어진 '아셈비전그룹'은 '자유화와 시장개방' '아시아-유럽 금융안정협력' '아시아-유럽 투자무역촉진' 등을 아셈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핵심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2025년까지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완전 자유화 달성 △외환보유고, 외채의 규모 등에 관한 금융정보의 투명성 제고 △아시아 유럽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투자촉진 행동계획'의 신속한 이행 등 구체적 계획과 목표를 제출하고 있다. 즉, 아셈이 원하는 것은 상품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되고 금융시장이 완전 자유화되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체제이다. 여기서 금융거래의 투명성 강화란 초국적자본이 국내 우량기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에 다름 아니다.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① '미국의 얼굴'

대지의 소금

SALT OF THE EARTH

미국/ 1954/ 허버트 비버만 감독/
94분/ 드라마

1950년대, 매카시즘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만든 이 영화는 당시엔 전국의 극장들에 의해 상영을 거부당했다. 1950년대 인종, 계급, 여성 등 미국의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대지의 소금>은 이제, '후세에게 물려줄 소장 영화 100편'중 하나로, 민중영화의 고전으로, 명화의 전당에 모셔져 있다.

이 영화는 1950년 뉴멕시코주 실버시티의 아연 광산에서 벌어졌던 광부파업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잇따른 광부 패물사고를 계기로 멕시코계 광부들은 경찰과 백인 광산회사들의 횡포에 맞서 파업을 결행하지만, 무력탄압과 회유속에 파업은 지리멸렬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뒤엎고 파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 건 다름아닌 광부들의 아내. 무력과 회유도 가난과 성차별의 이중고에 시달려온 아줌마들의 악다구니를 당해내지 못한다. 이 영화에서는 특히, 남편 뒤처닥거리를 하면서 기죽어 살던 여자들이 스스로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존심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심금을 울린다. 이 영화는 계급과 성을 아우르는 모든 종류의 '병든'에 관한 영화다.

처벌에 맞춘 범죄 A CRIME TO FIT THE PUNISHMENT

미국/ 1982/ 바바라 모스 & 스테판 마크 감독/ 46분/ 다큐멘터리

<대지의 소금>이 만들어진 1950년대 배경과 당시 정치적 분위기를 조사하는 다큐멘터리. 50년대 미국의 매카시 분위기를 전달하는 풍부한 자료화면과

함께 노동자, 소수자, 억압당하는 여성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에게 당시의 회고담을 다시 듣는다. 영화는 미국사회를 관통했던 공산주의에 대한 히스테리, 그 기만의 역사를 만들어낸 가해자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를 명료하게 가려낸다. 50년대 영화와 정치의 관계를 흥미 있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미국의 배극 SCOTTSBORO : AN AMERICAN TRAGEDY

미국/ 2000/ 다니엘 앤커 & 바리 굿만 감독/ 84분/ 다큐멘터리

193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과 관련된 최대의 이슈가 된 스코츠보로.

<미국의 비극>은 1931년 미국 앨라배마주 스코츠보로를 지나던 열차에서 두 명의 백인 여성이 아홉 명의 10대 흑인으로부터 유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흑백차별이 유난한 앨라배마주는 이 흑인들에 대한 살기로 뜨거워졌고, 급기야 법정은 이 아홉 명의 흑인에게 전기의자 사형선고를 내린다. 그러나 미국 공산당이 이 사건을 문제삼기 시작하면서 스코츠보로 사건은 인종차별에 맞선 흑백의 연합전선을 만들어낸다.

버림받은 사람들

ABANDONED : The Betrayal of America's Immigrants

2000/ 미국/ 데이비드 벨트 & 니콜라스 워솔 감독/ 55분/ 다큐멘터리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에서 이제 이민자들은 차별과 버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1996년 미국에서 새 이민법이 통과된 뒤 갈수록 작아지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다룬 <버림받은 사람들>은 최근 일

고 있는 이민자 차별 반대운동의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반인권적 처사를 질타한다. 미국 내 인구증가와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일자리가 모자라게 되자 정부와 사회는 지금까지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꿨고 그것의 결정체가 1996년 개정된 이민법이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 수혜권을 축소하고 추방 가능한 범법영주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법안 때문에, 가족 모두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가 10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과로 인해 추방당하는 일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자들도 이민국의 행정편의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함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강제수용시설도 고발한다.

고향 HOMELAND

2000/ 미국/ 줄리안 스피츠밀러 & 헨크 로저슨 감독/ 60분/ 다큐멘터리

<고향>은 인디언 수난의 성지이자 인디언 보호구역인 미국 사우스 다코다에서 힘겹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디언 가족들의 삶을 조명한다.

사우스 다코다는 1877년 미국정부가 블랙힐 지역을 뺏기 위해 대규모 학살을 자행한 곳. 1973년 인디언운동을 말살시키기 위해 그들의 추장을 죽게 만들기도 했던 지역이다. 이곳은 1975년부터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인디언해방운동의 대부 레오나르도 펠티어도외의 고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우스 다코다는 형편없는 주택시설, 실업과 알콜 중독, 마약이 만연한 '보호구역'으로 상정되기도 한다.

(인권영화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19일(목)

제 17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경찰이 살인용의자로 조사하던 외국 인 노동자를 발로 짓밟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일 자정 수원역 앞 골목에서 숨진 잠비아인 살인용의자로 붙잡은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 4명을 근처 고등파출소로 데려간 경찰이 이라완(24) 씨를 폭 50센터, 길이 3미터 크기의 파출소 지하탈의실 사물함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후 구둣발로 머리를 차, 왼쪽 머리 윗 부분이 의자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이들을 접견한 김철준 변호사에게 이라완 씨는 넘어져 피를 흘리는데도 경찰이 구둣발로 머리를 짓이겨 이마, 머리 등에 각각 7센터 정도 찢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라흐만 씨도 같은 곳에 끌려가 유사한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라완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도 변호사 접견 때 "이마에 1자형 흉터가 있는 경찰관이 주먹, 발로 수차례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피를 흘리는데도 발로 짓밟아

수원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라완 씨가 체포될 때 자해를 해 상처를 입었으며, 뒤늦게 상처 입은 사실을 발견하고 9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자해장면을 목격할 의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뒤늦게 상처를 발견했다는 경찰 주장하고도 충돌해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새벽 2시 무렵 고등파출소에서 수원 남부경찰서로 이송된 이들 중 라흐만 씨 등 2명만이 같은 날 오후 4시 무렵에야 까지 통역인과 잠깐 개인면

담을 한 것이다. 그것도 조사할 때는 통역인이 참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통역인으로 간 수원 엠마우스 관계자에게도 확인됐다.

경찰은 8일 저녁 8시 경 한독병원에 이들을 후송, 간호사로부터 간단한 치료만 받고 혈흔증거대조를 위한 채혈만 했다. 9일 저녁 6시 무렵에야 치료를 받은 이들은 저녁 12시 무렵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이첩됐다. 또 목동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상태인 이들을 11일 영등포구 치소에 '보호의뢰'했다.

목동 출입국관리소 심사담당 관계자는 "이들은 상해치사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의뢰한 혈흔조사결과를 보고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용능력을 초과해 영등포구치소에 보호의뢰 했다"며, "출입국관리소에 온 이후 경찰이 이들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18일 여운철 변호사는 '불법체류' 상태인 이들이 곧 강제추방 될 가능성에 대비, 이들의 상해정도 및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수원 외국인노동자센터, 다산 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심보선)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영등포구청이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 보험노조)이 제출한 노조결성 신고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하고 나섰다. 보험모집인 등의 '특수직종'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영등포구청 고용안정과 관계자는 "노동부의 2000년 업무편람에도 생활설계사 노조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기에 필증을 내주는 곤란하다"며 "노사 모두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 이후 노동부와의 조율을 거쳐 필증교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노동부 업무편람은 학습지 교사, 골프 경기보조원 등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일부에게도 노조설립 필증이 교부되고 있는 게 현 추세다.

보험노조 조합원 대부분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소속으로 이들은 지난 8월 23일 준비단체를 결성하고, 10월에 설립 총회를 개최, 지난 5일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를 했다.

보험노조 이순녀 위원장은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노동자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마당에 보험모집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의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도 "보험모집인들이 영업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노동자로 인정 않는 것은 노동부규정이 형식에 얽매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대규모 조직결성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태섭)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전 세계의 전화, 팩스, 휴대폰이 감시당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e-mail이 국가권력이 설치한 메일박스에 자동 저장, 검열된 후 개인에게 통보된다. 영화 속 이야기 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진보네트워킹(대표:김진균, 이하 진보넷)가 주관한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에 참석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국가권력이 정보감시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동의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국의 노동네트워크 운영자인 크리스 베일리는 "1947년 2차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독일의 통신망을 도청하기 위해 구축된 세계에서 가장 큰 커민트(편집자주 : 공학용어, 네트워크로 전달되는 물리적인 정보를 가로채는 기술)시스템인 에셀론은 이제 세계의 도청기지를 하나의 체인망으로 연결하여 케이블과 통신위성에서 교환되는 모든 정보를 도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크리스 씨는 "미 군사정보국이 사파티스타가 인터넷을 통해 전지구적인 투쟁을 벌인 것을 예로 들어 에셀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가 이미 공개됐다"며 "미국이 전세계 민중운동진영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에셀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프라이버시 전문가인 오구라 토시마루(도야마 대학, JCA NET 대표) 교수는 "일본의 집권(연립) 여당이 99년 10월 도청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 경찰청과 법무부는 임시 메일박스를 만들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설치한 후, 목표하는 e-mail에 접근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Target의 e-mail을 열람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도청법에 의해 법원이 허가하지만 하면 통신업체 고객의 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구라 교수는 이러한 일본 정부기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정부와 일본과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 도청법 입안과 관련하여 미국정부의 내부토론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을 때 CIA는 이것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거절한 것"을 예로 들었다. 즉, 일본의 도청계획이 미국 국가안보와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다면 에셀론을 극복하는 또 다른 지구적 감시네트워크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홍성태(사회학자) 박사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감시체계는 '생각할 자유'와 '표현할 자유'의 통제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안으로 "감시자인 국가를 역감시 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있는 정보공개법의 도입과 국민감시의 근본적인 소스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명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를 지탱한다며 이를 촉진할 또 다른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다.

투자협정은 국내의 투자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며, 한 국가가 투자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규제를 대폭 축소하게 된다. 투자자들의 투자행위에 대해 정부 규제가 가해지면, 투자자들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한 마디로 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에게 국가에 버금가는 위상과 권력을 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한·일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자본을 통제할 수가 없다. 과잉생산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규제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도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일 투자협정에는 노동문제 중재기관의 '진지한' 태도를 요구하는 '진지조항'의 포함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80년대 발생했던 '수미다전기'를 예로 들며 '진지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수미다전기 노동자들이 팩스 한 장으로 직장을 폐쇄한 일본자본가에 맞서 원정투쟁을 벌였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쟁의행위는 가능한 한 봉쇄하며 쟁의가 발생하면 조기에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98년 한미투자협정 협상개시 이후 문제된 것이 스크린쿼터제였다. 미국이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투자협정의 기본처럼 굳어진 것이 있다.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들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권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국내 산업보호 조치도 사라져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바로 이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 측이 끈질기게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의 주요 거점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체결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국내의 자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험에서 보듯, 부국과 빈국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과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한다. 경제적 규모와 경쟁력의 차이가 엄청난 현실에서 종속적인 지위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중심국가의 '내부 식민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② '세계은행 부수기' '평화의 휘방꾼-미군'

세계은행 부수기
BREAKING THE BANK

미국/ 2000/ 딘 디쉬 텔레비전/ 74분/
다큐멘터리

작년 시애틀 WTO 반대 투쟁, 올해 4월 워싱턴 'IBRD와 IMF 반대' 시위 등 얼마전 프라하를 뒤흔들었던 전세계 민중들의 함성은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전세계 민중의 대규모 연대이다. 영화는 그 중에서 워싱턴 투쟁을 기록한 뉴스필을 조각조각 모았다. 취재에 나선 사람들은 미국 독립미디어들, 주로 인터넷을 통해 투쟁속보를 알린 이들은 지구촌 민중연대의 숨은 공신들이다. 상업미디어들의 제한적인 취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동감과 더불어 투쟁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덕테이터

THE DUCKTATOR

오스트레일리아/ 1997/ 울터
브람호스트 & 구스 반 웨버렌 감독/
46분/ 다큐멘터리

<덕테이터>는 2차대전 중 만화영화를 이용한 미국의 전쟁 홍보전략을 고발한 영화로 죽음과 폐허로 상징되는 전쟁이 '오라처럼 흥미롭게' 전달되는 모습을 낱말이 파헤친다.

도날드 덕은 전쟁을 '흥미'로 만들며, 만화 속에서 적군에게 가해지는 인종 차별은 은연중 현실이 되어 버린다. 1943년 디즈니 영화의 94%가 전쟁관련 영화였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 우리에게 친숙한 만화 주인공들의 눈부신 활약은 전쟁홍보의 일등 공신이 된다.

영화는 2차 대전 당시 만들어진 만화 영화들이 세운 전쟁홍보 공로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대중의 심리를 얼마나 전쟁에 우호적으로 몰고 갔는지 분석하고 있다.

데일리 네이션
THE NATION

네덜란드/ 1999/ 하일레 울레 & 주프
반 위저 감독/ 70분/ 다큐멘터리

기사 선택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신문 편집자들과 신문을 배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독자들을 쫓는 카메라라는 데일리 네이션이라는 케냐의 대안언론 통해 케냐 사회의 언론의 역할을 조명한다.

케냐에서 데일리 네이션에 대한 호응은 절대적이다. 사회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제 3세계의 언론상황에서 대안언론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소외계층의 소식과 입장을 담아내는 데일리 네이션은 그 사회의 진보와 변화 요구를 대변한다.

데일리 네이션의 성공은 과장된 기사가 아닌 '진실의 보도'를 요구하는 독자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알아야한다'고 믿는 신문쟁이들의 빛나는 성과이다.

판단

JUDGMENT

유고/ 유고공영방송/ 30분/ 다큐멘터리

<판단>은 매스미디어의 '조작'과 '과장'을 보여주면서, 그것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진다.

영국 상업방송 ITN은 유고내전 당시 세르비아 회교도들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만들어내 전세계 미디어에 배포한다. 수용소 철조망 너머로 분노에 이글거리는 시선을 던지고 있는 알바니아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바로 그것.

그런데 그 사진은 '사실'을 보도한 것일까? 영화 <판단>은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서 ITN의 취재현장을 녹화한 유고공영방송의 자료화면을 통해 사실과 그것의 '날조'를 소름끼치게 보여주고 있다.

카호 오라위
KAHO' OLAWÉ

미국/ 1997/ 데이비드 H. 카라마 Jr
감독/ 58분/ 다큐멘터리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한 장씩 넘기는 것처럼 <카호 오라위>는 눈부신 하와이의 풍경과 선주민들, 그들의 노래가 화면마다 시적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세계풍물기행이 아니다. 미군기지 반대를 위한 하와이 선주민들의 지난 20년 동안 험 없는 투쟁을 품은 <카호 오라위>는 조상들의 땅과 자연,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파괴하는 군사시설들의 철수를 주장한다. 감독은 선주민 2세로 하와이 선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 운동'을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더욱 절실하게 이야기한다.

오кина와 미군기지 반대투쟁
GUIDE TO U.S. BASE IN
OKINAWA

일본/ 1999/ 니이다 스스무 제작/
90분/ 다큐멘터리

1995년 10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오кина와의 미군기지 반대투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4년 가까운 기간에 촬영팀이 쓴 취재 테이프만 200시간.

1972년 이후 미군의 지배에서 벗어나 일본으로 복귀한 오кина와에 미군주둔을 위해 일본정부는 주민들 땅을 임대하고 미군기지에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미군기지를 존속시켜왔다.

1977년 5월, 오кина와 주민들은 반환을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미군기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개악한다. 의회에서 날치기로 이 법이 통과되던 날 방청석에 있던 주민들은 "평도독놈들!"이라고 외치다가 체포된다. 오кина와의 투쟁은 우리의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역작이다. (인권영화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20일(금)

제 17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려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주한외국대사관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한동안 대사관 유치장전이 벌어지더니, 최근엔 경찰이 아센 대화장 주변의 기업과 건물주로 하여금 위장 집회신고를 내도록 해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집회가 잦은 울산지역에서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처분을 이끌어내려는 기업측의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업무방해·명예훼손 이유로 신청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이란 방법을 먼저 시도한 것은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는 삼성그룹. 삼성SDI 부산공장(울산 울주군 위치)은 지난 7월 송수근(해고자) 씨 등 노동자들이 회사 앞 집회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방해등 금지 가처분신청'(아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박정현 판사)는 8월말 "(노동자들은) 부산공장 건물 주위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소음방송, 고함, 구호제창, 유인물 배포, 플래카드·사진게시, 피켓팅과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이 명령을 위반해 회사측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그 행위 1회당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다.

삼성 이어 현대그룹도

삼성SDI에 대한 판결 이후, 현대그룹도 잇따라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으로써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

지난 10월초 현대중공업은 해고자 17명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연맹 울산본부, 심지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까지 대상으로 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 요지는 노동자들의 집회가 '업무방해' 명예훼손 '회사 소유권 및 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 회사측은 신청서에서 "회사 정문 앞에서의 집회가 종업원들의 출퇴근 업무를 방해하고 농성과 시위를 하면서 회사를

비방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측의 신청 대리인은 '법무법인 원율' 소속의 김성환, 신면주, 정선명, 박춘기 변호사 등이다.

이에 대해 이경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소유권자가 건물을 세우거나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방해한다면 점유권 침해일 수 있겠지만, 정문 앞의 특별한 사용 용도도 없이 단지 집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도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엠프를 이용한 가두방송, 노숙시설물 설치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1천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가처분신청을 지난 9월 21일 법원에 냈다. 현대미포조선 앞에서는 해고자 김석진 씨의 복직을 위한 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창조)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포럼' 소속 10개 인권단체들은 19일 오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민간단체들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제지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0개 인권단체들은 또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는 아셈회의 반대의 목소리도 경계하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경찰 관계자의 파면 △민간단체 시위 강경진압 방침의 철회 및 인권침해 방지 △아셈회의 의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19일 저녁 송실대에 모여 '인권침해 감시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정했다.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부당한 검문에 대한 감시 및 대응 △불법연행

또는 경찰의 폭력행사에 대한 감시 및 대응 활동을 벌이게 되며, 이를 위해 비디오카메라로 현장을 기록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통한 법적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감시단에는 서울을 비롯, 광주·울산 등 각지에서 모인 인권활동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인권침해 감시단은 또 인권운동사랑방에 상황실을 설치해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02-741-5363)

(이창조)

민노총, 강남 집회 강행기로

집회금지 이의신청 제기

민노총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관계없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역 '뽕뽕사거리'에서 열기로 한 '아셈2000 반대·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차별 철폐 민노총 결의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경찰은 민노총이 신고한 집회장소와 행진구간에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일 집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장소에는 한국중공업이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아셈 성공개최 결의대회 및 환경정화 캠페인'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19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집회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민노총은 밝혔다.

이에 민노총은 '경찰이 사전에 집회 장소를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기업에 집회신고를 요청한 것이 드러난 이상, 이는 집회 봉쇄용 허위신고에 불과하다'며 19일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창조)

'전의' 다진 송실대 전야제

노동자·학생 등 5천여명 참여

19일 밤 송실대학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세계화 반대 투쟁 전야제' 행사가 열렸다. 2시간여 동안의 문화공연으로 진행된 전야제에는 노동자, 학생, 사회단체 활동가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20일 진행될 '아셈반대'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창조)

해외 인권단체 활동가들

"국보법 폐지" 연대행동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국제연대의 힘이 실렸다.

아셈을 맞아 방한한 해외 인권단체 인사 20여 명은 19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행동'에 참여,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국제연대의지'를 보였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주최로 열렸으며 해외 인사를 포함,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인도에서 카스트제도의 실질적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예수 마리안 씨는 연설에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이유로 국보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음을 안다"며 "한국의 국보법 폐지 운동에 굳건한 연대의 의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리안 씨는 인도에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 조항들의 폐지를 위해 싸우다 네 차례나 투옥된 경험이 있다. (심태섭)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둬 표명

정부와 여당이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들은 각각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인터넷등급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화' '온라인 시위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0여 개 사회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발표,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통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거둬 반대의를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또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올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정통부가 제출한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조)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③

게바라...동성애...어린이의 권리

<개막작>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
ERNESTO CHE GUEVARA :
THE BOLIVIAN DIARY
스위스/ 1996/ 리차드 단도 감독/
94분/ 다큐멘터리

'20세기의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칭송되는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그를 담은 영상으로 영화제의 문을 연다. 의사, 장관, 외교관... 그의 활동을 설명하는 많은 직위들. 하지만 게바라는 원칙에 충실한 '혁명가'로 전세계 민중의 가슴에 전해진다.

<볼리비아 일기>는 게바라의 최후가 책상 들머리가 아닌 전투가 벌어지는 빨치산 투쟁의 현장이었음을 확인하고 그의 혁명가적 삶을 엿보게 한다.

영화는 혁명 이후 쿠바의 대사로써 게바라가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당시의 뉴스 화면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영화는 게바라가 쿠바를 떠나면서 남긴 편지를 카스트로가 읽는 장면으로 이어지지만, <볼리비아 일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다음화면부터이다.

게바라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난 지금의 풍경을 거쳐 볼리비아의 산간오지를 들어가는 카메라. 게바라가 꼼꼼히 기록한 일기를 따라 여정은 계속된다. 게릴라, 농민들의 증언, 게바라의 빨치산 시절 흑백 사진, 어느 시골 학교 앞마당에서 볼리비아군 병사에게 총살당하는 게바라의 최후를 기억하는 한 여자의 증언, 빨치산 동료 등... 어느새 관객은 카메라의 추적 끝에 빨치산 게바라를 만나게 된다.

◎ 10/27(금) 오후 8:30 이화광장
◎ 11/1(수) 오후 6:05 법정대

<특별상영>

제9법안 찬반투표
BALLOT MEASURE 9
미국/ 1994/ 헤더 맥도날드 감독/
72분/ 다큐멘터리

1992년 오리건주에서 치러진 반동성애법안(제9법안) 찬반 투표를 둘러싼 투쟁을 그린 영화.

<제9법안 찬반투표>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적다는 이유로 말년의 미셸 푸코가 동경했던 나라 미국에서조차 지역에 따라선 얼마나 지독한 동성애 혐오증과 편견이 만연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제9법안이 노리는 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한 헌법의 개정.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집단은 '가족의 가치(Family Values)'그룹과 오리건 시민 연대(OCA)로, 이들은 동성애가 유아성애와 다를 바 없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라고 선전한다.

이 선전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 동성애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아이들조차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갖는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반동성애자들의 테러가 극심해지고 같은 투표가 이루어진 콜로라도주에선 투표를 전후해 반동성애 폭력 사건이 275%나 증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동성애 캠페인의 싹을 수 없는 해악이 무지와 불신, 그리고 증오라는 점이 차츰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영화는 단순히 동성애 차별 반대론자의 시각만 제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차별론자의 주장과 논리도 충실히 전달하면서 양자의 격렬한 싸움의 한 가운데 관객을 끌어다 놓는다. <제9법안 찬반투표>는 단순한 동성애자 옹호가 아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비합리와 눈먼 증오의 증언이다.

◎ 10/29(일) 오후 7:20 학생회관

<어린이를 위한 '인권영화'>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
시리즈 CARTOONS FOR
CHILDREN'S RIGHTS

1998/ 유니세프 제작/
애니메이션/ 15분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쉽고도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애니메이션.

30초 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은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통해 '아동노동, 전쟁, 난민, 가정환경 상실' 등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현실을 가슴 저미는 아픔으로 전달한다.

아동은 '방임과 성적 학대, 유해한 노동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어긋난 부끄러운 현실의 반성부터 '생존과 발전을 누릴 권리, 사상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 권리' 내용까지, 아동의 권리를 안내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열쇠는 협력에 있다"는 유니세프(UN아동기금)의 믿음이 담긴 이 작품은 1994년 유니세프 커뮤니케이션 분과가 세계 곳곳의 뛰어난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만들어졌다. 25개국 80여 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이 참여해 100여 개의 30초 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것 중, 이번 영화제에서는 주제별, 나라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24편의 영화만 선정하여 상영된다.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쿠바, 스페인, 페루 등 다양한 나라의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다는 즐거운 덩어지 제공되는 영화다.

◎ 10/27(금) 오후 5시 법정대 강당
◎ 10/29(일) 오후 1시 법정대 강당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21일(토)

제 17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아셈 반대' 시위가 열린 20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시위를 저지하려는 경찰의 폭력행사가 잇따랐다.

20일 오전 강남역 인근 뽕뽕사거리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와 아셈 반대' 시위에 대해 경찰은 장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진압에 나서 배흥현(동성애자 인권연대) 씨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오전 10시경 노동자,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집회는 경찰 15개 중대 2천여 명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미국의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었다는 아셈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답습, 오로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제3세계와 민중의 생존을 파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전 11시 무렵 1만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대가 강남역 방면으로 행진하자 경찰은 곤봉, 장봉, 방패를 휘두르며 진압에 나섰다. 특히 경찰 여러 명이 시위참가자 1명을 둘러싸고 무차별 구타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 취재중이던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시민의 신문 권우성 기자가 경찰의 곤봉세례와 발길질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시위대는 12시경 강남역 집회를 마무리하고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했다.

오후 3시경 올림픽공원에서는 1만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셈 2000 서울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집시법을 악용하여 아셈회의장 근처 모든 곳에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5시 무렵 잠실운동장 앞까지 행진, 경찰과 1시간 가량 대치했으며, 오후 6시30분 경 "전 세계에 아셈에 반대하는 뜻을 충분히 알렸다"며 자신해산했다.

한편 '서울 행동의 날'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채택, △여성·남성, 이주·국내, 정규·비정규 노동자 모두에게 완전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을 훼손하는 구조조정 철회할 것 △개발을 할 때 지역주민의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할 것 △아셈 안에서 추가적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WTO, IMF의 폐지 혹은 근본적인 민주화 등을 요구했다. (심보선)

논평

군인문사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말라

국방부 앞에 가 보라. 그곳에선 날마다, 자식을 군에서 잃은 유가족들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다. 머리를 삭발한 채 소복 차림으로 길바다에 주저앉아 있는 유가족들. 자식 잃은 부모치고 누군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려 마는, 이들의 절규엔 처절한 분노가 배어 있다.

군에 간 아들이 느닷없는 주검으로 되돌아 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죽음의 원인'조차 몰라야했던 것이 '군 의문사 유가족'들이다.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부대로 달려가 보면 아들의 사망은 이미 '자살'로 결론 나 있고, 사건현장은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는 호소는 일언지하에 묵살되고, 그렇게 죽은 아들들은 결국 의혹의 무덤 속으로 파묻혀 버리고 말았다.

이해숙 씨(고 박현우 상병의 어머니)의 경험은 군내 사망사건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처리되며, 또한 조작·은폐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현우 상병의 사망은 당초 '중과실에 의한 감전사'로 처리되었다. "자살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순직 처리가 가능한 사고사로 처리한 것이니 감사한 줄 알라"는 것이 부대 관계자의 설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표박 사흘간 부대 근처에서 사건을 추적한 어머니의 노력으로 인해 이 사건은 '상급자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던 것이다.

98년말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마지못해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조사작업은 '미리 내려진 결론에 꿩맞춰 가는 절차'에 불과했고 결국 지금까지 풀린 의혹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유가족들은 다시 국방부 앞을 찾았다.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시는 군내의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한 농성이다. 아셈회의 때문에 이틀간 집회를 금지당한 유가족들은 일요일(21일)부터 다시 기약없는 농성에 돌입한다. 이미 교인이 돼 향년할 기회조차 없는 아들들을 대신해...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정부가 3백명 이상의 외국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아셈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 행사에는 3백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가했다. 그들에게 향한 목적과 신자유주의와 아셈, 국제민중연대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았다. (김민선)

◎ 피에르 루잇(프랑스) :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단체인 ATTAC 소속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말해달라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진행과정의 비민주성. 두 번째는 경제논리가 정치, 사회, 인권, 문화 등의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제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 프랑스의 신자유주의 반대 움직임을 소개한다면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저항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임금인상, 실업문제해결 등의 요구가 있으며 최근 철도 구조조정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 IMF, 세계은행은 스스로 제3세계의 경제발전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세계경제의 법치, IMF의 규칙 자체에 반대한다. 그들은 종종 독재정권을 지원한다. 자유투자경제에서는 감자만이 살아남게 되며 제1세계의 제3세계에 대한 지배, 타국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법치가 지배하는 경제발전이란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가가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나까(프랑스) : 다국적 의류기업의 제3세계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단체인 '깨끗한 옷 운동(Clean Clothes Campaign)' 소속

- 단체의 활동내용을 소개해 달라

"나이키, 리복 등 세계적 기업들의 제조공장은 대부분 제3세계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의 작업환경은 열악하고 임금은 비참한 수준이다. 다국적기업은 제3세계 내의 경영은 공장소재국의 경영인에게 위탁되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그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기업과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 한국 정부가 3백여 명의 외국 민간단체 대표들의 입국을 불허했는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세계 수반들이 입국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민중들도 입국할 권리가 있다."

- 미국이 배제된 아셈은 신자유주의와 무관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다양한 국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 유럽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있다."

◎ 분디트 판위셋(태국) : 아시아의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의 친구들(Friends of Women Foundation)' 소속

- 한국에 온 목적은?

"태국의 노동운동 탄압을 세계에 알리러 왔다. 태국 듀러블 섬유회사에서는 4년간의 임금 동결 끝에 임금인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협상에 응하지 않자 1500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구사대를 동원해서 파업을 탄압했으며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아셈에 모인 정부 수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세계화가 빈곤을 추방할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반들은 빈곤층 문제에 무관심하다."

검찰 구치감에서도 알몸수색

피의자 수치심 유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알몸수색 사건에 이어, 구속중인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치욕적인 알몸수색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차수련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차 위원장이 수감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찰의 욕설과 반말에 항의하자 한 여경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훌랑 벗겨버릴 테니까 두고보자'며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알몸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구치감은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기 앞서 대기하는 공간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0일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알몸수색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근래 여성부국장은 "차 위원장이 '내 석방문제에 신경쓰지 말고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지난 5월 병원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9월 26일 자진출두해 구속됐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발표, "반인권적인 알몸수색에 대한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인권유린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창조)

보안관찰, 몇몇하면 밝혀라

법원, 또다시 "정보공개하라" 판결

보안관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법무부가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본지 9월 30일자 기사 참조). (심태섭)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④

억압받는 사람들 ... 세계민중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 산
달고는 친구가 없다 GOOD
KURDS BAD KURDS: No
friends but the mountains
미국/ 2000/ 케빈 맥키넨 감독/ 79분/
다큐멘터리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없는 민족, 쿠르드족(대략 2500만 이상 추정)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접경 산악지대에 거주하면서 아직까지 유목생활을 한다.

이들 나라에서 벌어지는 쿠르드족 탄압은 쿠르드족의 민족해방투쟁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투쟁은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매우 다르게 비춰진다. 미국의 숙적 이라크에 맞서는 '착한 쿠르드'와 터키에 대항하는 PKK 게릴라 '나쁜 쿠르드'가 그것. 이라크의 쿠르드 탄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으로 이어지지만, 터키의 쿠르드 탄압에는 냉담한 반응뿐이다. 오히려 미국은 지난 10년간 터키에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판매했다.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는 지난 9년 동안의 쿠르드족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감독초청

바그다드의 배가 SOLOS
FROM BAGHDAD

레바논/ 1999/ 사이드 케도 감독/
60분/ 다큐멘터리

56만명의 아동사망, 6분마다 1명의 아동 사망. 이라크 당국이 발표한 지난 10년간의 아사자 무려 135만명. 모두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가 낳은 참상이다.

"약이 있다면 벌써 나아서 학교에 다닐텐데...", "마취없이 전기충격 치료를 하는 걸 봤나요?" 세익스피어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책을 팔아서 딸아이의 장난감을 샀어요."

<바그다드의 비가>는 지난 9년 동안

이나 '경제봉쇄'를 당하고 있는 이라크 민중의 신음소리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문명화된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경제 봉쇄, 이 대량학살극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라크 민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가려진 전쟁의 참상을 폭로한다. *감독초청

마리아나의 눈동자
FOR THESE EYES

프랑스/ 1999/ 곤잘로 아리존 &
버지니아 마티네즈 감독/ 52분/
다큐멘터리

팔의 눈을 속 빼앗은 소녀, 마리아나. 그 소녀를 원수에게 빼앗긴 할머니는 마리아나의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 마리아나와 그녀의 엄마, 아빠는 독재정권에 의해 납치되고, 오직 마리아나만 살아 정보기관에 입양된다. 실종, 테러, 고문 등 1970, 80년대 남미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범해진, 또 하나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바로 이것. 아르헨티나 오웰광장의 어머니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마리아나의 할머니는 소녀의 사진을 들고 그녀를 찾아 나선다. 결국 소녀를 찾고 재판에서도 승소하지만 마리아나는 친부모와 할머니를 부인한다.

바람과 함께 오고 가다
COMING AND GOING
WITH THE WIND

일본/ 1989/ 야나기사와 히사오 감독/
154분/ 다큐멘터리

인물 하나 하나에 대한 정밀한 묘사, 찬찬히 기록된 그들의 공간,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당황스런 인터뷰 등 영화는 단 번에 내용을 간파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 조용한 흡입력으로 감상의 흥미는 점점 깊어진다.

감독 야나기사와가 복지시설 등 공동체 생활에 카메라의 렌즈를 밀착시켜

왔던 배경에는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다. 야나기사와의 문제의식이 단순한 '복지시설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은 까닭에 영화는 깊숙한 철학적 성찰로 유도한다.

베트남 : 마지막 전투
VIETNAM : THE LAST
BATTLE

영국/ 1995/ 존 필거 & 데이비드
문로 감독/ 52분/ 다큐멘터리

1975년 사이공의 미 대사관에 남았던 미국인들이 대사관 건물 옥상을 통해 헬기로 도주하는 것을 보도했던 존 필거는 20년 뒤 다시 베트남을 찾는다.

<베트남: 마지막 전투>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저지른 추악한 죄악을 환기시키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완성한 20세기 위대한 민족투쟁의 현재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정책 때문에 베트남의 빛나는 역사가 박제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감독의 조심스런 염려가 스며들어 있는 영화. '그들 방식으로 살아남기'는 희망에 불과한 것일까?

사라 바트만의 생애 THE
LIFE AND TIMES OF
SARA BAARTMAN

남아프리카공화국/ 2000/ 줄라 마세코
감독/ 52분/ 다큐멘터리

18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흑인여성 한 명이 백인의 손에 이끌려 런던으로 떠난다. 코이코이 부족이었던 그녀는 런던에서 '사라 바트만'이 되어 살아있는 전시물이 된다. 영국과 파리 전역을 돌며 신체 구석구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상한 쇼'에 팔려 다닌 사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의화실현 대상까지 된다. 이후 박제로 파리 인간박물관에 전시되는 기구한 운명을 맞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24일(화)

제 17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KBS에 겨울공화국 오는가
노조죽이기에 박사장 퇴진으로 맞서

KBS(사장 박경삼)가 노조 지도부들의 해고와 대량징계를 통보했다.

지난 20일 KBS는 현상윤 노조위원장과 김수태 부위원장을 전격 해고한 데 이어 현상윤 위원장과 김병욱 광주전남시도지부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폭력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조합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 중 박 사장 퇴진을 요구했던 위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회사의 이번 조치는 노조의 전면파업을 앞둔 시점에 단행된 것이어서, 노조 죽이기 차원의 사전정치작업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노조는 △제작자구성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을 경영진과 현업인들과 제정할 것 △환경직 종사들에 대한 정리해고방침 철회 및 고용안정 보장 등의 7대 요구안을 내걸고 2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본지 9월 15일자 참조>.

"힘없는 환경직만 정리해고"

더구나 이번 조치는 20일 오전 박 사장 출근길에 파켓시위를 벌이던 조합 집행부와 청원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뒤 격노한 박 사장이 간부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노조에 대해 초강경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박사장의 독단과 독선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상윤 노조위원장은 "박경삼 사장은 노사합의의 이행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고, 비대한 관료계층 대신 가장 힘없고 약한 환경직 조합원들의 정리해

고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개혁하고 거듭나기 위해 박경삼 사장의 퇴진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KBS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FD와 행정요원, 방송작가모임들도 "합법적인 노조를 결성했지만 박경삼 사장과 경영진은 단체교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거대 언론 권력인 KBS를 상

구호만 요란했던 경찰 '인권실천대회'

구체적 인권개선대책은 없어

경찰이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범집행'을 표방하며 '인권보호 실천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 구체적인 인권개선대책은 제시되지 않아, 전시성 행사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다.

경찰청은 23일 '국민인권보호 실천대회'를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련 법령 일제정비 △인권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운영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등의 '국민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알몸수색 파문을 의식해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장 훈령 8조)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님 지시로 종합대책과 인권보호 실천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알몸수색 건 때문에 이런 행사가 마련된 것"이라고

대로 법정투쟁과 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노련도 KBS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박경삼 사장퇴진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사장 퇴진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방송, 교육방송 노동조합과 연대할 예정이어서 이번 파문이 전 언론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박경삼 사장과 경영진은 지난 8월 '국방군사연구소'사태를 방영한 추적 60분의 MC와 책임프로듀서를 국방부의 반론보도 요청이 있자 10월 9일 교체했으며, 지난 21일 방영한 "KBS 특별회견, 일본 모리 총리에게 듣는다"에서 모리 총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망언을 편집 과정에서 삭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명문]

밝혀, 인권보호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행사가 아님을 간접 시인했다. 또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의 내용들이 추상적인 방침의 열거나 '검토'라는 표리표를 달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수립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인권보호 실천대회'를 준비하며 인권단체에 초청장을 보냈던 지난 20일에도 경찰은 '서울아셈 2000'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아셈회관 근처에 있는 건물주와 기업에 '거리환경청소'라는 명목의 집회신고를 종용한 의혹까지 받고 있어 '종합대책'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폭력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조영민 활동가는 "지침하달식으로 하는 일회성 행사에는 믿음의 안 간다"며 "전시효과를 노린 구호성 행사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보선]

정재숙의 인권이야기

영화 한 편을 볼 권리

남들은 버리고 별려 돈 주고 가는 곳에 날마다 공짜로 드나들 수 있는 것, 신문사 문화부에서 일하는 특권이자 재...

그렇게 십 몇 년을 객석을 지키며 얻은 깨달음 하나는 한국에서 문화란 건 대중문화까지를 포함해서 참으로 '있는 자들 놀음'이라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경우의 아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통로가 태어나면서부터 확 막혀있다고 말할 수 있다.

11월 2-5일 서울 아트선제센터에서 열린다는 '제1회 장애인영화제'는 영화제가 유행처럼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보석같은 영화제라 할 수 있다.

5년째 '인권영화제'를 이끌어오고 있는 서준식씨가 제주 4·3사건을 다룬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자리에서 한 말을 이뤘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16일 - 10월 22일)

1. 서울 시내 열린 '반아셈·반신자유주의' 합성 아셈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국내의 민간단체와 노동자·학생들, 서울 강남역 일대와 잠실 일대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시위 전개 (10/20)

2. 집회봉쇄 신중수법 등장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SDI 등 대기업들, 노동자들의 회사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방해등 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법원에 내 (10/19)

3. 삭발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 규명과 사건조작 은폐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사죄'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 (10/13-)

4. 제버릇 버릴 수 없는 공안대책기구 김문수 의원, 롯데호텔 사태 등에 공안대책협의회 개입 사실 폭로...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잠잠하던 공안대책협의회 부활 신호탄? (10/20)

5. 해고생활 4년의 고통 벗어날까? 삼미특수강 해고자들, 포천의 고용승계 요구하며 자전거천리대행진 벌여 (10/11-20)

6. 사실로 드러난 롯데호텔 성희롱 노동부, 롯데호텔 여직원 성희롱 조사결과 모두 81건 68명이 성희롱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10/17)

7. 이주노동자 가혹수사 또 물의 경찰이 살인용의자로 조사하던 이주노동자 4명을 조사과정에서 발로 짓밟는 등 가혹수사를 했으며 시민단체들 진상조사 요구하고 나서 (10/16)

8. 끈질긴 유착관계, 포주와 경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군산매매춘업소 포주와 파출소 경찰 간의 유착 관계 폭로 (10/16)

9. 과거청산 제대로 하라!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 개정 및 인혁당사건 관련자 사면복권, 박정희기념관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 촉구 (10/20)

수지로 본 인권

1. 두발과 탈선, '아무관계 없음' <교육부 국감>을 9월까지 학교 밖에서 탈선행위를 한 전국 고교생 387명 가운데 머리규정을 위반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6명으로, 전체의 3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10/19)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나는 행복하다

2000/ 감독 류미례/ 제작 푸른영상/ 46분/ 다큐멘터리

오늘도 엄마가 세금을 내기 위해 쟁겨놓은 돈을 몽땅 들고 나온 허중이. 노래방 가기를 좋아하는 은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다. 그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나는 행복하다>는 이렇게 출발한다.

총 8만4천여 명으로 인구 1천명에 1.95명 꼴인 정신지체인은 여러 장애 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사회 생활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4월 9일

2000/ 감독 김태일/ 제작 푸른영상/ 125분/ 다큐멘터리

1975년 4월 9일, 사법역사상 암흑의 날. '인혁당'사건은 사법부의 살인재판이라는 오명만큼이나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남아 있다.

당시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사건 관련 혐의자는 1천여 명, 사형만도 8명, 핵심인물들은 무기에서 징역 20년, 15년까지 선고되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불온한 자들에 대한 처벌로 기록될 뻔한 사건. 하지만, 또 하나의 기록이 우리를 압담하게 한다.

4월 8일 대법원 선고 하루만인 4월 9일, 8명의 사형집행. 그리고 사건 이

후 7년 이내에 살아남은 사건관련자들의 전원 석방. 그러면 사형만 아니었다면...

김태일 감독이 3년 전 인혁당의 진실 찾기 시작했을 때 그가 직면한 문제는 점목이었다. 인혁당 관련자 대부분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자칫 오해소지가 많다는 등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인혁당이 실재했느냐 아니냐보다는 그들이 추구했던 바, 바꿨던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 없이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갖춰져야만 가능하다'는 감독의 말처럼 우리 스스로 인혁당 사건을 풀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하게 하는 영화. <4월 9일>은 방대한 자료화면, 관련자,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따라 인혁당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려 한다.

성매매 거리에서 쏜 꿈에 관한 보고서

2000/ 감독 김양래, 김민정/ 제작 한소리회, 장수하늘소/ 67분/ 다큐멘터리

"어떤 예는 손님이 던진 염산을 뒤집어 쓰고 죽었어. 무섭지. 왜 안 무서워. 근데 어떻게 하겠어. 갈 곳이 없는 걸..."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성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매춘여성들. 꿈속에서조차 "단골 왔다"는 포주의 말 한마디에 벌써 잠에서 깨어나는 그들은 어느 한순간, 어느 곳에서도 매춘의 일상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99년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에서는 "매매춘과 성매매 행위는 인간 조건에 있어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매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리고 이 보다 먼저 우리정부는 84년에 가입한 UN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따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엄마요 성그늘

2000/ 감독 류수정/ 제작 영상기록 다큐-인/ 50분/ 다큐멘터리

경서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엄마놀이. 작은 인형을 안고 좋아하는 경서는 아기를 사랑할 줄 아는 '엄마'다. 하지만 경서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한다. 세상 되던 해 부모가 이혼하면서 치매에 걸린 증조할머니와 증풍에 걸린 할아버지, 그리고 공공근로로 생계를 잇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구조조정과 실직, 빈곤과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한국 저소득층 가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경서네 집. 한끼 식사를 정부 급식에 매달리는 가정에서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는 요원하기만 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절망의 공장’으로 변한 현대중공업

일상화된 감시통제...노동자 기본권 실종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울산 현대중공업 내 ‘현장조직’ 가운데 하나인 ‘전진하는 노동자회’ 사무실에 걸린 글귀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대기업 노조로는 유례가 없던 128일간의 파업투쟁(88-89년)과 최초의 굴리앗 농성투쟁(90년) 등을 거치며 ‘한국 노동운동의 최정예’로까지 불렸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사업장을 ‘절망의 공장’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것은 지난 10월 18일. 미리 노조측에 방문을 신청하고, 이를 노조가 회사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통보를 접수한 회사측(노사협력실)은 별다른 해명 없이 기자의 출입을 불허했다. 현대중공업의 단체협약 상 외부인사의 회사출입 문제는 ‘노사협의’로 처리되는 사안 이긴 하지만, 실재론 노조 사무실 출입마저도 회사측의 판단에 따라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대중공업의 출입구에서부터 통제의 일면은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조 출입도 ‘회사 허락’ 아래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9월 19일부터 조합 사무실 앞에서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유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안을 던져 놓은 채 교섭을 중단한 데다, 감모와 회유를 통해 조합원들로부터 회사측의 안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버렸기 때문. 이로 인해 노조가 농성에 돌입하자 회사측은 경비대와 관리자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전

같으면 노동자 상당수의 분노를 살만한 일이었음에도, 노조 집행부의 농성을 지지하면서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고작 3백여 명, 2만여 조합원 가운데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측이 노동자들의 집회참가 사실을 일일이 촬영 또는 기록해 소속 부서로 통보하면서 이들을 감시통제해 온 결과물이다.

전명환 노조 분소장(중전기 부문)은 “지난 17일 회사 내 집회에 참석했던 한 대의원이 관리자에게 불려가 ‘왜 집회에 참석했느냐’는 질책을 받았다”며 “집회에 참석하면 반장, 팀장, 운영과장, 부서장, 이사 순서로 불려다니며 면담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원들 대다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집회참가자 일일이 감시통제

현대중공업 노조의 어려움은 노조 대의원의 성향에서도 드러난다. 현 노조 대의원 가운데 무려 70%가 회사측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것.

이는 대의원선거에 이미 회사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회사측은 20명의 추천서명을 받아야 대의원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쫓겨러운’ 후보의 출마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입장에 반하는 후보자를 추천한 노동자에게 서명취하를 종용하거나, 심지어 친인척을 통해 후보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케 하는 일이 일상화되었다는 것

2000년 10월 25일(수)

제 17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결국 관리직인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대의원 자리가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3월 한 관리직 간부가 대의원에 “어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활약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간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태다.

회사측 개입, 대의원도 무력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회사측은 노사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조합원들을 협박·회유하기까지 했다.

올 7월부터 시작된 노사교섭에 있어 회사측의 입장은 ‘임단협 통합협상’이었던 반면, 노조측의 입장은 ‘후퇴한 단협 원상회복 및 전임자 문제 해결 뒤, 임금협상’이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교섭이 진행중이던 9월 5일, 임금 인상 안을 봉투에 넣어 노조 사무실에 던져놓고는 교섭을 중단해 버렸다. 이어 관리직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회사에서 제시한 최종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건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제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회유와 협박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던져진 미끼는 ‘서명에 참여하는 자에 한해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노조측은 회사로부터 서명을 강요당한 조합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해두고 있다.

한때 ‘잘 나가던’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처럼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물리고, 그 외중에 노동자들의 기본권마저 뺏기고 있는 배경은 94년 말과 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조 지도부의 투쟁 방기에서 비롯된 조합원들의 이반 현상과 회사측의 치밀한 노무관리 정책이 맞물리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창조)

☞ 내일자에 계속

<인터뷰> 이종희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지난 주 아셈이 열리는 동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때보다도 풍성했다. 20일 아셈회의장 주변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구호로 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의 이종희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 투쟁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주영)

◆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큰 상처의 일부라는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견 큰 의미가 있다. 한국 민중들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온 IMF 구조조정을 문제시할 수 있는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우리는 위기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 내부적 문제로만 돌리고 사회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책임을 생각할 통로를 차단당했다. 이러다 보니, 노동자가 ‘쫓겨나가’고 비정규직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았고, 외국자본은 무조건 많이 들어오면 좋다는데 그다지 이익을 달지 않았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제도화하는 투자협정이나 WTO 문제는 남의 이야기로만 비춰졌다. 하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시애틀 등지에서 벌어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 투쟁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이 널리 공유되었다.

◆ 10월 20일 시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는데...

‘집회→행진→마무리집회→뒷풀이’에 서의 ‘넛다리’ 식으로 진행되는 시위문화를 바꿔보려는 계획이 없지 않았다. 20일 아침 아셈회의장 근처에서의 기습시위나 뱅뱅사거리에서 경찰의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인 투쟁들이 부족했다는 의견들에 여전히 동의한다. 몇가지 행동계획들

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또 후퇴해버린 시위문화의 관성을 깨보려 했는데 쉽지 않았다. 내가 소속돼 있는 WTO반대국민행동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앞으로 싸움의 풍토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 민간단체포럼이 아셈에 요구하는 ‘소셜포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험한 발상이다. ‘소셜포럼’이란 결국 사회적 합의체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높은 생산성, 완전고용 하에서 노·사·정이 서로 주고받을 것이었던 시절에 겨우 가능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회적 합의’란 미명 하에 정리하고·파견근로·변형근로시간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민중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조지 소로스가 했던 말이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체가 필요하다.” 비민주적이라 비판에 직면한 WTO가 최근 협주어 말하

는 것도 ‘NGO의 참여’다. 이에 NGO의 참여가 오히려 ‘세계화기구’들의 정당성을 더 강화시켜줄 뿐이란 지적이 전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마당에 ‘소셜포럼’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 앞으로의 과제는?

현재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문제다. 정부는 한·미, 한·일, 한·철레투자협정을 모두 올해 안에 체결하겠다는 계획인 듯 하다. 다음 달 20일 경엔 투자협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를 불러 지금까지 비밀리에 진행돼 온 협상내용을 공개하게 하고 논쟁을 벌일 것이다. 투자협정은 신자유주의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IMF에 근본적으로 대항하는 싸움도 준비해야 한다. 제3세계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주빌리 사우스’는 외채 거부, 구조조정 프로그램 거부를 통해 IMF에 맞서고 있다. 외채를 담보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구조조정해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적 세계 시장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IMF가 하기 때문이다. IMF 구조조정을 경험했고, 지금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진행 중인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한다.

이번 싸움을 계기로 몇몇 활동가들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에 기반한 국제연대운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 정보상 ●

공판

- 매항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관련 민사소송
■ 10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민사지방법원 561호
- 매항리사격장 폐쇄투쟁 관련 공판(전만규·김용한 등, 집시법 위반)
■ 10월 27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행사와 동경

-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을 위한 간담회
■ 때 : 10월 25일(수) 오후 2시 ■ 곳 : 성공회 서울대성당
■ 문의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화 02-747-8630)
- 미군범죄희생자추모 소파전면개정을 위한 노래판 ‘봉숭아’
■ 때 : 10월 28일(토) 오후 5시 ■ 곳 : 연세대학교 대강당
■ 문의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02-744-1211)
- <시민감좌> 조선일보를 아시나요?
■ 때 : 10월 31일(화)-12월 1일(금), 매주 화·금 오후 7시30분-9시
■ 곳 : 동국대학교 ■ 주최 :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02-3142-0700)

<제5회 인권영화제 부대행사>

인권영화제가 마련한 특별한 이야기 마당
"영화도 좋지만 이야기가 있어 더욱 좋다"

이야기 하나: 범죄 보도와 인권

◎ 때: 10월 28일(토) 저녁 6시 30분-7시 30분
◎ 곳: 이화여대 법학과 405호
◎ 모시는 분: 사회 - 남영진(미디어오늘 사장) 토론자 - 차병직(변호사), 김창석(한겨레신문 법조기자), 이지혜(민연 TV 모니터 분과 간사)

TV와 신문 등을 통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접하게 되는 범죄 보도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윗도리를 걷어올리고 카메라를 향해 문신을 내보이는 조지 폭력배들, 무죄 추정 원칙은 제쳐둔 채 피의사실은 공표되고 포토라인에 서서 카메라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범죄의 피해자가 오히려 마스크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일 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권영화제에서는 언론 모니터를 해오신 분과 현지 기자와 변호사를 모시고 △범죄보도의 현장 △TV의 사건 보도 형태 △범죄 보도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입장 △무죄추정의 원칙과 보도기관의 역할 △보도피해의 구제 방안 △범죄 보도에 있어서의 인권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 둘: 미군기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때: 10월 28일(토) 저녁 6시 40분-7시 30분
◎ 곳: 이화여대 학생회관 시네마텍
◎ 모시는 분: 사회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 토론자 - 김용한(소과개정 국민행동 집행 위원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매화꽃 피는 마을 '매항리'의 미군 폭격장, 서울 시민이 마신 미군기지의 독극물, 심심찮게 우리의 심기를 자극하는 미군 범죄들...
흥분을 접고 '미군기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 차근차근 따져 보려 합니다. △한국 내 미군기지 현황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는 무엇이 있나 △미군기지에 대항하는 운동 현황 △세계적 추세 등을 알아봅니다.

이야기 셋: 동성애자의 인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때: 10월 29일(일) 저녁 8시 40분- 10시
◎ 곳: 이화여대 학생회관 소극장
◎ 모시는 분: 사회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토론자 - 정기상(동성애자인권연대 교육담당), 한태윤(버디 편집장), 흥남영(웹진 리어카 대표)

동성애자의 인권에 관한 어떤 질문이든지 환영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이지만 이런 저런 편견과 공격에 노출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야만 하는 동성애자들, 그들의 인권이 가식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일 수만은 없습니다.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차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반대하기 위해 마련한 대화의 장입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26일(목)

제 17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경찰 대공수사반이 인터넷방송국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댔다. 국가보안법 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발생한 일하기에 그 배경이 더욱 의심스런 일이다.

서울시경 보안수사2대 소속 형사 10여 명은 24일 오후 5시경 인터넷방송국 '청춘'(http://chungchun.net)의 윤여창(28) 대표와 신봉구 제작팀장, 김유경(대학 휴학생)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씨는 체포영장에 의해, 신 씨와 김 씨는 긴급체포 형식으로 연행됐다. 경찰은 또 '청춘' 사무실로도 쓰이는 윤여창 씨의 자취방에서 컴퓨터 3대와 비디오카메라·디스켓 등 관련물품과 수첩·지갑 등 개인물품을 압수해 갔다. 경찰이 제시한 체포 사유는 △반미자료집 2·3·4호, 문예일꾼 교양지 '자주문의 길', '과학생화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목적으로

로 인터넷방송국 '청춘'을 개설하여 △8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반미투쟁 등을 촬영·방영하여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선동했다는 것이다.

불법구금에 밤샘수사

25일 윤 씨를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경찰이 '청춘'의 이적성 여부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이상 국보법 7조) 혐의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청춘'이 한총련 산하 선전조직이 아니냐는 점을 추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윤 씨는 "촬영을 위해 한총련과 접촉했지만, 한총련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경찰측 추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안동 대공분실측은 윤여창 씨를 오전 5시까지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사건 피의자가 국정원이나 대공분실로 연행되더라도, 관할경찰서에 유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개 의원으로는 유재건(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 단장), 이호웅, 심규섭, 정범구, 임종석, 송영길, 이미경, 이창복, 이재정, 김영환, 김성호, 신기남(이상 민주당), 김원웅, 안영근, 김홍신, 서상섭, 심재철(이상 한나라당)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심태섭)

김승교 변호사는 "대공분실에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굳이 규정을 지켜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수사관들은 오늘(25일)도 대공분실에서 재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청춘은 어떤 사이트인가?

스스로를 '자주적 인터넷방송국'으로 부르는 '청춘'은 △아셈반대투쟁, 매향리투쟁 등 각종 투쟁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 △조선노동당구약 등 각종 문서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지난 8월에 설립, 운영돼 왔다. 윤여창 대표는 충남대학교 92학번으로, 지난해까지 총학생회 활동을 했으며, 올 5월부터 후배 신봉구 씨와 인터넷방송국 준비를 해왔다. (이창조)

◎ 바로잡습니다

· 본지 10월 20일자 '경찰, 외국인노동자에 가혹행위' 기사와 관련, 수원 엠마우스 관계자는 감비아인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통역인으로 갔다가 인도네시아 국제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잠깐 면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10월 24일자 'KBS에 겨울공화국 오는가' 기사에서, "박사장 퇴진을 요구했던 위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는 부분을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로 바로잡습니다.

또, "박권상 사장과 경영진이 개입하여 일본 모리 총리의 독도 망언을 편집과정에서 삭제하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 KBS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 노조측은 "평소 박사장이 국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작환경으로 인해 지난 21일 방영된 'KBS 특별회견, 일본 모리 총리에게 듣는다'에서 모리총리의 망언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십년 걸쳐 쟁취한 권리, 한 순간에 뺏겨

현장투쟁 방기·노무관리 강화의 귀결

☛ <현대중공업> 어제 기사에서 이어짐

89, 90년만 해도 "웃으면서 파업했다"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급속히 힘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노동자들은 이를 94년 말 이후 노조 지도부의 투쟁 방기와 5년여에 걸친 무쟁의, 그리고 회사측의 집요한 노동자관리 정책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94년 63일간 파업투쟁을 벌였던 이갑용(98년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부가 구속된 이후,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선봉이 불어닥쳤고, 성과급 차등지급이나 연차수당 삭감과 같은 조치들이 내려졌다. 이는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에선 조기직업 거부나 집단조퇴, 악질관리자 지시거부 투쟁과 같은 일상적 투쟁이 계속됐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일상투쟁을 방치했고, 결국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는 현격히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회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조합의 영향력을 잠식해 들어갔다.

해고자 천석복(91년 해고) 씨는 "95년 당시 집행부가 차라리 어용집행부였다면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뒤엎었을 것"이라며 "민주집행부라는 이름 아래 조합원들을 방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민주노조에 실망하고 자포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노조 선전차장은 "5년의 무쟁의 속에서 조합원들 사이엔 '이젠 참여하면 회사에 찍힌다'는 피해의식이 만연해 있고, 결국 조합원들은 방관자로 남게 된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조 약화=노동자 기본권 상실로

노조의 약화는 결국 노동자들의 기본권 박탈로 이어진다. 현재 현대중공업에서는 조기청소 명목의 시간외 작업이 일상화되어 있다. 단체협약상 오전 8시부터 시작되어야 할 작업이 7시 때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수당의 지급 없이 노동착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산재를 또한 취약한 노동환경과 강도높은 노동조건을 드러낸다. 건설업을 제외한 30대 기업의 산재율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은 98년부터 3년 연속 산재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도 98년 242명(사망 9명), 99년 268명(5명), 2000년 5월 현재 154명(3명) 등 갈수록 산재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기관지 <민주항해>는 이를 빔대 '죽음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한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의 진광욱 정책국장은 "같은 계열사인 현대자동차는 노조활동이 왕성해 현대중공업과 같은 문제가 없다"며 "작은 사업장 중에도 중공업처럼 극심하게 노조를 깔아뭉개는 사업장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노조 선전차장은 "80년대와 같은 무식한 탄압은 사라졌지만, 노동자들의 내면의 문제인 생각과 표현의 권리는 더 치밀하게 통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조)

● 정보생 ●

간행물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엮음/ 도서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0년 10월 / 7000원/ 220쪽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기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렸다. 1999년 한해 동안 286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등 지난날의 인권침해 관행은 계속되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는데, 구속자의 90%가 넘는 261명에게 7조가 적용되었다.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제7조 제3항의 본질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제2차보고서 검토회의와 국가보안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문의 : 02-522-72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세기의 인권1,2』

한국인권재단 엮음/ 한길사/ 22000원/ 2000년 10월 / 630쪽

한국인권재단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1999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 학술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을 묶어 출간했다. △인권의 기본문제들 △국가권력과 인권 △국가정보활동과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인권이라는 주제 아래 각각 4편에서 5편에 이르는 논문들을 묶었다.

주요 수록 논문은 △세계경제체제와 인권문제 △국제질서의 변동과 반인도적 범죄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가비상사태와 인권 △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문제 △소년사법과 인권 △국가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의 국민관리체제와 인권 △경제위기의 생존의 권리와 복지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자의 인권 △주거권 보장과 인간다운 주거생활 △노숙자문제의 구조와 대책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 △발전의 권리와 개발 등이다.

◎ 문의 : 02-6261-1210 (한국인권재단)

수원인권영화제 10/27-29일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우리들의 삶과 희망 옛보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신자유주의 △장애인 △장기수 △동성애자 문제와 관련된 영화 등을 상영한다. '황제의 새옷', '로저와 나' 등 모두 25편이 상영되며, 29일 폐막식에는 '신자유주의에 위협받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관람은 무료.

◎ 문의 : 031-213-2105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⑥ 끝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2)

데모크라시 예더봉 - 8888양공, 9999서울
2000/ 감독 박두병, 김이찬/ 제작 독립영화제작소 이음/ 92분/ 다큐멘터리

1999년 2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단체가 생겨났다.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그것. 3000여명의 정치범 수감, 3호담당제, 팩스, 이메일 등 외국과 연락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의 통제, 소수종족에 대한 초도화작전, 96년 이후 대학폐쇄... 버마의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38년째 계속되는 군사정권의 폭압 아래 조국의 민주화를 쟁취하려는 이들의 투쟁은 88년 8월 8일 버마인 총궐기가 있는 지 10년여 만인 지난 1999년 9월 9일 서울에서 계속됐다.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는 휘날린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의 깃발.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신분의 위협을 무릅쓰고 투쟁에 나서는 그들의 모습에서 '버마의 봄'을 미리 그려본다.

보이지 않는 전쟁-인도 비하르 리포트

2000/ 감독 이성규, 이승준/ 제작 (주)옥토타그램/ 90분/ 다큐멘터리

인도 헌법은 인구 15%를 차지하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 Caste)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였다. 또 헌법 제15조는 종교, 인종, 카스트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는 불가촉천민은 철폐되며, 이런 차별 사실이 발생할 경우 법으로 처벌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가촉천민의 열악한 지위는 농촌지역, 특히 비하르(Bihar)와 같이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으로 갈수록 뚜렷이 존재한다.

1960년대 말 인도에서는 봉건적인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좌익무장투쟁-낙살바리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하다고 알려진 땅 비하르에서 꽃을 피운다. 그러나 기득권의 반발은 폭력적이다. 사병조직을 동원한 상류층 카스트들은 하층 계급인 농업노동자와 불가촉천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고, 비하르는 점차 통곡과 학살의 땅으로 변해간다.

인간의 시간

2000/ 감독 태준식/ 제작 노동자뉴스제작단, 현대중기산업노동조합/ 116분/ 다큐멘터리

IMF로 정부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던 1998년. 정부의 퇴출 발표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빼앗긴 현대중기산업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투쟁에 나선다.

퇴출 명단 2백여 노동자들의 평균 나이는 40대 후반, 젊음을 바친 일터에서 한순간에 쫓겨난 '늙은 노동자'들은 조계사에서부터 현대 본사 앞, 영등포 산업선교회로 옮겨가며 무려 450여 일에 걸친 농성투쟁을 전개한다. 그러나 이들이 내지르는 함성에 대답하는 것은 주위를 에워싼 공권력과 구사대뿐. <인간의 시간>은 450여 일에 걸친 기나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동지의 죽음과 해체된 가족만이 남겨진 우리시대 노동자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평행선

2000/ 감독 이혜란, 서은주/ 제작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72분/ 다큐멘터리

98년 여름,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뜨거운 한판 승부가 벌어졌다. 하지만 결국 타협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희생이 강요됐고, 277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중 143명은 '갑주적 부대' 식당아줌마들이다. 잘못된 정리해고는 되돌려야 한다며 나선 출근투쟁과 퇴근 후 정문투쟁, 그리고 알몸시위와 단식. 하지만 한 몸 같았던 노조로부터도 외면 당하고 그들의 '월지복직' 요구는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은 먼지로 존재했던 143명이 단련된 노동자로 서기까지의 투쟁을 담고 있는 영화는 '당신의 노동조합은 안녕한지..?'를 묻는 가슴 아픈 3년의 기록이다.

평화의 시대

2000/ 감독 구재모, 김한태/ 제작 독립영상프로덕션 다큐이야기/ 60분/ 다큐멘터리

부녀자 강간, 어린이 성추행, 소음과 환경파괴, 위협받는 안전... 미군의 주둔과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의 삶을 황폐화 시켰다. 물론 '미군'으로 표현되는 '군사적 폭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평화의 시대>는 매항리 문제를 비롯해 그 어느 해보다 주한미군의 폐약성이 많이 드러난 한해였지만 더디게만 변해가는 사회를 향해 던지는 감독의 뜻 있는 말걸기이다.

영화제 후원회원 모집

- 1만원: 해설책자 증정
- 2만원: <어린이 인권만화 모음집> 증정
- 10만원 이상: <대지의 소금> <어린이를 위한 인권만화> <평행선> <황제의 새 옷> 가운데 택 3편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 모든 영화는 무료 상영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27일(금)

제 17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알몸수색 발뺨,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 공언

차수련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알몸수색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확인 과정에서 "내 목을 내놓을 수 있다"며 사실을 부인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21일자).

차수련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내 경찰관실 구치감(서초서 관할, 소장: 최승계)에서 여러 입감자들과 동시에 알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뒤늦

게 알려졌다. 이에 본지 기자와 보건의료노조 김근래 여성부국장은 사실 확인 차 서울지검을 찾았으나 당시 알몸수색을 진행했던 여경과 현장책임자는 "최근 여성 입감자에게 알몸수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차 위원장과 함께 입감한 다른 수감자들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단약 알몸수색이 사실이라면 내 목을 내놓겠다"고 말하며 완강히 부인했다. 심지어는 차수련 위원장을 지칭하며

"어떻게 공인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담당검사, "알몸수색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한 검사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25일 차 위원장의 담당검사인 강찬우 검사는 김근래 보건의료노조 여성부국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차 위원장과 함께 입감한 7명중 2명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차 위원장이 증언한 것처럼 알몸수색이 있었으며 진정서를 제출하면 공무원 기강과 관련된 부서에 진정서를 대리 제출해 담당 경찰을 징계 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직접 명백한 증언을 확보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차수련 위원장은(서울구치소 수감 중) "어떻게 검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차 위원장은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격노했다.

인권단체, 재발방지대책 촉구

이번 사건과 관련, 인권운동사랑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국민 인권보호 실천다짐대회"를 연지 불과 사흘만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장 책임자를 해임하고 직속상관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도 같은 날 경찰청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차수련 씨에 대한 알몸수색의 진상규명과 경찰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26일 천주교인권위를 비롯한 3개 인권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관련 경찰과 현장책임자의 중징계, 경찰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명문)

오늘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

이화여대 ... '세계바라' 야외상영

인권운동사랑방과 이화여대총학생회가 공동주최하는 제5회 인권영화제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오늘 개막된다.

오후 5시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시리즈>의 상영으로 시작되는 5회 인권영화제는 오후 7시 이화광장(야외)에서 연기자 홍석천 씨의 사회로 개막식을 갖는다. 개막식에서는 주최측이 준비한 다양한 영상물이 상영된다. 개막식에 이어 이화광장에서는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볼리비아의 일기>가 인권영화제에서는 처음으로 35mm 필름으로 상영된다. 날씨가 추워도 야외상영은 예정대로 진행되니 두툼한 복장 필요.

(오늘의 상영일정)

◎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

5:00 - 5:15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 시리즈 (외국, 애니메이션)

5:25 - 6:50 스킵츠보로; 미국의 비극(외국)

◎ 이화광장(야외상영)

7:00 - 8:20 개막식 - <2000 인권뉴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 하이라이트> <상영작 하이라이트> 상영

8:30 - 10:00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외국)

<인터뷰> 사이트 케도(레바논, 인권영화제 초청감독)

"이라크 경제봉쇄, 민중들 사경으로"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는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바그다드의 비가'의 사이트 케도 감독(레바논·47)을 만났다. 그는 제5회 인권영화제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 이번에 상영되는 '바그다드의 비가' 내용을 소개해달라

-10년에 걸친 경제봉쇄로 식량, 의약품 등 필수품이 모자라 2천2백만 이라크 민중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 영화는 이라크 민중들의 고통을 기록한 것이다.

◎ 이라크 경제봉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량살상 무기' 제재는 명분에 불과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이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 우려해서 취한 조치다. 사담 후세인이 미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 이를 짓누르려는 것이다. 미국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이라크 민중을 사경으로 몰고 가는 경제봉쇄에 반대한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인권은 자국민의 인권을 넘어 이야기하거나 인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노리는 것에 불과하다.

케도 감독은 1972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카나' 등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했다. 특히 '카나'는 1997년 베이루트영화제, 테헤란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 그 동안 만든 영화가 일관된 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해왔다. 또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 신음을 그리고자 했다. 미국, 러시아 등 누가 일으켰든 어떤 명분이든 지 반대한다.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전쟁정책도 반대한다.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의 생존조차도 어렵게 만든다.

더구나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가능성도 사라진다.

◎ 중동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이유는?

-항상 내전과 비슷한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사람을 파괴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의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를 미국이 지원 혹은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났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충분히 누리야 한다. 인간의 존엄 혹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무기를 만들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 영화를 제작할 때 어려움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인터뷰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들에게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한테도 가슴 아픈 일이고 나 역시 괴롭다.

사이트 케도 감독은 자신을 인권활동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0년 이상 계속되는 내전의 참상을 고발하고 전

쟁을 반대하는 인권운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남부레바논에서 북부레바논 전역을 횡단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이를 필름에 기록하기도 했다. (심보선)

"네티즌 눈과 귀 막는 조치"

인터넷방송단체들, '청춘' 구속 규탄

인터넷방송국 '청춘' 관계자들의 구속과 관련해, 노동문화정책센터 등 8개 인터넷방송운동 단체들은 26일 성명을 발표, "관련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0월 26일자).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네티즌들의 눈과 귀를 막고 혀를 자르려는 짓거리"이며 "이는 극소수 공안경찰의 압력과 공안세력의 안위를 위해 진보적 활동가들의 청춘과 직업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진보적 인터넷 미디어운동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24일 연행된 세 사람 가운데 김유경 씨는 26일 석방됐으며, 윤여창 대표와 심봉구 씨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창조)

<만화사랑방> 한 주 쉽니다

노동시간 감축 핑계, 근기법 개악 우려

민주노총, 노사정위 합의안 비판

지난 24일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동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곧 해결될 것처럼 비춰진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정리하고 도입에 이른 제2의 폭거"로까지 비판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견해를 소개한다. (이창조)

◎정부와 사용자단체 주장대로 월차·생리휴가제를 폐지하면 노동시간은 그만큼 늘어날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휴가를 뺏는 것이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연 24일의 유급휴일을 잃게 돼 이것만으로도 주5일 근무제는 실시하나마나 한 셈이 된다.

◎사용자 단체는 잔업이나 야근을 줄이기 위해 현행 50%의 초과근로 할증율을 낮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과근로는 노동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생산물량이나 업무량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증율을 낮추면 당연히 사용주는 초과근로를 늘리게 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농장주, 대체인력 구하라며 임금 뺏어

노동부와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방향을 밝힌 가운데에도,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국내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농장(농장주 이동익)에서 일했던 미등록노동자 프리안타(가명, 스리랑카)·널미니(가명) 부부는 하루 14시간 근로에 두 사람을 합해 13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다. 이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못 견디고 8월부터 퇴사를 요청했으나, 농장주는 이들에게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프리안타 부부는 9월 29일 대체인력을 구한 뒤 농장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새로 고용된 2명이 일하기를 거부하자 농장주는 프리안타 부부의 퇴사를 막고 임금 120만원을 빼앗은 채 다시 농장을 시켰다. 그 과정에서 농장주는 지역의 경찰관을 대동한 가운데 "일 안하고 가면 집(스리랑카)으로 보내 버리겠다"고 위협했으며, 경찰관은 수감까지 꺼내들며 이를 거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안양 전진상 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관장 이금연, 아래 이주노동자의 집)이 지난 5일 청평농장을 방문, 프리안타 부부를 직접 데리고 나오면서 확인됐다.

프리안타 씨는 27일 경기도경 감찰부 직원에게 "빼앗긴 임금 1백20만원, 오토바이 2대,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임금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0년 10월 28일(토)

제 17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농장주는 지난 26일 이주노동자의 집 활동가에게 경찰관을 대동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국사람이 왜 외국사람편을 드느냐"고 욕박지르기도 했다.

한편, 이주노동자의 집 활동가 박정관 씨는 "미등록노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본국으로 보내 버리겠다는 말"이라며 "업주들은 이런 악습을 파악하고 저임금과 강제근로를 통해 돈벌이를 해왔다"고 말했다. [심보선]

다. 또 "경찰이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다.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임박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미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화한 데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마당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은 더 이상 어떤 핑계로도 미룰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민주당이 내놓을 개정안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여당이 내놓았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2조(반국가단체의 정의)의 변경과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의 존속이었다. 이는 실리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묶어둘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인 한편, '내부의 비판세력'을 처벌할 수단만큼은 계속 남겨두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7조3항만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안세력들의 심리를 간파해선 안 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95% 이상이 7조(찬양·고무 등)의 적용을 받았으며, 7조 가운데에도 3항에 의한 구속자가 75%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에서 보듯, 7조3항을 존속시키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목에 가시를 남겨둔', 핵심을 비껴간 기만적인 개정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7조만이라도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의 인터넷방송국 '청춘' 사건은 국가보안법 7조의 위력을 새삼 드러내는 한편,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한 공안당국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다.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한총련을 알렸다는 사실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등)가 될 수 있는 배경엔 결국 한총련(이적단체)의 존재가 있었다. 공안당국은 이런 류의 사건들을 계속 적발해 세상에 알림으로써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고 국가보안법 개정조차 저지하기 위한 총력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현 정권이 수구공안세력의 저항을 핑계로 국가보안법을 어영부영 개정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지으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시 역사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7조 만큼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땅에서의 이주노동자 존재지반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당정협의안에서는 "연수생제도가 편법적인 인력정책이었다"는 고해성사를 하며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노동 3권"도 인정한다고 밝힘으로써 "노사불안에 의한 사회혼란 야기"를 우려한다는 중기협측이 더욱 강하게 '연수제도 유지' 입장을 외치고 있다.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문제와 노동자성 인정으로 인한 고용비용 상승 우려'가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진영'의 외피를 장식하고 있지만 실은 연수생 장사로 연간 수십억대 이익을 챙기는 노예장사꾼 중기협의 잇권이 '고용허가제 반대'의 실제 이유이다. 중기협의 로비와 감압에 의해 중소기업주들의 이해가 가리워져 있을 뿐이다. 중기협 하에 진행하던 도입과 관리 권한(그리고 잇권)이 노동부로 이월되는 것이 '현행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핵심적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 일각에서는 연수생제도가 사라지는 것에 의의를 부여하고, 중기협 등 반대세력의 거센 반발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것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연수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연수생제도 이후의 대안으로서 제출된 정부 법안이 과연 차선이라도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기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면 과연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 3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고용주가 고용과 해고의 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고'를 '고용중지'로 명목시키고 '고용중지 또는 고용계약 연장을 이유로 집단행동 금지'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다시피 노동 3권의 핵심은 '노조 결성'이다. 그런데 누군가 노조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또는 공장 밖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사회불안세력'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안다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바로 '고용중지'처분을 받을 것은 뻔하다. 그 사람은 정부의 법률안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추방"된다. 부당해고라고 인정받기 위한 어떠한 법률적 구제를 받을 겨를도 없이 짐을 챙기고 떠나야 한다.

이주노동자 투본은, 정부의 고용허가법안은 고용허가제 중에서도 최악의 밑그림이라는 인식하에 법률안의 제목만 바뀔 뿐, 연수제도가 가졌던 억압과 통제의 장치들이 온존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노동 3권을 제약하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장치로 점철된 정부 법안을 거부하는 싸움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주체를 조직하는 것과 고용허가법안 통과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될 현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안에" "법안 통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제, 고용허가제 찬/반 양론으로 단순도식화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내용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실천적 대응을 내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땅에서 최하층의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가 우리의 동지로서 어깨거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 '연수제도 완전 폐지와 노동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대위'구성에 여러분의 힘찬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집행국장 이윤주

인권영화제 상영일정

10월 28일(토)

- ◎ 법정대 강당
 - 1:00- 2:20 세계은행 부수기
 - 2:30- 4:20 평행선***
 - 4:30- 6:20 바그다드의 비가***
 - 6:30- 7:30 마리아나의 눈동자
- ◎ 법학관 405호
 - 1:00- 2:20 나는 행복하다***
 - 2:30- 3:30 사라 바트만의 생애
 - 3:40- 4:30 덕테이터
 - 4:30- 5:00 판단
 - 5:10- 6:20 데일리 네이션
 - 6:30- 7:30 <페넬토론> '범죄보도와 인권'
- ◎ 학생회관 씨네마텍
 - 1:00- 2:15 세계은행 철폐
 - 2:20- 3:50 평화의 시대***
 - 4:00 - 5:30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투쟁
 - 5:40- 6:40 카호 오라이
 - 6:50- 7:40 <페넬토론> 미군기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 이화광장(야외상영)
 - 7:40- 10:00 대지의 소금, 처벌에 맞춘 범죄

10월 29일(일)

- ◎ 법정대 강당
 - 1:00- 1:20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 시리즈(애니메이션)
 - 1:30- 2:50 엄마와 삼 그늘
 - 3:00- 5:20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
 - 5:30- 7:10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
 - 7:20- 9:40 대지의 소금, 처벌에 맞춘 범죄
- ◎ 학생회관 소극장
 - 1:00- 3:20 인간의 시간***
 - 3:30- 6:10 바람과 함께 오고간다
 - 6:20- 7:15 베트남; 마지막 전쟁
 - 7:20- 8:35 제9집안 찬반 투표
 - 8:40-10:00 <페넬토론> 동성애자의 인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월 30일(월)

- ◎ 법정대 강당
 - 5:00- 7:40 4월 9일***
 - 7:50- 8:50 버림받은 사람들
 - 9:00- 10:00 교향
- ***는 감독과의 대화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체 게바라'

제5회 인권영화제의 서막이 올랐다. 27일 저녁 8시30분, 이화관에서 시작된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 불리비아 일기'(리처드 던도, 94분)는 1천5백여 관객을 사로잡았다. 인권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35마리 필름으로 관객을 만난 '체게바라'는 이화관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가슴에 '불빛이 되었다.' 어떤 이는 냉정할 정도의 사실만을 쫓은 리처드 던도에 탄복하고, 또 어떤 이는 체 게바라의 이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했다.

7시10분, 이대 풍물패의 등장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흥석천 씨가 사회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어둠 속에서 세상으로 걸어오는 흥 씨는 "인권영화제에 관심이 없었지만, 올 인권영화제는 나에게 아주 뜻 깊다"는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서준식 인권영화제 총감독은 개막선언에서 제5회 인권영화제도 '불법'임을 상기시키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서 총감독은 "사람을 짓누르는 불법은 이를 답습하거나 굴종할 경우 언제나 불법으로 남게 된다"며, 사전심의 거부는 "인권의 감성과 원칙을 깎아뺏개는 법, 제도 그리고 관행에 대한 도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5시부터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 시리즈'(15분)와 '스코츠보로 : 미국의 비극'(다니엘 앤커/비릭 굿만, 84분)이 상영됐다.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 시리즈'는 29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재상영되고, '스코츠보로 : 미국의 비극'도 28일 오후 1시 학생회관 시네마텍에서 재상영된다.

28일(토)에는 법정대 강당, 법정관 405호, 학생회관 시네마텍에서 13작품이 상영되며, 저녁 7시40분부터는 개막작이 상영된 이화관에서 '대지의 소금'(허버트 비버만, 94분, 극영화)과 '처벌에 맞춘 범죄'(바바라 모스

/스테판 맥, 46분, 다큐멘터리)가 연이어 상영된다.

냉전의 극성기인 1950년대에 매카시즘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만든 '대지의 소금'은 극장 상영을 거부당했지만, 훗날 미국 연방 의회 도서관이 선정한 '후세에게 물려줄 소장영화 100편'에 뽑혔다. '대지의 소금'은 1950년에 발생한 뉴멕시코주의 아연광산 파업을 소재로 하고 있다. 파업과정에서 인종, 계급, 여성문제 등 당시 미국사회에 잠복해 있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돌출하며, 지

리멸렬해지는 파업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광부의 아내들. 이 영화는 계급과 성을 아우르는 모든 '평등'에 관한 영화로, 백인 보안관·광산회사 간부·주인공 아내 배역을 제외하고는 파업에 참가한 광산노동자와 아내들이 출연한다.

또 '처벌에 맞춘 범죄'는 '대지의 소금'이 만들어진 배경과 당시 정치적 분위기를 조사하는 다큐멘터리로, 50년대 매카시즘을 풍부한 자료화면으로 전하고, 영화에 출연했던 광산노동자와 그 아내들의 회고담을 듣는다.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제1회 인권영화제를 이화여대에서 하고 5회 째를 맞아 다시 이대에서 영화제를 하게 됐습니다. 1회 때 불법의 덫에 걸려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오늘 5회 영화제는 감개무량합니다.

1회 때에 비해 법, 관행 그리고 인식이 바뀌어 올리는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올해의 영화제도 불법입니다. 사전심의 거부하는 것은 인권단체로서, 인권을 갈구하는 사람으로서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인간을 억누르는 불법은 언제든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을 답습, 굴종할 경우 불법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불법에 저항할 때, 도전할 때만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권은 화석화된 개념이 아니라 살아 숨쉬게 되며 그 폭과 깊이가 확장됩니다.

인권영화제는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거부합니다. 화려함도 거부합니다. 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소수자와 함께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인권영화제는 오라를 추구합니다. 살벌한 생존경쟁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상업적, 말초적 즐거움보다는 인간의 존엄을 배우는 오라이 되길 바랍니다. 인권영화제 상영작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깨닫고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권의 감성과 원칙을 깎아뺏개는 법, 제도 그리고 관행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를 보게된 흥석천 씨는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흥석천 씨처럼 인권영화제는 부조리한 관행과 법에 인권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하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인권침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그리고 마음마저도 억압하는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내 자신 보안관찰법의 테두리에서 나의 일상은 합법적으로 감시됩니다.

인권영화제에 도움을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영화제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활동가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후원금을 내주신 많은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아름다운 장소를 빌려준 이화여대에도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0월 31일(화)

제 17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롯데호텔 경찰투입, 노동부가 요청

김문수 의원, "노동부·검찰과 사전공모"

롯데호텔 파업 사건에 대한 공안기관의 개입사실이 지난 20일 노동부 국정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28일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측이 홈페이지(www.kimmoonsoo.pe.kr)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당시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공안기관에 노동탄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의원측은 "노동부가 '불법파업 주동자 의법조치'라는 이름의 6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사측의 고발이 없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8일 열린 공안대책서울협의회에서는 검찰·경찰·국정원·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직장정보노조와 전국의료보험노조 총파업 동향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으며, 6월 20일 검찰과 노동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롯데호텔 노조 파업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롯데호텔과 사회보험(직장의료보험과 전국의료보험)의 통합 후의 이듬노조에는 이후 6월 29일과 7월 1일 경찰력이 투입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공안대책협의회가 적극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행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과 노동부의 공모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 국정감사 당시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노동문제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더라도 노동부가 불참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문수 의

원측은 "공안대책협의회가 부활돼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7월 10일 열린 공안대책서울지역협의회에 참석한 검찰, 경찰, 노동부 관계자는 '금융산업 노조의 총파업시 파업주동자에 대한 세부수사 계획'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조)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재정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통신공간에서의 검열반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통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자율등급제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들(미래연대 소속)과 정통위 소속 의원들과는 이미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인터넷사이트에 등급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자유라는 인터넷의 이념에도 반하고, 실효성도 전혀없는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접근"이라며 "이러한 발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인터넷등급제라는 이름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며 정부의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정통위 간사)도 지난 18일 열린 당정책회의에서 "내용등급제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라는 불신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이상희 정통위 위원장(한나라당)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궁극적으로 유해정보는 사용자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제한, 정보교육상의 자율과 창의성 상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10월 23일부터 정통위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돌아가며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온라인 통제 3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온라인시위는 11월 7일까지 계속된다(관련기사 본지 10월 20일자 참조). (이창조)

■ 관련정보 freeonline.jinbo.net

오늘의 인권영화제

◎ 데모크라시 에더봉(국내작)

: 오후 5시-7시20분
- 상영후 '감독 및 버마민족민주동맹 관련자' 초청 대화

◎ 보이지 않는 전쟁(국내작)

: 오후 7시30분-9시30분
- 상영후 '감독과의 대화'

10월 31일(화)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올해 들어와 과거청산에 관한 몇 가지 규범이 계속 관심을 끌고 있다. 제4·3, 의문사,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사의 어두운 그늘을 치유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면서 민주화운동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생각 하나를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들은 물론 이 법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 법이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정의해 놓지 않았다는 점, 특정한 세대의 활동가들을 배제하였다는 점, 또 특정한 정부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요구를 아예 면제시키고 있다는 점 등등이다.

이 법률이 왜 한국관 인권선언으로 상충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해 보자. 인권선언이 되려면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범죄를 중심개념으로 놓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어디에도 국가범죄는 암시되지 않는다. 국가는 원래 정의로운 것인데, 그것을 더 정의롭게 하려는 시도가 민주화운동이라는 식이다. 국가권력대 민주화운동의 관계가 '부정 대 정'이 아니라 '정 대 정'의 관계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법은 국가가 바로 범죄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법의 원칙상 희생자들은 부당하게 희생당했다는 점만으로 구제받아야 하는데도, 이 법은 무모하게 피해자의 행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책임을 희생자에게 다시 전가하고 있다.

또 민주화운동을 전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없지만 부당한 국가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이 법의 바깥에 놓이게 된다. 인권은 시체맡로 서푼짜리 인생들의 권리일 때에만 참으로 인권인 것이다. 민주화운동법은 사회의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라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평등한 안목을 가져야만 한다. 예를 들어 세계인들은 히틀러에 대하여 쿠데타를 피하다 사형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하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수용소에서 백없이 죽어간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상해주기를 요구해 왔다. 희생자들에 대한 도덕적 공훈심사가 아니라 부당한 희생자라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민주화운동법은 국가범죄와 인권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함께 자리한 사람들은 인권의 보편성 그리고 국가범죄 개념에까지 도달해서 이를 참다운 인권법으로 완성할 책무를 지고 있다. 국가범죄로 인한 희생자 모두를 구제하는 일반법으로 고양되게 말이다. 그럼에도 이 법을 마치 악마가 성경 보듯이 해석하거나 낱낱의 법조문을 꼬치꼬치 따지려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화있을지이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1. 장애인 죽음으로 내몬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월 21만원이었던 생활보조금이 오히려 6-7만원대로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비판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 초중고 강사 노조결성 후 교섭타결
계약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중고 강사들이 최초로 노조 결성 후, 서울 미술고등학교와 교섭타결 이뤄내(10/25)

3. 인터넷에도 '공안 망령' 등장
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10/24)

4. 정부, 해외 반체제 인사 귀국 허용
정부가 이유진(프랑스 거주)씨 등 해외 반체제인사에 대해 소명절차 없이 귀국하는 것을 허용기로 한 사실 밝혀져(10/26)

5. 재앙을 물고다니는 주한미군
71년까지 18년간 미군 유류저장기지로 사용됐던 인천 연수구 문학산 기슭에 지금도 여전히 기름이 떠다니는 등 오염실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녹색연합, 당국이 미군의 기름유출을 철저히 은폐했다고 주장(10/23)

6. 법원, '비정규직 퇴직금차별 부당'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 부장판사), 롯데호텔 직원 111명이 낸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이 동일 사업장 내에서의 직종·직위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수제(단순히 근무연수에 월평균 임금만을 곱해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를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10/23)

7. 매매춘 희생, 국가가 책임져라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참사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이 불법감금과 단속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시를 상대로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수지로 본 인권

과로사 노동자, 해마다 늘어나
산재 판정을 받은 과로사 인원이 98년 239명에서 99년 325명, 올 6월말 현재 20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환자 등 자살한 노동자도 98년 5명에서 99년 14명으로, 올 8월말까지 12명으로 자살환자 수도 증가추세(10/24, 근로복지공단 국감 자료)

<제5회 인권영화제 둘째·셋째날 표정>

'대지의 소금'은 이화여대에 있었다

28일 저녁 8시. 이화광장에서는 '대지의 소금'과 '처벌에 맞춘 범죄'가 짙은 날씨에도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영됐다. 메카시즘에 덮여 걸린 미국 영화제작자들이 1950년대 뉴멕시코주 아연광산 파업을 그린 '대지의 소금'은 탄광노동자와 그 아내들의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노력을 잘 보여주었다.

전영화된 노동자의 삶과 투쟁은 시종일관 관객의 웃음을 불러 일으켰고, 뒤이어 상영된 '처벌에 맞춘 범죄'는 '대지의 소금'을 제작하는 것이 왜 인권을 향한 여로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제작과정, 메카시즘의 광풍에 날리지 않고 메카시즘이 적대시하는 노동자의 투쟁을 오히려 고무·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시간 정도 연속으로 상영된 두 가지 작품을 본 이상동(34) 씨는 "쨍쨍한 날씨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관람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작품을 야외에서 같이 호흡하며 관람한 사람들은 행운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체 게 바라'와 '대지의 소금' 중 한가지만 볼 수 있어 고민하다 '대지의 소금'을 봤다는 상계동의 정 아무개 씨는 "인간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나오는 땀이 소금이고, 평등함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금"이란 대사처럼 이 영화를 본 4백여 관객이 소금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동성에 패널토론 열기 후관... "동성에 편견 지우세요"

한편 29일 8시 40분 학생회관 소극장에서는 2백여 명이 참가한 '동성애자의 인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한채윤 <버디> 편집장, 정기상 '동성애자 인권연대' 활동가, 흥남영 웹진 <니아까> 대표 등은 동성애를 둘러싼 일반적 편견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반론을 폈다.

동성에 문제를 다룬 작품 '제9업안 찬반투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동성애자들은 프리섹스 주의자 △동성애는 전파된다는 편견 등에 대해,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흔히 말하는 이성간의 사랑에서 이성이 동성으로 바뀐 것 뿐이며 △동성애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이성애든 동성애든) 성 정체성을 더 빨리 찾아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론했다.

터키대사관측 인사들, 감독과 설전도

28일 법정관 405호에서는 '범죄보도와 인권', 학생회관 씨네마텍에서는 '미군기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두 패널토론은 30-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져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어떤 관객은 "비교적 많은 관객이 든 작품 후에 패널토론을 진행하지 못한 진행상의 실수가 보인다"며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을 인권의 시각에서 밀도 있게 접근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29일 오후 3시 법정대 강당에서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 상영에 이어 진행된 케빈 맥키히턴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쿠르드노동당(PKK)의 테러행위를 놓고 터키 대사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감독 간에 격론이 오고갔다. 쿠르드노동당과 쿠르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인권피해자로 그리고 있다는 일방적인 시각에 대해 지적하자 케빈 감독은 "쿠르드노동당이 테러를 자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터키는 조직적으로 테러, 고문을 하고 있으며 수천개의 쿠르드 마을을 파괴한 것도 사실이다"고 응수했다.

한편 29일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던 '바람과 함께 오고 가다'는 자막작업이 지연돼 상영되지 못하고, '덕테이터', '판단'이 대신 상영되었다. '바람과 함께 오고 가다'는 폐막일(11/1) 오후 5시 법정관 405호에서 상영된다.

<상영일시·장소 변경>

'바람과 함께 오고 가다'

일시 : 11월 1일 오후 5시 장소 : 이화여대 법정관 405호